

제5장

생활환경

- 제1절 주거
- 제2절 도시재생
- 제3절 스마트시티
- 제4절 상하수도
- 제5절 보건의료
- 제6절 사회복지
- 제7절 인구정책
- 제8절 여성가족
- 제9절 교육
- 제10절 체육

제5장

생활환경

제1절

주거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현황 분석

● 주택 보급률 추이

- 전국과 경남의 주택 보급률의 차이가 2010년 3.9%p에서 2018년 5.9%p로 벌어졌음
- 특히, 경남은 2018년에는 110%를 넘어 양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경남의 주택 공급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양적 공급이 충분하고, 주거의 질적 측면에서의 관리가 필요함

(단위 : 가구, 개, %)

〈표 4-5-1〉

전국과 경남의
주택 보급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가구 수	17,655.7	17,928.1	18,209.2	18,499.6	18,800.0	19,111.0	19,367.7	19,673.9	19,979.2	1.6
전국 주택 수	17,738.8	18,082.1	18,414.4	18,742.1	19,161.2	19,559.1	19,877.1	20,313.4	20,818.0	2.0
보급률	100.5	100.9	101.1	101.3	101.9	102.3	102.6	103.3	104.2	0.5
가구 수	1,155.3	1,175.0	1,195.2	1,215.8	1,236.9	1,258.5	1,273.5	1,293.0	1,306.4	1.5
경남 주택 수	1,206.6	1,227.2	1,247.1	1,276.8	1,308.2	1,338.5	1,358.4	1,404.0	1,438.8	2.2
보급률	104.4	104.4	104.3	105.0	105.8	106.4	106.7	108.6	110.1	0.7

주 : 등록센서스방식 적용.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 경상남도 유형별 주택 보급 추이

- 경남 유형별 주택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비중이 59.2%(2018년 기준)로 많이 증가하였으며, 단독주택의 비중도 34.2%로 전국 평균(22.4%)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을 나타냄
 -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의 주택 유형의 비중이 다소 낮고, 기타의 비중이 높음

〈표 4-5-2〉

전국과 경남의
유형별 주택 보급 추이

(단위 : 개, %)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계	12,494,827	13,883,571	16,367,006	16,692,230	17,122,573	17,633,327	2.5
단독	3,984,954	3,797,112	3,973,961	3,967,776	3,963,072	3,948,984	-0.2
전국 아파트	6,626,957	8,185,063	9,806,062	10,029,644	10,375,363	10,826,044	3.4
다세대	1,684,563	1,750,116	2,383,439	2,493,252	2,575,419	2,648,549	2.8
기타	198,353	151,280	203,544	201,558	208,719	209,750	1.0
계	875,815	968,582	1,134,738	1,151,057	1,193,912	1,226,708	2.6
단독	388,402	377,242	416,364	418,406	419,772	419,628	0.3
경남 아파트	424,577	534,417	641,589	654,679	694,326	726,589	4.2
다세대	46,251	45,432	60,645	61,849	63,076	63,604	1.7
기타	16,585	11,491	16,140	16,123	16,738	16,887	1.5

주 : 주택을 대상으로 집계되었고 빈집이 포함되어 다세대는 연립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주택총조사.

● 경상남도 시군의 유형별 주택 보급현황

- 유형별 주택의 분포를 살펴보면 시부는 아파트의 비중이 6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군부는 단독주택이 75.2%로 높게 나타나 시부와 군부의 유형별 주택의 특징이 구분됨
 - 시부 중 단독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은 밀양시가 59.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사천시 44.5%, 통영시 38.1%, 진주시 35.0% 순으로 나타나 도농 통합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 군부에서 아파트 비중은 함안군이 3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거창군 29.8%, 고성군 21.1%, 창녕군 20.0% 순으로 나타나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이 비교적 활발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시부에서는 아파트 공급에 따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군부는 늘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단독주택지역(귀촌단지 등)과 빈집 등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주택 공급의 확대 이면에는 노후주택의 방치 등 빈집의 발생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시부와 군부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빈집문제의 접근 방법이 달라짐

(단위 : 호, %)

〈표 4-5-3〉

경남 시군의
유형별 주택 보급현황

구분	합계	단독		아파트		다세대		기타	
		호수	비중	호수	비중	호수	비중	호수	비중
경남	1,226,708	419,628	34.2	726,589	59.2	63,604	5.2	16,887	1.4
시부	1,005,279	253,004	25.2	685,474	68.2	53,642	5.3	13,159	1.3
창원시	343,978	78,507	22.8	242,745	70.6	18,768	5.5	3,958	1.2
진주시	118,859	41,565	35.0	71,581	60.2	3,412	2.9	2,301	1.9
통영시	51,096	19,461	38.1	28,248	55.3	2,431	4.8	956	1.9
사천시	46,294	20,592	44.5	22,157	47.9	2,539	5.5	1,006	2.2
김해시	173,974	27,562	15.8	131,217	75.4	13,570	7.8	1,625	0.9
밀양시	46,779	27,872	59.6	15,725	33.6	2,318	5.0	864	1.8
거제시	97,425	22,625	23.2	66,750	68.5	6,649	6.8	1,401	1.4
양산시	126,874	14,820	11.7	107,051	84.4	3,955	3.1	1,048	0.8
군부	221,429	166,624	75.2	41,115	18.6	9,962	4.5	3,728	1.7
의령군	13,435	11,397	84.8	1,243	9.3	644	4.8	151	1.1
함안군	28,145	15,540	55.2	11,114	39.5	1,053	3.7	438	1.6
창녕군	27,574	19,505	70.7	5,512	20.0	2,208	8.0	349	1.3
고성군	23,918	16,961	70.9	5,057	21.1	1,476	6.2	424	1.8
남해군	22,473	19,482	86.7	1,877	8.4	627	2.8	487	2.2
하동군	20,487	16,992	82.9	2,420	11.8	709	3.5	366	1.8
산청군	16,688	14,696	88.1	1,307	7.8	335	2.0	350	2.1
함양군	18,272	14,556	79.7	2,782	15.2	605	3.3	329	1.8
거창군	27,188	17,440	64.1	8,102	29.8	1,169	4.3	477	1.8
합천군	23,249	20,055	86.3	1,701	7.3	1,136	4.9	357	1.5

주 : 주택을 대상으로 집계되었고 빈집이 포함되어 다세대는 연립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주택총조사(2018년 기준)

● 주거 점유 형태별 변화

- 주택의 점유 형태에 따라서는 시부와 군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부보다 군부의 자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시부 중 밀양시의 자가 비중이 77.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남 전체 임대 가구는 29.4%이며, 양산시가 3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다음으로 창원시가 35.4%, 진주시 33.5%, 김해시 32.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경남 동부(김해, 양산), 중부(창원), 서부(진주) 등 권역별 임대시장의 다양화 전략이 필요함

〈표 4-5-4〉

경남 시군의
점유형태별 주거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합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경남	1,258,243	836,970	66.5	101,799	8.1	267,489	21.3	51,985	4.1
시부	1,055,320	667,411	63.2	96,349	9.1	248,080	23.5	43,480	4.1
창원시	391,279	236,941	60.6	41,842	10.7	96,567	24.7	15,929	4.1
진주시	133,507	84,588	63.4	12,662	9.5	31,988	24.0	4,269	3.2
통영시	53,244	36,033	67.7	2,987	5.6	11,956	22.5	2,268	4.3
사천시	44,503	30,535	68.6	2,893	6.5	8,603	19.3	2,472	5.6
김해시	186,473	118,963	63.8	17,395	9.3	43,091	23.1	7,024	3.8
밀양시	43,124	33,302	77.2	1,318	3.1	6,912	16.0	1,592	3.7
거제시	93,977	59,630	63.5	6,477	6.9	20,578	21.9	7,292	7.8
양산시	109,213	67,419	61.7	10,775	9.9	28,385	26.0	2,634	2.4
군부	202,923	169,559	83.6	5,450	2.7	19,409	9.6	8,505	4.2
의령군	12,173	10,382	85.3	262	2.2	1,035	8.5	494	4.1
함안군	26,729	20,901	78.2	1,059	4.0	3,577	13.4	1,192	4.5
창녕군	25,984	21,231	81.7	991	3.8	2,703	10.4	1,059	4.1
고성군	22,241	18,010	81.0	439	2.0	2,523	11.3	1,269	5.7
남해군	19,672	16,881	85.8	378	1.9	1,729	8.8	684	3.5
하동군	19,313	16,796	87.0	352	1.8	1,384	7.2	781	4.0
산청군	14,997	12,880	85.9	363	2.4	1,023	6.8	731	4.9
함양군	16,676	14,164	84.9	324	1.9	1,545	9.3	643	3.9
거창군	24,719	20,229	81.8	998	4.0	2,709	11.0	783	3.2
합천군	20,419	18,085	88.6	284	1.4	1,181	5.8	869	4.3

주 : 월세는 보증부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를 합산한 값임.
 자료 : 경상남도, 제58회 통계연보(2015년 기준).

● 미분양주택 현황

- 2019년 12월 기준으로 경남의 미분양주택은 12,269호이며, 전국 대비 25.7% 수준임
- 산업경기 침체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경남의 10만호를 넘어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이며, 정부 차원에서의 주택시장 관리대책이 마련이 필요함
- 3년 주기로 주택시장 수요가 관리되는 것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양적 수요 관리가 필요함

〈표 4-5-5〉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국	88,706	69,807	74,835	61,091	40,379	61,512	56,413	57,330	58,838	47,797
수도권	29,412	27,881	32,547	33,192	19,814	30,637	16,689	10,387	6,319	6,202
지방	59,294	41,926	42,288	27,845	20,132	30,859	39,724	46,943	52,519	41,595
경남	4,780	6,375	9,558	4,909	2,962	3,411	8,014	12,088	14,147	12,269
(비중)	(5.39)	(9.13)	(12.77)	(8.04)	(7.34)	(5.55)	(14.21)	(21.08)	(24.04)	(25.67)

주1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을 받아 건설 중이거나 건설된 전국의 미분양 주택(준공 전·후)을 의미.
 주2 : 해당연도의 12월을 기준으로, 자료는 매월 생성됨.
 자료 : 국토교통 통계누리, 미분양주택 현황보고

2) 여건 분석

● 주택 공급의 양적 수요 관리 필요

- 2017년 이후 경남의 주택 공급은 양적인 측면에서 안정권에 있음
- 2019년 전국 최대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는 등 양적 수요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인구 감소 및 저성장 기조 대응

- 저출생과 고령화의 심화는 인구 축소 현상으로 이어지며 주택 공급의 한계가 발생함
- 국가 및 지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을 고려한 포괄적인 주거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품격 있고 건강한 정주 여건 확보

-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절약하는 정주 여건 확보가 필요함
-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 등 도민에게 품격 있는 정주 여건 제공이 필요함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미래 트렌드

● 주거지 노후화 심화

- 노후주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택 개량이나 주거지 재생(정비)의 수요가 증가할 것임
- 장래인구 성장이 둔화하는 국면에 있어 총괄 주택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리라고 전망되며,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주거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산발적으로 분포된 노후주택과 일부 구도심을 중심으로 집중된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도시성장관리 한계와 난개발 심화

- 소규모 택지 개발을 포함한 난개발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초지자체와의 도시성장관리에 관한 상호 간의 합의가 필요함
- 확장형 사업 추진이 한계가 있으며, 수요 관리를 위한 경남과 시군의 협력이 필요함
- 재개발·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창원과 같은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기존 주거지 외의 외곽의 무분별한 주거지 개발로 인해 원도심이나 기존 주거지의 쇠퇴 현상이 심화함
- 산 중턱 등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택지 개발을 통해 전원 단지 조성이 이뤄지는 실정임

● 1인가구 수요 증가

- 지역의 특성에 따라 1인가구의 특성 다르게 나타나며, 도시지역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 가구의 1인가구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농촌지역은 독거노인 등의 수요가 높음
- 반면, 도시지역도 일부 도심 취약지역(일명 달동네)에서 노령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주거 여건 개선이 필요함

2) 경남 미래변화 전망

● 인구 감소 시대의 도시성장관리

-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구 구성원의 형태가 다양해짐
-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소멸 등의 화두와 함께 도시공간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함
- 특히, 창원, 진주, 김해 등 경남의 권역별 중심도시들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도시와 농촌의 인구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

– 생활 여건이 양호한 도시지역의 인구는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감소 현상이 둔화할 것임

● 노후주택과 빈집(공실)의 관리

- 기존 주거지의 노후주택뿐만 아니라 수요(인구)감소로 발생한 빈집(공실)의 증가하는 양상임
- 도시지역은 구도심과 도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함께 노후주택과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인구 이동과 감소 현상으로 인해 계속 빈집이 발생할 것임

– 농촌과 도시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양적 수요 관리뿐만 아니라 질적 수요 관리가 필요함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낡은 농가 주택의 수요보다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주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장년층뿐만 아니라 '반농반X'와 같은 형태로 청년층의 귀농·귀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정주 여건의 통합적 관리

-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달리 좁은 골목길과 낡은 담장 그리고 방치된 빈집 등이 밀집된 노후 주거지나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재난·안전뿐만 아니라 생활편의기능의 증진이 필요함
- 단순히 민간의 개발 수요에 따라 도시를 무분별하게 확장할 것이 아니라 적정 인구 수준에 맞춰 공공행정 및 생활편의기능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해야 함

– 최저 주거기준 등 생활 여건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적정한 정주 여건 관리체계 마련**
 - 도시와 농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 여건 관리체계를 마련함
 - 도시기능(기반시설)이 충족하는 수준을 평가하고 안정적 도시공간구조를 확립함
 - 생활SOC 복합화,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체계를 마련함
- **맞춤형 주택 공급대책 마련**
 - 신규 택지 개발을 지양하고 재건축·개발 등 대규모 택지 공급을 관리함
 - 인구구조의 특성과 전망을 바탕으로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함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함
- **포용적 주거 여건 정착**
 -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주택 공급을 추진함
 -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제공함
 -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경남 맞춤형 입주기준을 설정함

2) 추진전략

● 주거 부문 핵심지표

〈표 4-5-6〉

주거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자가 보유율	66.5%	70%	80%
주택 만족도	3.01점	3.4점	3.8점
주거환경 만족도	2.95점	3.2점	3.6점
공공임대주택 수	78,153호	100,000호	150,000호

(1) 적정한 정주 여건 관리체계 마련

- **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별 정주 여건 개선**
 - 상대적으로 청년이 많은 지역과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함
 - 사회적 이동에 따른 신규 주거단지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주택의 활용을 촉진함
- **안정적 도시공간구조 확립**
 - 교통, 생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의 분포와 기반시설계획 등이 연계함
 - 시군별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에 있어 기능(시설)과 공간을 고려하여 수립함
-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된 정책사업 발굴**

-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함
- 경남과 시군이 협력하여 지역별 주거취약지역의 관리체계를 마련함

(2) 맞춤형 주택 공급대책 마련

● 양적 주택 관리

- 신규 공동주택 조성,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 공급 관리체계를 마련함
- 도시계획위원회 등 현장실사, 인구 전망 등 양적 주택 공급에 관한 심의 기준을 마련함

● 질적 주거 관리

- 인구구조의 특성과 전망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함
- 시군의 정주 여건 분석과 함께 비도시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의 복합적 활용을 촉진함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순차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함
- 경남형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산·학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함

(3) 포용적 주거여건 정착

●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함
-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의 주거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공동·혼 등 새로운 유형의 주거를 확대함

● 사회적 약자 주거 안전망 확립

- 최저 주거기준 개편, 적정 주거기준 도입 등과 함께 적정한 주거생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
- 차상위계층 등 주거복지 대상의 수급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함

●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확대

- 주거급여 소득 기준을 상향하여 지원 가구를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을 확대함
-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지원 및 도심 내 비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확대 지원함

4. 추진시책

1) 계획적 관리체계 마련

(1) 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별 정주 여건 개선

● 도시지역 생활공간 연계형 주택 공급

- 도시 기능을 크게 생활공간과 정주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남의 경우 농업지역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상업지역, 대학가 등 대표적 생활공간과 연계된 정주공간 확보가 필요함
- 특히, 도시지역 대학생, 청년 등 사회초년생들의 안정적 주거환경 공급을 위해 생활공간에서 필요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이와 연계된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함
- 이를 위해 공공에서 기존의 주거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주거의 수요를 확인하고 기존 주택과 함께 신규 주택의 수요를 관리함

● 농촌지역 공동생활 거점공간 조성

- 상대적으로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과 도시의 주거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의 공동생활 거점공간을 조성함
- 공동생활 거점공간은 단순히 만남과 휴식의 공간도 되지만, 작은 일거리나 마을 회의 등을 위한 공간을 포함하며, 마을회관 등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
- 공동생활 거점공간은 건강관리 등 서비스공간뿐만 아니라 휴한기 또는 휴서기의 동안 공동으로 냉·난방을 활용할 수 있는 주거 기능을 포함하여 조성함
- 장기적으로 고령인구가 밀집된 대상 지역의 '공동 생활 홈'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함

●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주거 유형 확대

- 개인의 소득 수준이 다양한 만큼 주거에 대한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추진되던 전원택지 개념을 넘어 동호인택지, 은퇴촌 등 다양한 형태로 주거 수요가 확산됨
- 도시지역에서도 고층·고밀의 일률적 주택 수요뿐만 아니라 타운하우스 등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택 공급의 다양성 확보도 필요함
- 다만, 무분별한 주택단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공법이나 환경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새로운 유형의 주택 수요에 맞춤형 주거정책을 적용함
- 구릉지나 산지 등 경관이 뛰어난 지형에 택지를 개발할 경우, 경관, 환경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환경보전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심의를 진행함

(2) 안정적 도시공간구조 확립

● 시군별 주택 밀도계획 수립

- 경남의 시군별 특성과 장래인구 변화를 감안하여 주택 밀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택 수요의 유형을 관리함
-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중밀과 고밀이 혼재된 밀도에서 주거와 상업 기능이 융합될 것이며, 농촌지역은 저층·저밀의 주택 유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관리하기도 하지만, 지역의 경관과 미관의 관리에 활용될 것이며, 토지이용 강도(LUI; Land Use Intensity)를 관리하는 데 유용함
- 장래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에서 무분별한 확산보다는 압축도시(Compact City)의 개념을 도입하여, 토지이용 강도를 높일 지역과 낮출 지역을 구분하여 관리를 시행함

● 장래인구 추정을 고려한 권역별 거점 도시 지정

- 2020년 현재 인구는 약 336만명이며, 2030년경에는 25~35세 여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2050년경에 총인구는 276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⁴¹⁾
- 경남의 권역은 크게 동부(창원권역)와 서부(진주권역)로 구분되지만, 정주권역과 생활권역을 구분하면 인근 시군의 기능에 따라 세분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공공의료, 문화예술 등 권역 단위의 기능을 모든 시군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권역 단위로 구분하여 거점 도시로 지정된 시군을 중심으로 공급함
- 예를 들어 공공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서부권역의 진주시와 거창군이 확정되어 추진 중이며, 정주 여건 및 생활 여건 개선에 필요한 도시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거점 도시 선정이 필요함

● 경남 주택정보 관리체계 구축

- 공공의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의 정보를 포괄적으로 취합하여 제공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융합되도록 유도함
- 공공의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민간시장의 주택 정보를 포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임
- 특히 주택가격 정보는 시장의 담합 등으로 교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임대시장으로 확대되면 저렴한 도시 주택의 수요 관리가 가능함
- 경상남도과 시군에서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 정보를 취합하고 제공하여 실제 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을 구현함
- 서울시는 사회주택 플랫폼 운영을 통해 사회주택 추진에 필요한 빈집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고 있으며, 온라인상담, 사업컨설팅, 교육프로그램, 금융지원 등을 시행함

41) 경상남도(2019), 경상남도 미래 인구맵 설계용역.

(3)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된 정책사업 발굴 확대

● 생활SOC 복합화 확대 추진

- 보육, 복지, 문화, 체육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은 양적·질적으로 부족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낮은 수준이며, 최근 정부는 생활SOC 시설들을 복합화하고 있음
- 개별 시설을 자리 잡게 하는 것보다 복합화를 통해 지역에 부족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생활SOC 복합화는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시설을 구상하며 이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임
- 생활SOC 수요 관리를 위해서 시군 지역에 부족한 기능(시설)을 발굴하고 경남도 단위에서 시설에 대한 구상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임

●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컨설팅단 운영

-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나 농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매년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하여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남은 올해(2020년) 역대 최대 규모인 23곳이 선정됨
- 경남도내 주거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지역에서 발굴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정책의 틀을 마련함
- 현재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류, 현장, 종합 등 3단계의 평가를 시행 중이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경남도 차원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함

● 공기업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발굴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사업 추진을 제안함
- 경남도 차원에서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군 단위의 주거취약지역을 선별하고, 공기업에서는 이들 대상지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함
-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공기업 제안형 주거지 재생사업 등으로 추진하여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추진을 통해 각각의 시군 지역에서 특색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도록 유도함
- 2017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주거지 재생 유형의 추진이 가능하며, 2019년부터 시행되는 총괄 사업관리자⁴²⁾ 형태로 공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42) 「도시재정비 촉진법」 제14조의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 시행에 있어 지자체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를 의미하며, 2019년 12월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신규 제도로 도입되어 운영 중임.

2) 맞춤형 주택 공급대책 마련

(1) 양적 주택 관리

● 고밀·고층 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 지양

- 과도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현재 경남도의 미분양주택 공급이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고밀·고층 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을 지양해야 함
-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검증 과정을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함
- 고밀·고층 아파트 공급을 포함한 택지개발지구나 정비지구의 경우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개발 밀도를 산정하여 제시하도록 해야 함

● 재개발·재건축의 합리적 추진 여건 마련

-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경제적인 이익 추구의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 현실이며, 도시와 주변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미침
-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고층·고밀로 구성되어 교통 체증 유발, 경관 훼손 등에 영향을 미침
-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고밀·고층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보다 기존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 추진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도내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중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을 검토하고 사업 해제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함

● 주택 수요 검증단 운영

- 경남도는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도내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에 대해서 기술 자문을 실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72개 단지를 검수함
- 장기적으로 건설이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사전 수요의 관리도 필요하며, 지역대학, 연구기관, 업계 등이 참여하여 공동주택 공급에 대한 개발 수요를 관리해야 함

(2) 질적 주거 수요 관리

● 노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재건축 수요의 관리 측면에서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2014년, 주택법을 통해 수직증축 허용과 세대수 증가 등을 허용 범위를 확대함
- 장기적으로 낡은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수요의 상쇄방안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이는 ‘경남공동주택관리기술검수단’ 등의 조직에서 관리함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크게 증축형, 수선형, 맞춤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며, 주택의 상태에 따라 수직·수평 증축 등 사업성 분석을 통해 리모델링 모델을 제시함
- 장기적으로 노후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경남 공동주택 맞춤형 진단을 실행함

●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지 재생 확대

- 노후도가 심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가능한 도시재생의 유형을 분석하여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주거지의 경우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건축, 조경, 가로 등 환경적 요소를 결정하고 장기적으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보관을 통해 고밀도 개발사업 추진을 제어함
- 현재 추진 중인 주거지 재생, 일반근린 재생 등과 연계하여 경남도와 시군 차원에서는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지 재생 모델을 발굴하여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함
- 국비 공모 이전단계에서 커뮤니티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예비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임

● 정주 여건 모니터링단 운영

- 경남의 정주 여건을 파악하고 도시 및 농촌지역의 특성 맞춤형 정책사업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함
- 단순히 도시재생사업이나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을 위해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것이 아니라 경남도와 시군 단위의 정주 여건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목적임
- 이를 통해 빈집 수요 관리, 공·폐가 정비 등 공익사업과 연계 가능하며, 경남개발공사 등과 같은 공기업 참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기반시설 개선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함

(3)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경남형 사회주택 추진체계 확립

- 경남도는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20채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단계임
- 하지만 매년 반값 임대주택 공급 등 사회주택 개념의 맞춤형 주택 보급은 확대되고 있지만, 경남도와 시군의 여건이 행정을 중심으로 대상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수준임
- 빈집 소유자 및 수요자 발굴과 함께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

- 장기적으로 행정은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공기업 또는 민간(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중심으로 빈집을 수선하여 사회주택으로 운영하는 사업 추진 및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함
- 사회주택은 일반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의 하나로 주변의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형 임대주택의 일종이며, 운영 주체에 따라 공공 및 민간의 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음

● 사회주택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 공공을 넘어 민간의 영역이 참여하는 경남의 사회주택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행정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실수요 파악이나 사회주택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공기업에서도 공사 발주나 관리는 수월하지만, 사회주택을 운영·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서울시 등 국내에서 사회주택을 운영 중인 사례지역에서는 공공에서 지원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의 사회주택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공공의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단계임
- 경남은 사회적경제추진단, 사회혁신추진단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조직을 중심으로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주택 공급에도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주택 및 지역 관리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활성화

-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는 것만큼 사회주택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중요하며, 현재 경남에는 관련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전혀 없음
- 경남에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단 등 다양한 육성조직이 운영에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등 마을 단위의 공동체 발굴과 육성이 지속해서 추진 중임
-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초기에는 공공이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자발적인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사회주택 및 지역관리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필요함

3) 포용적 주거 여건 정착

(1)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 청년 1인가구 대상 임대주택 공급

- 경상남도는 '2030년 3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청년특별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와 관련된 내용은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를 목표로 추진계획을 마련함
- 청년특별도 조성 정책의 방향을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경남'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행복한 경남'으로 설정되어 있음
- 경남 맞춤형 청년주택은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리모델링 대상을 확대하고 수혜 청년을 확대해야 함

- 더 많은 빈집을 활용하고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하기 위해 시군의 예산 확보와 연계가 필요함

●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 기존의 빈집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남개발공사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 주택단지의 일부를 신혼희망타운으로 설정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 신혼부부의 수요에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유형별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며, 현재 경남의 미분양주택을 공공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검토함
-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 또는 민간임대로 전환을 시행함

● 공적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도시 개발, 택지 개발 등 공적 개발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공급되는 주택에서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을 높이거나 '토지 임대형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함
- 경상남도는 2015년,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8.5%에서 3%로 완화하여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였으나, 미분양주택의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향후 적정 수준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보해야 함
- 또한 '매입형 임대주택'과 함께 사회주택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공적 개발에 따른 잔여지를 확보하여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해야 함
- 공공에서 토지를 민간(사회적경제조직 등)에 장기 임대하고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2) 사회적 약자 주거 안전망 확립

●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 경남의 주거복지체계 확충의 일환으로 주거급여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체계 마련이 필요함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4% 이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음
- 주거급여 신청과 활용은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대상 발굴을 시행하고 읍·면·동 사무소 정보와 연동한 주거급여 신청,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

● 노인과 장애인 맞춤형 복지주택 공급

-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지속되고 고령화 인구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며, 생활지원 차원의 복지주택 확충이 필요함

- 수요자 맞춤형 복지 주택 공급을 의미하며, 공공 차원에서의 운영이 필요함
-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일생 생활이 가능한 복지주택을 공동생활 형태로 확충함
- 독립된 생활을 보장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으로 한정함

● 최저 소득 계층 대상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국토부는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음
-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충하는 것과 함께 수급 대상자에게 안정적 주거권을 부여하여 지역사회 주거 안전망을 확충함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확대

●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유도

- 현재 경남은 전국 미분양주택의 비중이 전국의 약 25%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미분양주택 해소방안에 대한 뚜렷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시점임
- 민간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선분양제도로 공급되었지만, 대부분 미분양주택의 경우 외곽지역이거나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입주 희망자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임
- 민간에서 공급된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측면에서 일부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추진함
- 다수의 미분양주택이 발생한 공동주택을 활용한 신혼부부 타운이나 사회초년생 타운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특정 민간기업의 자산을 매입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경상남도 주택종합계획의 성과를 살펴보면 주택보급률, 천명당 주택 수, 연간주택건설 등의 지표는 초과 달성했으나, 임대주택 수와 공공임대주택 재고 등의 목표는 턱없이 부족함
- 주거 취약계층 규모를 감안하여 시군 단위의 수요를 발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 등 공기업과 연계한 경남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함
- 창원, 김해, 양산 등의 동부권과 진주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 비주택의 거주자 지원 강화

- 쪽방, 고시원 등 일반 주택에 비해 취약한 비주택에 거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대함
- 공공이나 민간의 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에 충족하지 못하는 주민이 대부분이며, 실질적 주거복지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임

-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대상을 발굴하여 지원함
- 지역자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대상 주민을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공동생활이 필요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생활 주택 공급 등을 확대 추진함

제2절 도시재생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현황 분석

● 경상남도 도시재생사업 현황

- 경상남도 전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는 26곳이며, 매년 대상지가 증가하는 추세임
- 창원시(2014)와 김해시(2016)는 각각 선도지역과 일반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이후 추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24곳에서 추진 중임
- 2020년 상반기 기준을 기준으로 도내 거창, 창녕, 고성, 의령에만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함

〈그림 4-5-1〉

경남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현황



●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현황

- 우리나라는 2006년에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 확정과 ‘도시재생 R&D 사전 기획연구’를 시작으로 2014년 4월까지 8차 연도의 ‘도시재생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였음
- 국토부 ‘VC(Value Creator)-10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책, 제도, 건설기술, 환경기술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됨

- 경남은 2011년 선정된 창원시 ‘도시재생 시범지역(Test Bed)’사업을 시작으로 현장에서의 도시재생이 시작되었으며, 2017년 이전까지는 창원시와 김해시 2곳의 대상지가 전부였음
- 2017년 정부의 정책 변화와 함께 중앙(국토부)과 광역이 각각 선정하는 5개 유형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이며, 매년 경남의 사업 대상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2017년 6곳, 2018년 8곳, 2019년 10곳 등 광역도 단위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임
- 2019년 12월 신규 제도 시행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한 경남도 차원의 대응 방안이 필요함
 - 혁신지구, 인정사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등 3개 유형이 신설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이 다양해짐

〈표 4-5-7〉

경남 유형별
도시재생사업 현황

구분	시군	유형	위치	기간	권한	비고
2011년	창원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마산합포구 오동동·노산동	2011~2013 (3년)	중앙	
2014년	창원	근린 일반	마산합포구 오동동	2014~2018 (5년)	중앙	선도
2016년	김해	근린 중심	회현·동상·부원동	2017~2021 (5년)	중앙	일반
	통영	경제기반(公)	봉평동	2018~2023 (6년)	중앙	
	사천	중심시가지	동서·선구동	2018~2022 (5년)	중앙	선도
2017년 (6)	김해	중심시가지	무계동	2018~2021 (5년)	중앙	선도
	밀양	일반 근린	내이동	2018~2021 (4년)	광역	선도
	거제	주거지지원	장승포동	2018~2020 (4년)	광역	선도
	하동	우리동네살리기	하동읍	2018~2023 (3년)	광역	선도
2018년 (8)	창원	중심시가지	진해구 총무·중앙·여좌동	2019~2022 (5년)	중앙	선도
		일반근린	마산회원구 구암동	2019~2023 (4년)	광역	선도
	김해	중심시가지	삼안동	2019~2023 (5년)	중앙	선도
	남해	중심시가지(公)	남해읍	2019~2022 (4년)	중앙	선도
	함양	일반근린	함양읍	2019~2022 (4년)	광역	선도
	통영	주거지지원	정량동	2019~2022 (4년)	광역	선도
	사천	주거지지원	대방동	2019~2021 (4년)	광역	선도
	산청	우리동네살리기	산청읍	2019~2024 (3년)	광역	선도
2019년 (10)	진주	중심시가지	본성동	2020~2024 (5년)	중앙	
	김해	중심시가지	진영읍	2020~2024 (5년)	중앙	
	밀양	중심시가지	가곡동	2019~2023 (5년)	중앙	
	양산	중심시가지	북부동	2020~2024 (5년)	중앙	
	양산	우리동네살리기	북부동	2019~2021 (3년)	광역	
	거제	중심시가지	고현동	2020~2024 (5년)	중앙	
		일반근린	옥포동	2020~2023 (4년)	광역	
	창원	주거지지원	소계동	2020~2023 (4년)	광역	
	합천	일반근린	삼가면	2020~2023 (4년)	광역	
	함양	우리동네살리기	함양읍	2020~2022 (3년)	광역	

자료 : 경상남도 도시계획과(2020), 내부자료, 재구성.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

- 경남 광역센터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운영되는 공모사업에 따라 현장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 중임
 - 광역센터를 제외한 18개 지자체 중 17개 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 중
- 대부분의 지원센터는 행정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거창군은 민간단체에서 위탁하고 있고, 남해군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위탁 운영 중임
 - 창원시와 김해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전에 도시재생 선도지역(2014)과 일반지역(2016)에 선정되면서 각각의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부문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
 - 2019년에 선정된 남해군은 관광공사가 제안한 ‘공기업 제안형’으로 선정되었음

〈표 4-5-8〉

경남의 시군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공모 선정내역

구분	설립시기	운영방식	공모 선정내역
경남	2018.10.	공기업위탁	26곳 : 재생 1, 일반 1, 뉴딜 24
창원시	2014.06.	민간위탁	4곳 : 선도 1(2014), 중심 1(2018), 일반 1(2018), 주거 1(2019)
진주시	2018.08.	행정직영	1곳 : 중심 1(2019)
통영시	2018.09.	행정직영	2곳 : 경제 1(2017), 주거 1(2018)
사천시	2017.07.	행정직영	2곳 : 중심 1(2017), 주거 1(2018)
김해시	2016.07.	민간위탁	4곳 : 재생 1(2014), 중심 3(2017 · 2018 · 2019)
밀양시	2016.08.	행정직영	2곳 : 일반 1(2017), 중심 1(2019)
거제시	2018.06.	행정직영	3곳 : 주거 1(2017), 중심 1(2019), 일반 1(2019)
양산시	2019.01.	민간위탁	2곳 : 중심 1(2019), 동네 1(2019)
의령군	2019.06.	행정직영	—
함안군	2019.12.	행정직영	—
창녕군	—	—	2020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
고성군	2019.06.	행정직영	—
남해군	2019.04.	공기업위탁	1곳 : 중심 1(2018)
하동군	2019.01.	행정직영	1곳 : 동네 1(2017)
산청군	2019.11.	행정직영	1곳 : 동네 1(2018)
함양군	2019.04.	행정직영	2곳 : 일반 1(2018), 동네 1(2019)
거창군	2019.07.	민간위탁	—
합천군	2019.04.	행정직영	1곳 : 일반 1(2019)

주 : 창원의 재생(2014)과 김해의 재생(2016)은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일반지역을 의미함.
자료 : 경상남도 도시계획과(2020), 내부자료, 재구성.

2) 여건 분석

● 지방분권적 사업 추진체계 마련

- 중앙 관리 대상의 공모사업에서 순차적으로 광역 관리대상으로 전환되고 있음
 - 새로운 유형이 적용되며 신규 선정사업에서 중앙정부 선정은 변경되고 광역 선정은 유지됨
 - 중앙은 실행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적격성 검증,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강화 등을 실행함
- 경남도와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사업 추진체계를 확대 개선이 필요함

● 도시재생 대상 지역 확산

- 경남의 308개 행정동 중 70.5%인 217개 지역이 인구, 사업체, 노후 건축물을 기준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국 비중과 비교하여 2.3%p 높은 수치임
- 시군 단위에서 집계구를 기준으로 쇠퇴도를 분석하여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서 쇠퇴지역의 범위와 규모는 더 커짐
- 모든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경상남도과 시군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쇠퇴지역(도시재생 대상 지역)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표 4-5-9〉

활성화지역
진단결과
(2018년 12월 기준)

(단위 : 개, %)				
구분	합계	부합지역	비율	미부합지역
전국	3,504	2,389	68.2	1,115
경남	308	217	70.5	91
비중	8.7	9.1	-	8.2

주 : 지표의 기준연도는 2018년 12월 기준이며, 분석 단위는 읍면동(행정동) 기준임.
자료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도시쇠퇴현황 자료, 2020.01.06. 기준.

● 정책 변화에 따른 공모 대응

- 기존 공모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행력 높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법 개정하여 혁신지구 등 새로운 재생 수단인 신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선정 물량이 늘어날 것임
- 새로운 중앙 공모방식에 대한 대응과 광역 차원에서의 사업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한 시기임
- 장기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적 공감과 당위성은 유지될 것이며, 중앙과 광역에서 공모 형태나 사업 유형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4-5-10〉

도시재생
신규 제도 도입
내용

구분	도시재생 인정사업	거점연계 뉴딜사업 (총괄 사업관리자)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념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 점단위 사업을 재생사업 인정. 국비 지원 (활성화지역 밖, 활성화계획 불요)	공기업 시행 거점개발사업 포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총괄 사업관리자 지정 사업 추진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구단위 건설사업 (활성화계획 불요)
대상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10만㎡ 미만 점단위사업)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제외)	쇠퇴지역 요건 충족 토지권원 확보 지역(50만㎡ 미만)
절차	인정 신청 → 도시재생특위심의 → 지방위 심의 · 인정	활성화계획(거점개발사업 포함) 신청 → 평가 → 선정(특위)	신청 → 특위(선정) → 지방위 심의 · 승인
지원액	3년간, 국비 10~50억원 (지방비 40% 매칭)	국비 100~250억원 (지방비 40% 매칭)	국비 최대 250억원 (지방비 40% 매칭)
조세감면 및 특례	(제30조) 국 · 공유재산 등의 처분 (제30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제31조)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감면 개발부담금 · 농지보전협력금 ·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 동일 적용 (제54조) 사업인정 후 재결신청 가능

자료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신규 제도 소개자료, 2020.01.06. 기준.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미래 트렌드

● 저출생과 고령화로 소멸위험지역 확대

-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1.227명으로 전국 0.977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결과적으로 자연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 경남의 고령화율은 15.5%로 전국 평균인 14.8%에 비해 높고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경남의 농촌지역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인구고령화로 인한 지역 문제가 지속될 것임

● 압축도시로의 도시공간관리체계 전환

- 저출생과 인구고령화는 앞으로 인구 감소시대를 넘어 축소시대로 진전될 것으로 보이며, 인구 성장의 한계의 영향은 도시공간구조의 확대가 지속되지 못할 것을 의미함
- 도시기능의 분산보다 압축적 활용과 권역별 거점 도시의 기능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함
 - 의료, 문화, 산업, 경제 등 도시기능이 집중된 권역별 거점 도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커뮤니티 중심의 지역관리체계 확립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지역공동체)가 도시재생 등 지역사업 관리 주체가 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자생적 조직으로 육성되어야 함
-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의 정책사업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굴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시점임

2) 경남 미래변화 전망

● 도시재생 대상지 확대

-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간 500곳의 대상지를 지정하는 것이었으며, 순차적으로 대상지가 확대되고 있고 경남도는 현재 26곳의 대상지가 지정되어 있음
 - 매년 경남의 대상지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중앙정부 공모사업이 수시 접수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대상지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선정(관리) 대상지뿐만 아니라 광역에서 선정하는 대상지도 지속 증가할 것임
 -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와 함께 지속해서 공모사업의 대상지는 늘어날 것임

● 경남도의 역할 확대

- 향후 대상지가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많아지면 중앙정부의 사업 관리 등 역할에 있어 한계가 나타날 것이며, 경남도의 역할이 늘어날 것임

-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며, 경남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화 유형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정부가 갖고 있던 대상지 선정 및 관리의 권한을 순차적으로 광역지자체로 이관하고 있으며, 쇠퇴지역이 더 증가하면 경남도의 권한과 업무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임
- 경남도시재생지원단, 경남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의 재구조화와 역할 제고를 위한 진단과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

● 제도권 밖의 쇠퇴지역 관리의 필요성 제기

- 현재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기준인 3개 지표⁴³⁾를 만족하지 못하는 대상 지역 중에서 쇠퇴 현상에 있는 지역도 장기적으로 쇠퇴가 지속될 것이며, 쇠퇴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함
- 경남 읍면동의 70.5%인 217개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부합되는 쇠퇴도를 보이며 집계구를 기준으로 진단할 경우 도시재생이 필요한 쇠퇴지역은 더 많아질 것임
-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지는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은 규모로 지정되고 있어 쇠퇴 분석을 집계구 단위로 시행했을 경우 더 많은 지역이 쇠퇴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음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정책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발굴

- 경남도, 시군 등 행정 부문에서의 적극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사업의 선정과 관리 등 단계별 거버넌스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역할과 임무를 배분하는 것이 중요함
- 지난해 시범사업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총괄관리자 지정 등 신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 중앙정부는 순차적으로 선정보다 정책사업의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 늘어나게 되어 경남형 도시재생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쇠퇴지역 관리가 필요함
- 인구의 저출생과 고령화, 건축물의 노후화 등 쇠퇴지역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지역관리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업사업을 추진 중이고, 경상남도도 시군 단위로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된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음
- 다만, 지역 특색이 있는 조직의 발굴에는 미비한 성과를 보여 활성화가 필요함

43)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비중 등 3개 기준에 부합할 경우 대상지에 포함됨.

-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을 관리하고 활력을 찾기 위한 도시재생의 특성이 반영된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도내 사업의 주민참여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도시재생을 단순히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단위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관기관이 대상지를 되살기 위해 함께 협업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유관사업 연계를 통한 혁신거점 투자

- 중앙부처 단위에서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경상남도과 시군 차원에서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행정 중심이 아닌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수임
- 특히, 국가혁신클러스터, 강소연구개발특구, 문화재복원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의 기존 부처별 정책사업의 연계방안을 시군 차원에서의 진단과 방향 설정이 필요함
- 도시공간구조를 감안한 기능 배분과 함께 재생과 개발을 양비론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점에서의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인구의 감소, 노후 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쇠퇴지역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며, 공모사업 대상지가 아닌 비법정 대상 지역의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2) 추진전략

● 도시재생 부문 핵심지표

〈표 4-5-11〉

도시재생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발굴 건수	1건	13건	40건
국비 공모 사업 선정 건수	33건	110건	200건
경남형 전문 인력 발굴	44명	300명	500명

(1) 정책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발굴

● 경남형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

- 도시재생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경남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함
- 광역 차원에서 경남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정책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경남형 도시재생 기획, 관리, 운영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함

●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

- 경남도 차원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거버넌스 조직의 임무와 역할을 부여함
- 시군 지자체의 거버넌스 조직 현황을 진단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

● 총괄 사업관리자 등 신규 정책사업 발굴

- 경남개발공사 등 총괄 사업관리자 지정을 고려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운영함
- 신규 3종 등 새로운 유형과 관련한 경남도 차원의 추진 및 적용방안을 마련함

(2) 지역관리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확대

- 중앙정부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청년혁신스타 등 사회적경제와 연계를 추진 중임
- 경남도의 사회적경제, 청년, 사회혁신 등 혁신 분야와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시군별 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의 수준을 진단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함
- 경남은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을 추진 중이며, 확대 적용이 필요함

● 경상남도 및 관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 사회적경제추진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경남의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연계방안을 마련함
- 사회혁신, 청년정책 등 도정 혁신 분야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함

(3) 유관사업 연계를 통한 혁신거점 투자

● 중앙부처 연계 · 협력사업 발굴 확대

- 도시재생 뉴딜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부처의 정책사업 발굴 및 적용을 확대함
- 중앙부처와 함께 경남도의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청년정책 등 영역과 협업을 추진함

● 기존 정책사업 대상지구 연계

- 원도심의 쇠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의 도입이 필요함
- 경제 · 산업 · 과학기술 진흥, 상권 활성화 등 정책지구와 연계하여 공간 · 기능적 위계를 조정함

● 비법정 대상 지역 관리방안 마련

- 공모 기준을 일부 충족하거나 장기적으로 쇠퇴 가능성이 큰 지역의 관리방안을 마련함
- 현재 도시재생 공모를 위해서 인문 · 사회(인구), 경제(사업체), 물리 환경(건축물) 등 3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3개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쇠퇴지역을 공모사업 추진이 가능함

4. 추진시책

1) 정책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발굴

(1) 경남형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

● 도시재생 스타트업 확대 지원

- 경남은 2017년부터 사전기획사업의 하나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타트업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앙 및 광역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보였음
- 초기에는 3곳에서 현재 매년 5곳 대상지의 스타트업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광역 차원의 지원과 시군 차원에서의 준비과정을 통해 공모사업 심사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추진 확대가 필요함
- 서울시는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앞서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희망지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남도의 스타트업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대상지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

● 공기업 참여기반 확보

- 경남개발공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의 공기업들이 도시재생사업 참여하고 있으며, 공기업 주도의 신규 제도가 시행되면서 더 많은 공기업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참여가 이뤄질 것임
- 2018년 남해군은 관광공사가 참여하여 활성화계획 수립에서부터 지원센터 운영까지 진행 중임
-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의 신설과 함께 공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경남도 차원에서 공기업 참여를 확대해야 함
-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는 크게 ‘전체 위탁형’과 ‘일부 위탁형’으로 구분되며, 지자체와 공기업의 역할 구분을 통해 공기업의 전문 분야를 활용한 물리적 사업을 시행하게 됨

● 경남형 도시재생 평가체계 확립

- 정부는 광역 선정분 50개 중 기본 배정 15곳을 제외하고 시도별 ‘예산 총액 배분’ 방안을 통해 시급성, 형평성, 준비성 등을 고려해 차등 배정을 시행할 예정임
- 시급성은 쇠퇴도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형평성은 시군구의 수가 고려되며 준비성은 활성화계획의 수립 여부에 따라 배정되는 것으로 준비성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달라짐
- 도시재생사업의 준비성 평가에는 지원센터 등 지원조직 확보에 대한 지표표를 포함하여 행정 주도의 사업 추진이 아닌 주민과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거버넌스 조직의 평가가 필요함
-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있어서 지원센터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시군의 예산을 통해 주민협의체 등 의사결정 구조 마련 등의 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2)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

●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해오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경남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 시군별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장기계획의 성격이 띄고 있으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심의가 진행된 이후에는 위원회의 특별한 임무가 없는 것이 현실임
- 도시재생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함
- 시군별 담당제나 전문 분야별 담당제를 실행하여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유도함

● 도시재생지원단 기능 확대

-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함께 위원회 소속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재생지원단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 기획, 운영 등의 관리를 통해 시군을 지원함
- 신규 사업 컨설팅뿐만 아니라 운영 중인 사업의 점검을 실행하며, 분기별 점검과 전담제를 통해 경남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생태계를 안착시킴
- 중앙정부는 기존 3개에서 현재 5개 기관을 추가하여 총 8개 기관이 지원조직으로 설정되어 있고, 시책 발굴, 전문가 양성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경남도 도시재생 행정조직 개편

- 현재 경상남도는 계 단위의 조직에서 도시재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음
- 경남도 차원에서 시군 단위의 모든 사업을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권역별 또는 유형별 담당자를 확충하여 경남형 도시재생의 추진과 성과를 관리함
- 추가로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등 유관 부서와의 협업 추진과 함께 경남형 도시재생 성과를 발굴해 나아가기 위한 행정조직의 기능 강화가 필요함

(3) 총괄 사업관리자 등 신규 정책사업 발굴

● 시군별 활성화지역 사전진단 시행

- 현재 도시재생 대상지는 5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쇠퇴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유형을 선택하여 공모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시군에 따라 유형별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가 상이하며 일부 시군은 도시공간구조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유형을 설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들도 있어 진단이 필요함
-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을 중심으로 혁신지구와 거점연계 뉴딜 등 신규 제도가

추진되면서 경남도 차원에서의 거점 도시 기능 강화와 시군별 도시공간구조 진단이 필요함

- 지역별 인구, 산업, 경제, 사회 등의 쇠퇴로 나타나는 대상지의 유형을 진단하여 적정 유형 추진이 가능하도록 활성화지역의 유형을 사전진단하고 시행하도록 지원함
- 지역의 쇠퇴 특성보다 예산 규모에 맞춰 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을 구상하는 것을 방지함

● 생활SOC 복합화 등 점 단위사업 추진

-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커뮤니티 복합시설을 추진 중임
- 청년주택, 생활편의시설(주민 동아리 공간 등), 지원센터 등이 복합시설 형태로 계획되고 있음
- 일정 구역을 설정하여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인근의 낙후지역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인증사업 등 점 단위사업 추진을 확대함
- 기존의 공공 또는 민간 개발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점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 추진과 함께 시군 단위의 활성화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쇠퇴진단이 진행함

● 경남개발공사 역할 확대

- 총괄 사업관리자의 추진과 함께 경남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남개발공사는 ‘신사업재생팀’을 운영 중이며, 경남도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함
- 현재 중앙부처나 수도권의 공기업을 제외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실질적 사업 추진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사업 대상지의 일부 물리적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경남개발공사의 참여를 통해 사업 시행이 가능한 부문을 도출하여 위탁 등의 형태로 사업의 영역 확장이 필요함
- 총괄 사업관리자의 역할 중 전체 사업을 관리하기보다 일부 ‘어울림센터’, ‘복합문화시설’ 등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음

2) 지역관리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1)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확대

● 경남형 도시재생 연계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도시재생은 쇠퇴지역에 대한 공간적 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며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군에서 공간적 여건을 개선에 치중된 사업을 추진 중임
-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도시재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발굴이 필요함
- 기능적으로 센터는 지역관리회사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자생적으로 조직된

주민조직이나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육성함

- 도내 시군 지원센터의 경우 대부분 한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 운영에 대한 고민이 전무한 실정으로 자생적 운영조직을 만들어야 함
-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등 일부 민간 위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행정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시점에는 직원과의 계약 해지를 통해 센터가 없어지는 구조임

● 사회혁신 모범사례 확산

-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청년의 주거 문제, 사회취약계층의 참여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외부로의 홍보가 부족함
- 언론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경남도 차원에서 사회혁신 모범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경남도와 시군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함
- 남해군에서 활동 중인 청년 농부들인 ‘팜프라’와 같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모범사례를 발굴함
- 경진대회와 같이 일회성으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지역공동체를 발굴하고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진단하여 지원함

● 청년 일자리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경남의 경우 시와 군으로 행정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시군별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결과적으로 활동 인력이 차이임
- 비교적 청년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활동 인력의 확보가 쉬움
- 국토부는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지역대학이 주도하여 도시재생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연합체 구성이 필요함
-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 도시재생과 관련된 직종에 8천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관련된 분야의 정책과 사업이 확대될 것을 감안한 체계를 마련함

(2)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도시재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시군의 활동 인력의 차이와 함께 운영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도 필요한 시점임
-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전문가들이 집적된 권역을 제외하고 균등한 수준의 교육(역량 강화)이 이뤄지는지를 진단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파견 등을 지원함
- 경남도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가 인력풀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재정 여건이 부족한 시군에는 전문가 수당 등의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도시재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

● 주민협의체의 법인 전환 지원

- 다자간의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의사 표현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의 법인화를 지원함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발굴된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의 지원조직(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등)과 함께 전환을 지원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인증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컨설팅과 현장 확인 등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경남도 차원에서 인증을 위한 사전 작업을 시행하여 인증을 지원함

● 시군별 지역공동체 활성화 평가 시행

- 실행예산이 투입되는 본 사업 시행에 앞서서 지역공동체의 참여 등 여건을 평가하여 시군의 역량을 확인하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함
- 이를 통해 시군 단위의 역량을 평가하고 공모사업을 위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공동체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여 활성화를 장려함
- 이를 통해 행정 주도의 사업 집행을 방지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지역주민 간 의사결정에서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공모사업 선정과 함께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함

(3) 경상남도 및 관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 민간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연계형 사업 공모

- 도시재생을 위한 예산 집행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며, 예산의 확보와 집행이 이뤄지는 과정에 주민과 민간(민간기업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는 한정됨
- 도시재생을 공모하는 단계에서 공기업 참여의 기회는 총괄 사업관리자 등의 제도를 통해서 확대되지만, 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공동체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지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직된 지역공동체나 지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담보하는 사회적경제 연계형 사업 공모가 필요함
- 주민협의체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수준에서 참여하게 되며,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단체의 성격을 갖춘 민간기업이나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가 필요함

● 일자리 등 실현 가능성 확보

-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활동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최근 들어 도시재생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 하지만 기존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이 진행되고 있어 외부인이라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이나 청년의 참여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도내 청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모델로 도시지역의 청년 또는 활동이 가능한 인력을 모집하고 일정한 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인건비나 활동비를 지원을 실행함

- 일본은 지방창생(地方創生)의 일환으로 지방부흥협력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이주하도록 하고 인건비와 활동비를 지급함
-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사업과 연계하여 과정을 수료한 사회초년생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 계층을 특정 지역으로 파견하는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함

● 도시재생 대상지 부동산가격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마련

- 지방 도시는 수도권에 비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활성화되는 지역은 임대료 등 지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음
-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사업 배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경남도 차원에서도 임대료 등의 부동산가격 변화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부동산가격의 모니터링을 실행 중임
- 실시간으로 부동산가격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며, 상권 실태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 상점가 업종 변화나 세입자 변화 등을 확인하여 동지 내몰림 현상을 진단함

3) 유관사업 연계를 통한 혁신거점 투자

(1) 중앙부처 연계 · 협력사업 발굴 확대

● 경남형 도시재생 안내서 작성

- 우리나라는 2006년 시작된 도시재생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한국형 도시재생의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함
- 전국 13개의 선도지역이 지정되었고, 경남에는 구 마산시의 오동동 일원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
- 이후 도시재생 일반지역(2016년), 도시재생 뉴딜사업(2017년)뿐만 아니라 도심취약지역 개조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유사 사업들이 추진 중임
- 도시재생 방향에 부합되는 부처별 정책사업은 다양하게 진행되며, 국토부의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통해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유관사업을 확인이 가능함
- 정부는 도시재생을 종합적 · 계획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함
- 다만, 정보의 접근과 변화하는 정책사업의 여건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맞춰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지역공동체, 민간 등)의 참여를 위한 유도가 필요함
- 도시재생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경남도 도시재생 안내서를 작성함
- 시군 및 경남도의 지원센터를 통해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대학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이나 내용의 전달은 부족함

● 부처별 신규 사업 협의체 운영

- 한시 조직 구성하여 시기별·유형별·지역별 특성에 맞춰 신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전략사업팀을 구성하여 시군 대상지의 진단과 계획 방향 등을 설정함
- 경남도는 신규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팀을 운영 중이며, 도시재생 차원에서의 지원을 실행함
- 시군에서 대상지와 해당 공모사업을 제안하고, 경남도를 중심으로 대상지 여건 진단과 기본방향 설정, 타당성 제시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국비 확보를 지원함
- 대부분의 시군은 행정이 중심이 되어 소규모 공모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관리회사 등의 기능을 갖춘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함께 전문 분야의 기술 지원이 필요함
- 도내 관련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 컨설턴트 등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한 시기별·기능별·지역별 분과를 운영하여 시군 단위의 국비 확보를 지원함

● 경상남도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확대 운영

- 경상남도는 부지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행정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시군 단위에서도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주축으로 행정협의회 운영 중임
- 행정협의체 운영은 행정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부서 간의 협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됨
- 시군에서는 관련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충실한 기획도 중요하지만, 경남도 소관부서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경남도 차원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책사업의 진단과 관리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함
- 도시재생 대상지에 추진되는 정책사업에 관해 도시재생 담당관과 함께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함

(2) 기존 정책사업 대상지구 연계

● 지역 산업 연계 스타트업 육성 확대

- 경남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스타트업 육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중앙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타트업 육성사업과의 연계가 전무한 실정임
- 기존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제안되고는 있지만, 실제 도시재생과 관련된 스타트업이 발굴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도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테크노파크 등 기관과 연계하여 산업 분야 육성뿐만 아니라 신규 스타트업 육성을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추진함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지역의 산업기반이 무너진 지역에서 산업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되며 경남에는 통영시 1곳이 지정되어 추진 중임
-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새로운 스타트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경남도 차원에서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관이 연계하여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임

● 시군 차원 도시공간구조 진단

- 시군의 자원이나 잠재력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추진 가능성을 진단하고 쇠퇴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사업과 활성화지역의 역할을 구분함
-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 발굴을 위해 경남도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원조직의 기능을 확대해 사전 컨설팅의 과정을 진행하며, 시군 도시재생사업의 수요 관리를 병행하여 추진함
- 시군별 도시공간구조에 맞는 유형별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제시된 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유관기관의 정책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지원함
- 유형별 도시재생사업의 진단과 함께 관련 분야 정책사업 지원에 관한 추진체계를 연계 구상함

● 스마트시티 챌린지 연계 도시재생 추진

- 국토부는 기존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였음
- 기존에는 동일한 규모에 추진되던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을 대상 지역을 구분하여 스마트시티(대), 스마트타운(중), 스마트솔루션(소)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과 별개로 규모별 추가 사업 발굴을 통해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가 융·복합 추진을 위해 관련 민간기업과 전문가 그룹의 연계를 실행함
- 지역대학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수도권 전문기관 등이 연계하여 사업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

(3) 비법정 대상 지역 관리방안 마련

● 시군 도시재생사업 수요관리 강화

- 시군에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위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 공모방식의 사업 선정에 따라 시군에서 수립된 전략계획을 기준으로 모든 활성화지역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
- 경상남도에서는 매년 변화되는 정책을 반영한 수요조사는 시행하고 있으며,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지원단 등을 통해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여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경남도도시재생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상담소 등 컨설팅 기능을 확대하고 각 시군의 특성에 부합되는 사업의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정기적인 수요 관리를 시행함

● 도시재생사업 공모 이외의 연계사업 발굴

-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대상지는 쇠퇴 양상에 따라 유형별 사업이 결정되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부처별 추진사업의 공모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함

-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로 부처별 연계사업과 연계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역에 필요한 연계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과 시군의 협업이 필요함
- 지역관리회사 차원에서 대상 지역의 공모사업과 함께 민간기업의 연계방안 등을 마련함

● 예비사업 지원 등 단계별 공모방식 전환 유도

- 도시재생사업의 최대 수혜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며, 도시재생에서 있어 주민의 참여 의향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과 같은 형태의 초기 단계 예비사업을 시행하고 대규모 본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성과의 도출도 가능함
- 시군 단위에서 예비 프로그램과 주민협의회 운영을 통해 본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정 규모가 되지 못하는 지역의 지원이 필요함
- 모든 시군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역량이 부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대학이나 공공기관 등이 연계방안을 마련함

제3절

스마트시티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현황 분석

● 시군별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추진현황

- 현재 경남은 스마트시티 관련 총괄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시군별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부분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의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7월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거제, 통영, 밀양, 하동 등 4개 시군이 최종 선정됨
- 대부분 통합플랫폼 기반을 시작으로 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모바일 행정, 지방세 납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창원, 김해, 양산 등에서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임
- 농촌지역에서는 스마트팜과 관련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표 4-5-12〉

경남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현황

구분	대표 사업	비고
창원시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 스마트 창원국가산단 추진	14건
진주시	○ 경남혁신도시 시즌 2 사업 연계 추진 ○ 경남형 스마트산단 조성사업 추진 예정	4건
통영시	○ 통합IT 접목한 지능형 홀 기반 건강복지서비스 ○ ICT기반 스마트 어장관리 시스템 구축	9건
사천시	○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관광 구현 ○ 항공산업 스마트공장 자동화 기술 확보	7건
김해시	○ 스마트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발표 ○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5건
밀양시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계획 추진 ○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3건
거제시	○ 스마트 현장 행정 서비스 확대 추진	1건
양산시	○ 사람 중심의 U-Eco 그린시티 구축사업 ○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00개 구축 계획	12건
의령군	○ 스마트폰 이용 원격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	3건
함안군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4건
산청군	○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1건
함양군	○ ICT를 융합한 스마트팜 사업 선도 추진	2건
거창군	○ 드론 활용 인공수분 기술 확보 및 시연	1건
합천군	○ 스마트투어 체계 구축사업	3건

주1 :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시군별 정책사업 리스트를 검토하여 작성된 내용을 요약함.

주2 : 해당 사업의 명칭은 실제로 시군별로 추진된 사업 명칭과 다를 수 있음.

자료 : 경남연구원(2019), 경남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p.19; 재구성.

● 정부 정책사업별 추진현황

-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은 크게 7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부분 시범사업 수준의 시작 단계에서 본격적인 확산 단계를 앞두고 있음

〈표 4-5-13〉

경남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현황

정책사업	사업 내용	해당 지역	비고
국가 시범도시	○ 스마트시티 기술을 실증·접목하기 위해 지정된 대상 지역으로 신규 개발지역임	○ 세종 행복도시 ○ 부산 에코델타시티	신규 개발지
스마트도시 챌린지	○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적용	○ 광주, 부천(경기), 대전, 인천, 창원	민간(기업) 연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 지역의 리빙랩을 중심으로 소규모 지역 수요에 맞는 스마트 서비스 발굴	○ 대전 등 매년 4개 지정 ○ 김해('18), 통영('19)	관광, 전통시장 등 연계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중 스마트 기술 접목을 구상한 대상지	○ 세종 등 7개 지정 ○ 경남 없음	도시재생 대상지 연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 LH 및 지역개발공사가 진행하는 택지개발 사업 등에 접목	○ 79개 지구 ○ 가포, 율하 등 포함	신규 택지 개발 연계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 방법, 방재, 교통 등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플랫폼 보급	○ 22년까지 108곳 지정 ○ 양산, 김해 등 지정	지자체 통합정보 제공
혁신인재 육성사업	○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계획에 따라 전국의 교육기관을 지정	○ 전국 6개 대학 ○ 경남 없음	대학 연계 혁신 인재 양성

자료 : 경남연구원(2019), 경남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p.20~p.26; 재구성.

〈표 4-5-14〉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발전단계

2) 여건 분석

●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발전단계

- 2018년 이후 스마트시티 개념을 접목하여 제도 정비와 관련 계획 수립을 진행함

구분	1단계(2013년 이전)	2단계(2014~2017년)	3단계(2018년 이후)
목표	건설·정보통신산업 융복합형 신성장 육성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	도시문제 해결 혁신 생태계 육성
정보	수직적 데이터 통합	수평적 데이터 통합	다자간·양방향
플랫폼	폐쇄형(Silo 타입)	폐쇄형+개방형	폐쇄형+개방형(확장)
제도	U-City법 제1차 U-City종합계획	U-City법 제2차 U-City종합계획	스마트도시법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주체	중앙정부(국토부) 중심	중앙정부(개별)+지자체(일부)	중앙정부(협업)+지자체(확대)
대상	신도시(165만㎡ 이상)	신도시+기존도시(일부)	신도시+기존도시(확대)
사업	통합운영센터, 통신망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	공공 통합플랫폼 구축 및 호환성 확보, 규격화 추진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 다양한 공사사업 추진

자료 : 국토교통부(2019),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p.8; 재구성.

●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추진

- 정부는 5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8대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임
-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 착공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임

〈표 4-5-15〉

8대 선도사업
주요 대책 및 추진과제

구분	주요 대책	주요 추진과제
스마트공장	스마트 제조혁신전략('18.12)	4,000개 공장 보급
바이오 헬스	의료기기 규제 혁신 · 산업육성 방안('18.7)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핀테크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18.3)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마련
미래 자동차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18.2)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마련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추진전략('18.1)	시범도시 착공 등
스마트팜	스마트팜 확산방안('18.4)	스마트팜 혁신 밸리 2차 선정
에너지 신산업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	신 ·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확대
드론	드론산업 기반 구축방안('17.12)	도심 등 상용화 확대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추진계획.

● 부처별 스마트시티 동향

- 부처별 업무에 따라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국토부는 도시 운영 통합플랫폼 등을 통해 분야별 도시 데이터를 통합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표 4-5-16〉

경남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현황

중앙부처	정책 동향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운영 통합플랫폼 확산사업 지속 추진 ○ 신기술 및 서비스 연계 발굴(BIS, 교통카드 등 ITS 분야 성과 확산) ○ 교통, 방범 및 방재 등 분야별 도시 데이터 통합 관리 추진 중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구축, 빅데이터, IoT 혁신기술을 통한 ICT 융합 도시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확대 추진 중 – 2019년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융합 서비스 확대 ○ 부산과 고양의 IoT 실증사업 성과를 확산하고 교통, 환경, 안전 등 공공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검증을 지속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미터(AMI),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의 검증된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확산 중임 – 초기 시장형성단계를 넘어 민간 참여를 통한 확산사업을 추진 – 나주 스마트에너지시티(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성공모델 마련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있음 – 2022년까지 20개 분야의 국가 중점 데이터를 개방 – 지자체 스마트서비스 수준 진단과 컨설팅 지원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 전기차 분야의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함 – LD 적용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광주광역시 등 5개) 조성 후 확산 – ICT 활용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사업 전국 확대 – 전기차 보급 관련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충전기 1만대 구축

자료 : 경남연구원(2019), 경남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p.14; 재구성.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미래 트렌드

● 공간 특성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수준

- 공간의 특성에 따라 추진전략(정책사업)과 적용기술의 수준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새롭게 개발되는 대상지에 적용되는 스마트시티 기술은 시범사업 수준임

〈표 4-5-17〉

공간 특성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구분	공간 특성	추진전략	적용기술
신규 개발 단계	자유로운 인프라 구축 다양한 용·복합 용이 실험적 시도	국가 시범도시(2곳) 거점 신도시(혁신도시 등)	미래형 첨단 선도기술 (혁신기술 창출)
도시 운영 단계	신규 인프라 한계 충분한 기술 수요 시민 참여 우수	데이터 허브 모델(국가 R&D 등) 테마형 특화단지(연 4곳)	상용화 단계 기술 (수요기반 혁신)
노후 쇠퇴 단계	다양한 도시문제 신규 투자 한계	스마트 도시재생(매년 선정)	비용 효율적 적정기술 (문제 해결형)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8).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p.13; 재구성.

● 스마트시티 구성요소

- 스마트시티 구성요소는 크게 3개 분야이며, 공간적 특성에 맞추기보다 각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단계이며, 우리나라는 알고리즘과 서비스 분야가 가장 취약함

〈표 4-5-18〉

스마트시티 구성요소

구분	주요 내용	추진체계
인프라	도시 인프라	소프트웨어적이지만 도시 하드웨어 발전이 필요
	ICT 인프라	유·무선 통신 인프라의 도시 전체연결
	공간정보 인프라	공간정보 핵심 플랫폼 등장 공간정보 이용자가 사람에서 사물로 변화 위치 측정 인프라, 인공위성, Geotagging
데이터	IoT	각종 인프라와 사물을 센서 기반 네트워크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큰 시장, 투자 필요
	데이터 공유	좁은 의미의 스마트시티 플랫폼 데이터의 자유로운 공유 및 활용 지원 도시 내 스마트시티 리더들의 주도적 역할 필요
서비스	알고리즘 & 서비스	실제 활용 가능한 품질과 신뢰도의 지능서비스 데이터의 처리 분석 등 활용 능력 중요 유럽 Living Lab 등에서 다양한 시범사업 전개
	도시혁신	도시문제 해결 아이디어 및 서비스 환경 조성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 신뢰 등 사회적 자본 작용 중앙정부의 법제도 혁신 기능 필요

자료 : 이재용(2017).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방향과 전략, 월간교통, 6-12.

2) 경남 미래변화 전망

● 경남 스마트시티 정책사업 추진 경험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사회로의 변화 요구는 중앙정부의 3대 투자전략과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중임
- 경남도는 2018년 이후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공모사업에서 17개가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28억원의 규모임

● 새로운 혁신 생태계 구축

- 기존 유비쿼터스 도시는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이 중심으로 ICT와 건설이 주된 정책의 대상이었으나, 스마트시티는 법률이나 제도, 그리고 추진 주체의 플랫폼을 넘어 해당 지역의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을 포함함
- 개인이나 공공의 영역 경계가 없어지는 수준으로 정보가 확산하는 단계이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생태계의 거점이 되는 혁신 생태계의 전환이 중요함

●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융합

- 이는 예전의 공간과 정보화의 결합과는 달리, 도시와 정보통신(ICT)의 융합을 넘어서는 개념으로서 기초와 광역, 개인과 공공의 역할이 확장되는 개념임
- 한국판 뉴딜과 함께 준비 중인 경남형 뉴딜인 디지털 뉴딜사업, 사회적 뉴딜 등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스마트시티 정책의 방향임

● 지자체 차원의 의제 발굴 필요

- 스마트시티 추진은 도시공간의 특성, 산업구조의 진단, 과학기술의 수준을 고려하여 시군과 광역 차원의 전반적인 진단과 정부 정책사업의 연계가 필요함
- 기존 도시문제의 영역에 해당하는 산업경제, 문화관광, 사회복지, 도시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시티의 개념은 적용될 것이며, 그 기술 분야도 다양해짐
- 스마트 공장을 넘어 스마트 산업단지와 같이 스마트시티의 공간적 영역이 점차 확대됨

● 산업경제 기반과의 연계 전략 마련

- 수송기계(철도, 선박 등)와 소재·부품·장치 중심의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미래산업의 분야인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혁신 생태계의 구성·운영이 필요함
- 국가 산업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창원국가산업단지는 한국판 뉴딜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며, 쉬지 않고 움직이는 생산기지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
-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국가산단을 찾아 ‘스마트그린산단’의 선도를 당부함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남형 스마트시티(스마트리전) 추진

-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기술개발과는 별개로 경남이 갖는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초 및 광역 단위로 경남형 스마트시티(스마트리전) 전략계획 수립 추진

– 도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자체는 김해(2018)와 창원(2020)이 유일함⁴⁴⁾

– 스마트리전계획 : 기초지자체의 스마트시티를 연계·활용하는 광역단위 계획

- 통합관제센터는 시군과 광역 지자체에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보안, 안전 등 재난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 안전망 구축이 확대되어야 함
- 유비쿼터스와 달리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활용하고 기술개발 진행이 활발해져 부처별·분야별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이 있으며, 이를 경남 맞춤형 정책으로 연계가 필요함

● 경남형 스마트시티 산업기반 강화

-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개의 축으로 구성된 한국형 뉴딜 추진과 함께 경남은 경남형 뉴딜을 구상 중이며, 디지털(스마트), 그린과 함께 사회적 뉴딜이 포함되어 있음

– 경남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뉴딜을 통해 경제·산업, 사회 전반의 여건을 변화시키는 내용임

- 경남은 소재·부품·장치 중심의 산업·경제 구조로 저위기술 중심으로 생산성이 하락함에 따라 미래형 산업 전환과 제조업 고도화의 과제를 안고 있음

-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인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기업의 육성과 함께 지역사회의 여건을 전반적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며, 육성이 중요함

● 스마트시티 추진기반 확보

- 경남이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혁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경남형 사회혁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인재 양성기관은 총 6곳이고 경남에는 지정되지 않았으며, 경남의 지역대학과 기업이 원하는 스마트기술 관련 혁신 인재의 양성이 필요함

– 지자체와 지역대학 협력기반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있으며, 현재의 기본구상에 국토 관리,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 미래 분야의 확대가 필요함

-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산업, 사회혁신, 도시계획, 문화관광 등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갖출 수 있으며, 지역별·분야별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수요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경남형 지원조직의 운영이 필요함

44) 스마트시티 종합포털(<https://smartcity.go.kr/>), 지역 스마트 도시계획 현황(2020년 10월 5일 기준).

2) 추진전략

● 스마트시티 부문 핵심지표

〈표 4-5-19〉

스마트시티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스마트시티 특화지구	6개	50개	100개
스마트시티 전문 인력 발굴	0명	200명	400명
스마트기술 관련 민간기업 수	96개	200개	500개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남형 스마트시티 추진

● 경남형 스마트시티(스마트리전) 추진 전략계획 수립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의 제8조에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장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 시행 전에 수립해야 함
- 경남도 차원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을 분석하여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체계를 마련함
 - 경남도는 2021년부터 경남형 지역특화 스마트시티 전략계획 수립을 추진 예정임
- 유비쿼터스에서 스마트시티로 개념이 변화된 이후 수립된 도내 스마트 도시계획은 창원시와 김해시가 유일하며,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기초 지자체별 계획 수립이 필요함
 - 2018년 이전에 수립된 김해시의 계획도 정부 정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불가피함

● 스마트시티 통합 안전망 구축

- 정부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광역 단위의 통합플랫폼 구축은 서울(2018), 강원(2019), 충북·전남(2020) 등이 완료되었음
- 또한 매년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 지자체에서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양산(2015), 김해(2017), 창원·진주(2019) 사천·남해(2020) 등이 선정됨

● 부처별·분야별 스마트시티 정책사업 발굴 추진

- 관광, 시장, 도시재생 등 특화된 공간 단위로 적용 가능한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함
 -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를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의 유형과 지원이 다름
- 신규 택지 개발에는 한계가 있으며, 도시 생애주기에 맞춘 스마트시티 적용이 필요함
 - 도내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적용 사례는 없으나, 일부 대상지에서 스마트시티가 일부 포함됨

(2) 경남형 스마트시티 산업기반 강화

● 한국형 뉴딜과 연계한 경남형 뉴딜사업 지속 추진

- 단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목표로 경남형 뉴딜이 구상 중이며, 산업 전환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함
- 제조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서비스 업종의 육성이 필요하며, 김해시에 유치가 확정된 NHN데이터센터와 연계한 데이터 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전환 유도, 디자인산업 연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제조업이 융·복합이 필요함

● 미래형 산업 전환 및 제조업 고도화

- 경남의 현재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미래산업(수소, 탄소, 신·재생에너지 등)을 설정하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이와 연계되는 스마트시티 전략을 마련함
- 소재, 부품, 장비 중심의 산업시설 생산량 증대를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산업 전환과 연계한 분야로 나노산업, 의생명 의료기기 등의 분야로 확대함

● 경남형 스마트시티 챌린지 확대 및 기업 육성

- 2020년 이후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솔루션, 타운(단지)형, 시티형으로 구분되며, 솔루션 실증과 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고 이후 본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2020년 시티 챌린지사업에 18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김해를 포함한 4곳이 선정됨
- 스마트시티 챌린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민간기업의 솔루션을 적용하는 내용이며, 통신사 등 대기업이 주를 이루고는 있으나 벤처기업 등 창업기업의 참여도 가능함
 - 도내의 강소연구개발특구의 벤처창업, 연구소기업 육성 등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스마트시티 추진기반 확보

● 스마트시티 연계 사회혁신 플랫폼 구축

- 민선7기 성과 중 도정의 도민 참여 플랫폼인 '경남 1번가'가 자리 잡은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확대한 주민 참여기반 플랫폼이 필요함
- 또한 도민의 민원을 행정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대학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해결하는 리빙랩(Living Lab) 프로세스의 안착을 통해 열린 거버넌스 확대가 필요함

● 스마트기술 관련 혁신 인재 육성(일자리 창출)

- 도내 대학 중 스마트시티 혁신 인재 양성기관은 없으나, 관련된 학과인 도시, 건축, 전기, 기계 등 전공 분야별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경남 혁신도시 오픈 캠퍼스나 지역혁신 플랫폼과 연계한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

● 경남 스마트시티 지원기구 지정·운영

- 스마트시티 기술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공공이나 민간에 연계가 중요하며, 스마트시티를 선도하기 위해 지역의 혁신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지원기구를 마련함
- 스마트시티 확산과 정책 발굴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은 10개가 지정되어 있음
- 지역대학이나 국책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변화되는 기술 수준의 점검하여 적용 가능성 검토하고 지역 수요에 맞춰 컨설팅이나 민간기업 매칭을 지원함

4. 추진시책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남형 스마트시티 추진

(1) 경남형 스마트시티(스마트리전) 추진 전략계획 수립

● 경남 스마트시티(스마트리전) 전략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 장관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국가에서 추진될 전략, 제도 정비,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를 바탕으로 경남도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경남 스마트시티 전략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경남에서 추진할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관련된 분야의 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시행함
- 광역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경남형 뉴딜 추진과 연계하여 관련 분야의 방향 정립이 필요함

● 기초지자체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수립

- 2018년 정부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이 발표된 이후 수립된 도내에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은 김해(2018)와 창원(2020)이 유일하며, 변화된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함
- 이에 앞서 도시기본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 등 시군 지자체에서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에서 제시된 스마트시티 관련 내용을 취합하여 계획의 검토가 병행되어야 함
- 도시기본계획 등에 제시된 스마트시티 전략을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을 간주할 수 있음

(2) 스마트시티 통합 안전망 구축

● 경남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 현재 시군 단위로 확산하고 있는 ‘CCTV 관제센터’의 통합 광역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서 행정구역의 한계를 넘어 시군 및 광역 간의 지원체계를 마련함

- 방법·방재·교통 등 개별서비스를 경남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하고 112, 119 등 긴급출동과 재난 상황 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함
- 최근 전남, 강원, 충청도가 광역도 단위로 국토부 공보사업에서 지원을 받았음

● 시군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확대

- 정부에서는 매년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양산(2015), 김해(2017), 창원·진주(2019) 사천·남해(2020)에서 선정됨
- 119 종합상황실(소방서), 재난종합상황실(지자체), 112종합상황실(경찰서) 등의 기능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음

(3) 부처별·분야별 스마트시티 정책사업 발굴 추진

● 테마형 스마트시티 추진

- 도내 관광지, 전통시장, 도시재생 대상지(주거지, 상업지역) 등 지역별로 특화된 공간을 중심으로 적용 가능한 스마트시티 기술(솔루션)을 발굴하여 적용방안을 마련함
- 초기 단계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일부 기술 수준만 접목하고 장기적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와 같은 형태의 사업으로 구상함

●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확산

- 도내 도시재생사업 중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시도는 있으나,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을 추진한 대상지는 없으며, 신규로 준비되는 도시재생 대상지 중에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이 가능한 대상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제안함
- 스마트시티 관련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선도사례로 육성

2) 경남형 스마트시티 산업기반 강화

(1) 한국형 뉴딜과 연계한 경남형 뉴딜사업 지속 추진

● 경남형 뉴딜을 통한 산업기반의 전환

- 한국판 뉴딜 추진과 함께 경남도 차원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 이외의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미래산업 분야로 진전되기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데이터와 공간을 기반으로 추진함
- 제조업과 스마트기술의 접목한 첨단 제조업의 전환은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을 통해 관련된 정책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인력 중심의 제조업 시설은 가동을 멈추지만, 스마트산단과 같이 데이터와 첨단설비를 갖춘 산업시설은 지속적인 생산을 지속할 수 있음

● 제조업 지원 서비스 업종의 육성

- 제조업 성장 한계와 저위기술 수준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 디자인, 법률, 마케팅,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이 육성이 필요함
- 스마트산단 등의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이터 분야의 기업 유치와 육성이 필요한 시점임
- 최근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새로운 지역혁신모델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의 여건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분야의 제조업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 육성이 필요함
- 수도권에 비해 벤처기업 신설이나 연구개발투자가 미흡하며,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함

(2) 미래형 산업 전환 및 제조업 고도화

● 스마트시티 연계 미래산업 육성

-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로 구분되는 스마트시티 분야는 모든 산업과 연계성이 있어 경남의 미래산업 육성과 함께 융·복합화의 과정이 필요함
- 최근 미래산업으로 발표되고 있는 수소 산업은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위험 관리와 대응을 스마트시티 기술을 통해 실시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이에 포함됨
- 경남테크노파크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김해시에 유치된 NHN데이터센터 등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나 서비스 관련 기관이 연계하여 경남 맞춤형 스마트시티 산업전략 마련을 추진함

●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한 경남 산업 맞춤형 기술 통합플랫폼 마련

- 기계소재, 항공우주, 조선해양 등 기존 산업을 육성하는 조직과 나노융합, 과학기술, 정보화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산업이 융합하고 유사 분야 산업의 복합이 필요한 시점임
- 나노융합을 통해 발굴되는 부품 소재를 기계나 항공우주 부품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기업과 기업, 산업과 산업 간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제조업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 발굴과 연계를 총괄하는 기술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융·복합화된 기술개발을 지원함
- AI를 활용해 해당 분야 연구개발 수준과 필요 기술 분야 분석을 실행할 수 있음

(3) 경남형 스마트시티 챌린지 확대 및 기업 육성

● 경남형 스마트 챌린지 공모

- 도시재생, 관광개발, 지역개발, 어촌뉴딜 등 공간 단위 공모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으며, 개별 사업은 해당 공모사업의 주무 부서에 따라 제각기 추진되는 실정임
- 공간 단위 정책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가 적용되어 미래형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스마트 챌린지 공모를 연계하여 추진함
-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스마트시티 기술의 접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술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이후 공모사업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함께 사업에 참여함

– 스마트시티 담당 부서에서 별도의 예산 마련하거나, 해당 공모사업 담당 부서에서 진행함

● 스마트시티 챌린지 민간기업 육성

-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업 대부분이 현재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경남도내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 등을 추진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나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러한 전문가나 민간기업의 정착과 경남의 스마트시티를 함께 추진함
- 육성 분야는 크게 시스템과 디바이스 분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우선 육성 가능한 디바이스 분야는 도내 분포된 제조업과 연계한 육성이 가능하고, 시스템 분야는 수도권 기업 유치와 함께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육성이 필요함

3) 스마트시티 추진기반 확보

(1) 스마트시티 연계 사회혁신 플랫폼 구축

● 주민 참여 기반 플랫폼 확대

-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으로 도정에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2019년부터 도홈페이지 ‘경남1번가’를 통해 제안된 사업은 230건이 넘었음
- 단순히 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공론화, 제안사업의 찬반 토론, 도민심의 등으로 기능을 확대하여 도정 운영에 있어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

● 리빙랩 프로세스의 안착(열린 거버넌스 확대)

- 스마트시티 기술의 진전은 공공과 민간 그리고 전문가의 영역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특정 집단에서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사회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하며 실행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리빙랩 프로세스의 정착이 필요함
- 추진 과정에서 이슈의 발굴과 관리는 공공에서 역할이 가능하고, 이슈의 해결과 사업 추진과정 관리는 전문가가 주체가 될 수 있어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함

(2) 스마트기술 관련 혁신 인재 육성

● 지역대학 연합형 인재 양성 과정 운영

- 스마트시티 혁신 인재 양성기관은 전국 6개 대학이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 도시공학 전공 분야에서 연관되어 있으며, 향후 5년간(2023년) 전문 인력을 양성함
- 도내에서는 도시, 건축, 전기, 기계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대학들이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전공 분야도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한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과 연계하여 경남 맞춤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

● 세부 분야의 구분과 연계형 인재 양성을 위한 오픈 캠퍼스 확대

- 데이터와 서비스는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현재 수립 중인 정보화, 데이터, 경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이 필요함
-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는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먼저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분야로 도시, 건축, 토목 등 분야가 포함되고 ICT 인프라와 관련된 전기, 전자, 기계 등이 가능하고 두 가지 분야를 융복합하는 공간정보 인프라 분야의 육성을 추진함

(3) 경남 스마트시티 지원기구 지정 · 운영

●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공공뿐만 아니라 지역에 분포된 관련 혁신기관(출연연, 지역대학 등)과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스마트시티 정책을 만들고 도정을 지원하는 기구를 구성함
- 용역 과제나 연구를 통해 발굴되는 정책이 현장에 적용하는데 여러 단계의 검토가 필요하게 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정책이 성숙해지지만, 기술 변화 등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과 같은 상시기구 또는 분야별 정책 안전 중 스마트시티와 연계 가능한 정책의 제안하는 자문기구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지원기구의 운영 활성화

- 한국판 뉴딜이 확정되면서 산업,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연계하여 지원기구의 역할이 정해짐
- 특히 거의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스마트)과 관련된 방향으로 사업을 구성하면서 모든 분야의 정책에 대한 검토의 연계 가능성의 검토가 가능함
- 특히,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해 도민이나 전문가 그리고 공공의 구상이 실현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신규 벤처 기업이나 수도권 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병행함

제4절

상하수도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상수도 현황

(1) 상수도 보급 현황

- 경상남도의 총인구는 약 3,456천명이며 이 중 급수인구는 3,249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4.0%로 나타남(2017년 기준)
- 시부 평균은 97.5%의 상수도 보급률을 나타냄. 진주시가 99.9%로 가장 높고, 밀양시가 81.8%로 가장 낮은 상수도 보급률을 나타냄
- 군부 평균은 73.6%의 상수도 보급률을 나타냄. 창녕군이 99.4%로 가장 높고, 산청군이 46.8%로 가장 낮은 상수도 보급률을 나타냄

〈표 4-5-20〉

경남지역 상수도 보급
현황

구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률 (%)	총급수량 (천㎥/년)	직접급수량 (천㎥/년)	1인 1일당 급수량(ℓ)	1인 1일당 물사용량(ℓ)
경남	3,456	3,249	94.0	409,724	406,989	343.2	255.0
시부	2,950	2,877	97.5	357,810	355,075	338.1	255.1
창원시	1,073	1,053	98.2	124,857	122,122	317.8	234.1
진주시	352	351	99.9	54,757	54,757	427.0	312.8
통영시	140	138	98.7	17,257	17,257	343.3	258.9
사천시	117	112	95.6	16,107	16,107	393.1	323.2
김해시	551	539	97.9	61,975	61,975	314.9	247.6
밀양시	110	90	81.8	9,740	9,740	295.7	234.7
거제시	263	255	96.9	29,106	29,106	312.6	250.9
양산시	344	338	98.2	44,012	44,012	356.4	257.0
군부	506	372	73.6	51,914	51,914	381.9	254.1
의령군	29	20	69.7	3,297	3,297	452.7	240.1
함안군	72	69	95.7	8,869	8,869	353.5	268.5
창녕군	67	66	99.4	9,465	9,465	392.2	269.2
고성군	55	44	79.6	5,346	5,346	331.9	266.5
남해군	45	31	67.4	4,861	4,861	434.3	229.4
하동군	49	27	54.4	3,134	3,134	319.8	192.8
산청군	37	17	46.8	2,949	2,949	467.5	264.6
함양군	41	26	64.0	4,290	4,290	452.6	254.3
거창군	63	49	77.4	6,483	6,483	362.7	256.0
합천군	48	24	49.9	3,220	3,220	372.1	249.1

주1 : 총급수량 = 자체 생산량 + 정수수입량.

주2 : 분수량은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한 수량.

주3 : 1인 1일당 급수량은 직접급수량(총급수량 - 분수량)을 급수인구로 나눈 값.

주4 : 1인 1일당 물사용량은 '부과량(=유수수량 - 분수량)'을 급수인구로 나눈 값.

자료 : 상수도통계(환경부, 2017).

(2) 누수 현황

- 경상남도의 총급수량은 약 409,724천㎥/년이며 이 중 누수되는 용수는 77,645㎥/년으로 누수율은 19.0%로 나타남(2017년 기준)
- 시부 평균은 18.0%의 누수율을 나타내었음. 양산시가 23.4%로 가장 높고, 김해시가 13.0%로 가장 낮은 누수율을 나타냈음
- 군부 평균은 25.3%의 누수율을 나타내었음. 산청군이 39.4%로 가장 높고, 고성군이 15.0%로 가장 낮은 누수율을 나타내었음

〈표 4-5-21〉

경남지역 누수 현황

(단위 : 천㎥/년, %)

구분	총급수량	누수량	누수율
경남	409,724	77,645	19.0
시부	357,810	64,508	18.0
창원시	124,857	23,533	18.8
진주시	54,757	11,009	20.1
통영시	17,257	3,464	20.1
사천시	16,107	2,140	13.3
김해시	61,975	8,040	13.0
밀양시	9,740	1,646	16.9
거제시	29,106	4,388	15.1
양산시	44,012	10,287	23.4
군부	51,914	13,137	25.3
의령군	3,297	1,149	34.8
함안군	8,869	1,253	14.1
창녕군	9,465	2,284	24.1
고성군	5,346	801	15.0
남해군	4,861	1,668	34.3
하동군	3,134	877	28.0
산청군	2,949	1,163	39.4
함양군	4,290	1,486	34.6
거창군	6,483	1,548	23.9
합천군	3,220	908	28.2

주1 : 시설용량은 지방상수도에 한함.

주2 : 총급수량 = 자체 생산량 + 정수수입량.

주3 : 분수량은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한 수량.

주4 : 1인 1일당 급수량은 직접급수량(총급수량 - 분수량)을 급수인구로 나눈 값.

주5 : 1인 1일당 물사용량은 '부과량(=유수수량) - 분수량'을 급수인구로 나눈 값.

자료 : 상수도통계(환경부, 2017).

(3) 수도요금 현황

- 경상남도의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871.17원이며, 생산단가는 1,148.2원으로 현실화율은 75.9%로 나타남(2017년 기준)
- 경남 시부의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867.76원이며, 생산단가는 1,036.3원으로 현실화율은 83.7%로 나타남
- 경남 군부의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897.87원이며, 생산단가는 2,025.3원으로 현실화율은 44.3%로 나타남
-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통영시로 95.0%로 나타났으며, 합천군이 27.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22〉

경남지역 상수도요금
현황(2017년)

구분	총급수량 (천㎥)	연간부과량 (천㎥)	부과액 (백만원)	평균단가 (원/㎥)	생산원가 (원/㎥)	현실화율 (%)
경남	409,724	305,188	265,870	871.17	1,148.2	75.9
시부	357,810	270,644	234,854	867.76	1,036.3	83.7
창원시	124,857	92,711	77,834	839.53	1,022.1	82.1
진주시	54,757	40,114	26,779	667.57	757.9	88.1
통영시	17,257	13,016	13,607	1,045.40	1,100.0	95.0
사천시	16,107	13,242	14,077	1,063.03	1,229.2	86.5
김해시	61,975	48,734	41,708	855.83	992.0	86.3
밀양시	9,740	7,732	6,761	874.51	1,664.0	52.6
거제시	29,106	23,361	22,050	943.87	1,156.0	81.6
양산시	44,012	31,734	32,037	1,009.56	1,150.0	87.8
군부	51,914	34,544	31,016	897.87	2,025.3	44.3
의령군	3,297	1,749	1,599	914.61	2,699.0	33.9
함안군	8,869	6,736	5,921	879.01	1,913.2	45.9
창녕군	9,465	6,497	7,504	1,155.02	2,064.0	56.0
고성군	5,346	4,293	4,563	1,062.97	2,017.0	52.7
남해군	4,861	2,568	2,267	882.70	2,102.0	42.0
하동군	3,134	1,889	1,506	797.00	1,320.4	60.4
산청군	2,949	1,670	1,255	751.78	2,208.0	34.0
함양군	4,290	2,410	1,685	699.24	2,082.0	33.6
거창군	6,483	4,576	3,168	692.35	1,771.0	39.1
합천군	3,220	2,156	1,547	717.57	2,591.0	27.7

자료 : 상수도통계(환경부, 2017).

2) 하수도 현황

(1) 하수도 보급률 현황

- 경상남도의 총인구는 약 3,455천명이며 이 중 하수처리인구는 3,130천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90.5%로 나타났으며, 하수관로 보급률은 84.4%로 나타남(2017년 기준)
- 시부 평균은 94.4%의 하수도 보급률과 86.2%의 하수관로 보급률을 나타내었음. 하수도 보급률은 김해시가 99.5%로 가장 높고, 밀양시가 81.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수관로 보급률은 진주시가 99.6%로 가장 높고, 김해시가 62.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군부 평균은 68.2%의 하수도 보급률과 79.9%의 하수관로 보급률을 나타내었음. 하수도 보급률은 거창군이 81.6%로 가장 높고, 함안군이 52.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수관로 보급률은 창녕군이 91.8%로 가장 높고, 하동군 65.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m)

〈표 4-5-23〉

경남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2017)

구분	하수도보급률			하수관로보급률		
	총인구	하수처리인구	보급률	하수관로 계획연장	하수관로 시설연장	보급률
경남	3,455,540	3,130,076	90.5	16,858,184	14,231,761	84.4
시부	2,949,859	2,784,750	94.4	12,095,850	10,427,058	86.2
창원시	1,072,657	1,034,709	96.4	3,946,683	3,871,546	98.1
진주시	351,547	323,891	92.1	1,474,203	1,468,457	99.6
통영시	139,525	120,050	86.0	716,576	530,683	74.1
사천시	117,365	113,309	96.5	686,287	572,200	83.4
김해시	550,758	548,222	99.5	2,526,189	1,576,175	62.4
밀양시	110,395	89,744	81.2	970,848	747,529	77.0
거제시	263,162	217,760	82.7	626,281	568,706	90.8
양산시	344,450	337,065	97.8	1,148,783	1,091,762	95.0
군부	505,681	343,863	68.2	4,762,334	3,804,704	79.9
의령군	28,624	17,715	63.6	274,192	223,827	81.6
함안군	71,822	37,641	52.4	424,220	375,056	88.4
창녕군	66,517	47,212	70.9	467,718	429,287	91.8
고성군	55,471	34,380	63.3	479,904	303,258	63.2
남해군	45,476	35,449	77.9	675,717	509,951	75.5
하동군	49,386	34,801	70.4	462,658	303,282	65.6
산청군	36,971	25,056	67.7	577,288	460,283	79.7
함양군	40,582	31,226	76.9	596,279	492,187	82.5
거창군	63,290	51,688	81.6	377,497	325,474	86.2
합천군	47,542	28,695	60.8	426,862	382,099	89.5

자료 : 하수도통계(환경부, 2017).

(2) 하수관거 현황

- 경상남도의 하수관거 현황은 총 14.2백만km로 나타났으며, 20년을 초과한 하수관거는 약 5.5백만km로 전체 하수관거중 약 38.3%의 비중을 차지함(2017년 기준)
- 경남도에서 창원시가 3.9백만km로 가장 많은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경남의 27.2%에 해당함. 창원시 내의 20년을 초과한 하수관거는 2.6백만km로 창원시 하수관거의 68.4%를 차지함
- 고성군은 0.3백만km로 가장 적은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경남도의 2.1%에 해당함. 고성군 내의 20년을 초과한 하수관거는 1.5만으로 고성군 하수관거의 4.9%를 차지함

(단위 : km, %)

〈표 4-5-24〉

경남 시군별 노후관로
현황(2017년 기준)

구분	합계	20년 초과		20년 이하		비고
		연장	비율	연장	비율	
경남	14,231,761	5,450,986	38.3	8,780,775	61.7	
시부	10,427,058	5,132,859	49.2	5,294,199	50.8	
창원시	3,871,546	2,649,004	68.4	1,222,542	31.6	
진주시	1,468,457	708,172	48.2	760,285	51.8	
통영시	530,683	294,450	55.5	236,233	44.5	
사천시	572,200	303,285	53.0	268,915	47.0	
김해시	1,576,175	565,862	35.9	1,010,313	64.1	
밀양시	747,529	404,010	54.0	343,519	46.0	
거제시	568,706	208,076	36.6	360,630	63.4	
양산시	1,091,762	—	—	1,091,762	100.0	
군부	3,804,704	318,127	8.4	3,486,576	91.6	노후화 관로 증가추세
의령군	223,827	—	—	223,827	100.0	
함안군	375,056	—	—	375,056	100.0	
창녕군	429,287	6,273	1.5	423,014	98.5	
고성군	303,258	14,915	4.9	288,344	95.1	
남해군	509,951	7,962	1.6	501,989	98.4	
하동군	303,282	—	—	303,282	100.0	
산청군	460,283	—	—	460,283	100.0	
함양군	492,187	252,872	51.4	239,315	48.6	
거창군	325,474	36,106	11.1	289,368	88.9	
합천군	382,099	—	—	382,099	100.0	

자료 : 하수도통계(환경부, 2017).

(3) 하수도 요금 및 징수 현황

- 경남 하수도 평균단가는 505.0원/톤이고, 처리원가는 1,359.9원/톤으로 현실화율은 37.1%로 나타났음(2017년 기준)
- 시부 평균 하수도 평균단가는 531.2원/톤이고, 처리원가는 1,231.9원/톤으로 현실화율은 43.1%로 나타났음
- 군부 평균 하수도 평균단가는 193.7원/톤이고, 처리원가는 2,883.4원/톤으로 현실화율은 6.7%로 나타났음

〈표 4-5-25〉

경남 하수도
요금 현황(2017년)

구분	연간부과량 (천톤) (A)	부과액 (백만원) (B)	평균단가 (원/톤) $C=(B/A*1,000)$	총괄원가 (백만원) (D)	처리원가 (원/톤) $E=(D/A*1,000)$	현실화율 (%) $F=(C/E*100)$
경남	327,956	165,623	505.0	445,979.1	1,359.9	37.1
시부	302,539	160,699	531.2	372,692.0	1,231.9	43.1
창원시	124,562	59,037	473.9	98,898.0	793.9	59.6
진주시	43,497	20,099	462.0	61,814.0	1,421.1	32.5
통영시	11,783	2,639	223.9	18,607.0	1,579.1	14.1
사천시	10,556	4,643	439.8	24,495.0	2,320.4	18.9
김해시	51,605	40,930	793.1	68,443.0	1,326.3	59.8
밀양시	7,931	3,254	410.2	25,972.0	3,274.7	12.5
거제시	17,229	6,831	396.5	31,089.0	1,804.5	22.0
양산시	35,376	23,266	657.6	43,374.0	1,226.0	53.6
군부	25,417	4,924	193.7	73,287.1	2,883.4	6.7
의령군	1,424	220	154.4	2,199.0	1,544.2	9.9
함안군	3,006	878	292.0	5,734.0	1,907.5	15.3

구분	연간부과량 (천톤) (A)	부과액 (백만원) (B)	평균단가 (원/톤) $C=(B/A*1,000)$	총괄원가 (백만원) (D)	처리원가 (원/톤) $E=(D/A*1,000)$	현실화율 (%) $F=(C/E*100)$
창녕군	4,654	1,198	257.4	16,641.0	3,575.6	7.1
고성군	2,847	663	232.9	4,652.0	1,634.2	14.3
남해군	1,830	167	91.2	1,357.0	741.5	12.2
하동군	1,500	254	169.3	3,225.0	2,150.0	7.8
산청군	1,556	166	106.6	1,334.0	857.3	12.4
함양군	2,490	358	143.6	9,178.1	3,686.0	3.9
거창군	4,162	764	183.5	16,885.0	4,056.9	4.5
합천군	1,948	256	131.4	12,082.0	6,202.3	2.1

자료 : 하수도통계(환경부, 2017).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인구, 거주 및 이동성 변화

- 우리나라 인구는 2010년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으로 증가한 이후 2060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노령화 인구(65세 이상)는 2010년 545만명에서 2049년까지 1,800만명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 노령화에 따른 용수수요량 감소 예상
- 2030년 기준 인구감소 시작, 1·2인 가구 증가로 외식 증가 등 식생활 변화 및 가구 이동성 증가

(2) 홍수·가뭄 피해 증가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물부족

- 지구의 온도 상승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로 홍수·가뭄 피해가 급증하는 등 물관리의 불확실성 증대
- 물수요관리 활성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빈발과 수질오염으로 사용 가능한 깨끗한 물이 줄어들면서 향후 물부족 문제가 심화할 전망

(3) 상업시설 상하수도 이용량 증가

- 물이용 효율 향상, 생활용수 사용량 감소 등으로 1인당 물소비량 감소 추세(OECD, 2015)
- 1·2인 가구 증가와 교통발달에 따른 인구 이동성 증가 등으로 상가 등의 영업용 수도사용량이 증가하고 따라서 하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인구 활동의 변화로 수도사용량이 변경될 수 있음

(4) 생공용수 부족 전망

- 용수수급 전망 계획의 목표연도인 25년 기준 용수수급 검토 결과 생활용수는 창녕군,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함안군이 부족하고, 공업용수는 창녕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음(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 및 공업) 변경(2015.8))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상하수도 부문 비전

-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2) 추진전략

- 상하수도 부문 핵심지표

〈표 4-5-26〉

상하수도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누수율	19.0%	5.0%	4.0% 이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75.0%	95.0%	97.0% 이상
하수도보급률	90.5%	91.1%	92.0% 이상

- 안전한 수돗물의 지속가능한 공급

- 깨끗하고 풍부한 수원 확보로 가뭄 등 기후변화와 재해 시에도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
- 군 지역 및 도서지역 보급률 확대

- 안심하고 믿고 마시는 수돗물

- 수도시설 정비로 수질 저하를 방지하고, 고도화된 선진 정수기술의 도입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회복
- 노후 관로 정비를 통한 누수율 저감

- 도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상하수도 사업

- 상하수도사업 정보의 투명성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지속가능한 상하수도사업체계 구축
- 하수도 악취 저감 및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4. 추진시책

1) 상수도 분야

- 농·어촌·도서지역 지방상수도 보급률 개선
 -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개선하고 소규모 수도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농·어촌지역 수도공급 안정적 확보 추진
-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
 -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관망은 관망 노후도 조사 및 평가를 통한 정비계획 실시
 - 노후도 및 누수율이 높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
-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수도요금 현실화 목표
 - 구조개편, 경쟁 합리화 등 효율성 개선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 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인 수도요금 현실화 목표
 - 지자체별 현실화 목표 설정 및 시행 결과 평가 제도화

2) 하수도 분야

- 하수도 보급률 확대
 - 하수처리장 신증설
 - 하수관로 확대
-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확대
- 경남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정비사업 확대
 - 경남 노후 하수관로 상태진단 지속적 추진
 - 결함 하수관로의 교체 및 개보수 동 정비 및 유지관리 지속적 추진
- 하수도 악취 저감 사업 시행
-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관리제도 도입
 -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공공관리 편입 유도 및 확대
- 재정 여건에 따른 하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

제5절

보건의료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보건의료 자원

● 인구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 증가

- ‘20.8월 기준 경남의 고령인구 비율은 17.1%로 고령사회에 해당함⁴⁵⁾
 - 경남의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의 16.1%보다 높으며 17개 시도 중 8순위임
 - 경남은 ‘16년부터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졌음
- ‘18년 기준 경남의 치매 유병률은 10.52%, 치매 환자 수는 53,653명에 이름⁴⁶⁾
 - 경남의 치매 유병률은 전국 10.16%보다 높은 수준이며 치매 환자 수는 서울, 경기,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4순위임
 - 서부경남의 군 지역(남해군, 합천군, 산청군, 함양군, 하동군, 거창군)과 의령군의 치매 유병률이 12%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17년 기준 경남의 치매 관리비용은 105억 4,03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됨

● 보건의료 인프라의 부족

- ‘19.9월 기준 경남에는 종합병원 26개소, 병원 317개소, 의원 3,342개소, 보건기관 등 415개소, 약국 1,272개소가 있음
 -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70% 이상이 창원권, 김해권에 편중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서부경남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임
- ‘18년 기준 경남의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6.5%(22개소), 병상 수는 10.5%(6,385병상) 수준에 그침⁴⁷⁾
 - 도부에서 보면 경남은 경기, 전북에 이어 3번째로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21.7%), 강원(19.8%), 세종(12.5%), 전남(10.2%), 경북(10.2%) 지역이 상대적으로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높음

45)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KOSIS 접속일 2020.1.29.).

46) 중앙치매센터(www.nid.or.kr/main/main.aspx), (접속일 2020.1.28.).

47)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현황(KOSIS 접속일 2020.1.28.).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함.

〈표 4-5-27〉

지역별 요양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기관 등	약국
전국	355	3,650	1,587	64,729	3,498	22,418
서울	57	465	122	17,047	35	5,079
부산	29	363	189	4,802	34	1,530
대구	16	194	67	3,557	25	1,274
인천	19	175	72	3,122	65	1,093
광주	23	242	64	1,898	16	675
대전	10	116	52	2,114	20	729
울산	8	91	42	1,265	24	408
세종	1	9	6	341	18	120
경기	63	721	349	14,348	338	4,915
강원	15	83	33	1,512	244	658
충북	13	100	51	1,713	268	661
충남	13	152	89	2,151	401	923
전북	13	192	86	2,254	405	904
전남	23	199	89	1,801	565	802
경북	20	213	119	2,609	560	1,081
제주	6	18	10	853	65	294
구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기관 등	약국
경남 (바울)	26 (100.0)	317 (100.0)	147 (100.0)	3,342 (100.0)	415 (100.0)	1,272 (100.0)
창원권 (바울)	11 (42.3)	110 (34.7)	53 (36.1)	1,310 (39.2)	90 (21.7)	461 (36.2)
진주권 (바울)	4 (15.4)	48 (15.1)	21 (14.3)	622 (18.6)	126 (30.4)	244 (19.2)
통영권 (바울)	3 (11.5)	29 (9.1)	8 (5.4)	385 (11.5)	71 (17.1)	151 (11.9)
김해권 (바울)	8 (30.8)	119 (37.5)	60 (40.8)	884 (26.5)	44 (10.6)	347 (27.3)
거창권 (바울)	0 (0.0)	11 (3.5)	5 (3.4)	141 (4.2)	84 (20.2)	69 (5.4)

주1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등 : 보건기관, 조산원

주2 :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는 권역경계와 인구 수, 이동시간, 의료이용률, 시도 공급계획을 기준으로 70개의 지역 진료권을 구분함. 경남은 창원권, 진주권, 통영권, 김해권, 거창권, 총 5개의 진료권으로 구분됨.

*창원권 : 창원, 의령, 함안, 창녕 *진주권 :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통영권 : 통영, 거제, 고성

*김해권 : 김해, 밀양, 양산 *거창권 : 거창, 함양, 함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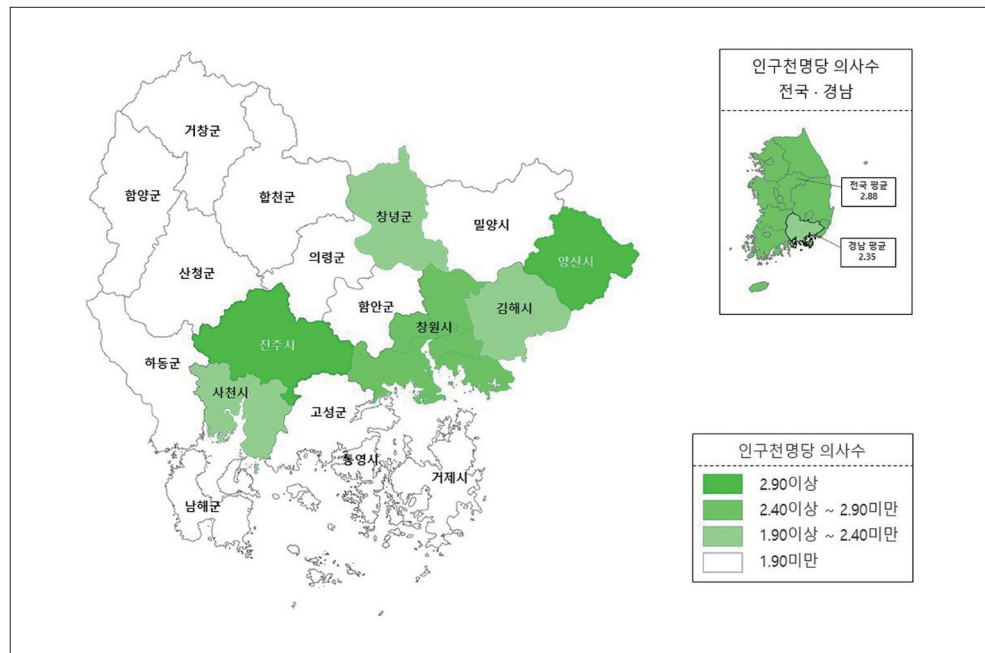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 ‘18년 기준 경남의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는 2.35명으로 전국 2.8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⁴⁸⁾
- 서울이 4.2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광주 3.58명, 대전 3.49명, 대구 3.31명, 부산 3.27명 등의 순임. 경남은 전국 11순위, 도부 5순위에 해당함
- 시군별로 보면 함안군(1.40명), 거제시(1.55명), 하동군(1.56명), 함양군(1.62명), 남해군(1.68명), 산청군(1.72명), 함천군(1.79명) 등의 순으로 의료기관 의사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48)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KOSIS 접속일 2020.1.29.).

〈그림 4-5-2〉

경남 인구천명당
의사 수



- ‘18.9월에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 보건소 외 지역 보건기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게 나타남⁴⁹⁾
 - 건강생활지원센터(3개소) 인지도 17.2%, 이용 경험 6.9%
 - 정신건강복지센터(20개소) 인지도 14.8%, 이용 경험 3.8%
 - 치매안심센터(20개소) 인지도 17.9%, 이용 경험 6.1%

2) 보건의료 이용

● 보건의료의 지역 간 격차

- 서부경남⁵⁰⁾은 의료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로 자원이 부족하여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임(이연상 외, 2018)
- 서부경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동부경남과 비교할 때 장애인 비율, 수급권자 비율이 높음
- 서부경남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모두 진주시에 위치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또한 서부경남의 병상 수는 경남 전체의 1/5 수준에 그침
- 서부경남의 군 지역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가 1.56명~1.86명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전국평균 2.88명)
-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동부경남, 중부경남에 집중되어 있어 서부경남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18년 기준 인구10만 명당 경남의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1.6명으로 전국 3.6명에 크게 못 미침⁵¹⁾

49) 경상남도(2019), 제7기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2022년), p48.

50) 서부경남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51)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현황통계(KOSIS 접속일 2020.9.16.).

● 각종 의료취약지역 지정 및 분류⁵²⁾

- 내과(2차) 의료취약지 1개 군 지역

– 산청군

- 외과(2차) 의료취약지 4개 군 지역

–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 소아청소년과(2차) 의료취약지 5개 군 지역

– 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 분만 의료취약지 5개 군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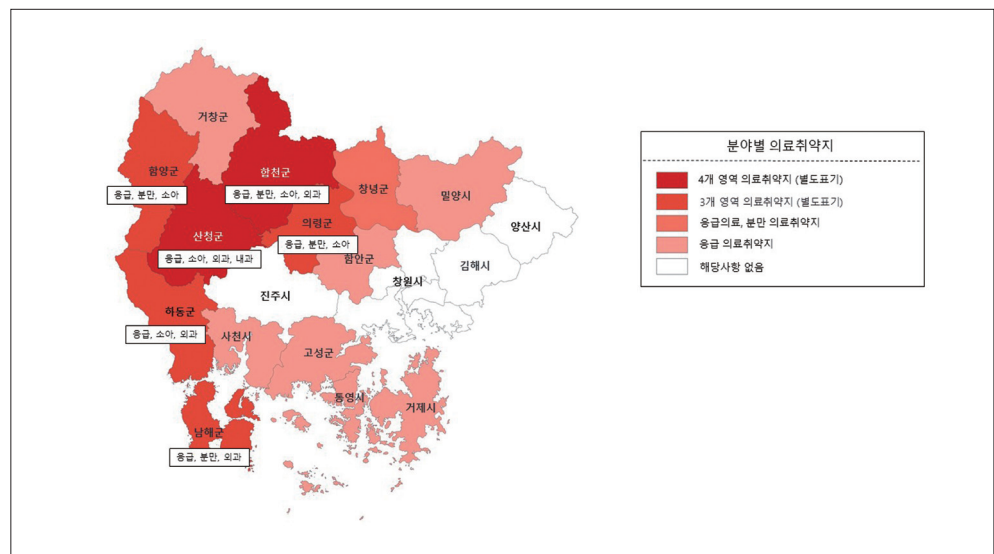
–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응급의료취약지 14개 시군 지역

– 밀양시, 거제시, 고성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함안군, 거창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그림 4-5-3〉

경남 분야별
의료취약지



- (참고) 접근성지표와 취약인구 비율을 활용한 응급의료 취약지역 평가 결과⁵³⁾

– ‘매우 취약’ 지역 : 산청군, 하동군, 합천군

– ‘취약’ 지역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의령군, 창녕군, 함양군

– 종합병원급 의료서비스 공급 우선지역 : 사천시(종합병원 10km 바깥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고령인구가 3만 명 이상)

52)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2018), 2018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53) 손재선·신문수(2020), 응급의료 취약지도로 본 농촌 vs 도시, 국토이슈리포트13호, 국토연구원.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제한

- '18년 기준 경남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11.1%로 충남(13.0%), 인천(11.6%)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임⁵⁴⁾
- '16~'17년 경남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14.7%, 1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18년 11.1%로 다소 개선됨
- 시군별로 보면 거제시(13.7%), 남해군(13.6%), 통영시(13.6%), 고성군(13.4%), 밀양시(12.3%), 창원시(12.3%) 등의 순으로 미충족 의료율이 높게 나타남
- 높은 관외 진료비와 낮은 입원환자 자체충족률⁵⁵⁾
- '17년 기준 경남의 진료비 총액은 약 5조 5,329억 원이고 이중 약 1조 2,618억 원(22.8%)의 진료비가 경남 외부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의 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은 77.9%이고 치료가 어려운 전문진료질환군의 경우 50.3%로 전국 중하위권에 해당함(서울 입원환자 87.1%, 전문진료 94.1%)
- 시군별로 보면 입원환자의 자체충족률이 낮은 지역은 산청군, 함안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합천군 등의 순으로 주로 서부경남의 군 지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3) 도민 건강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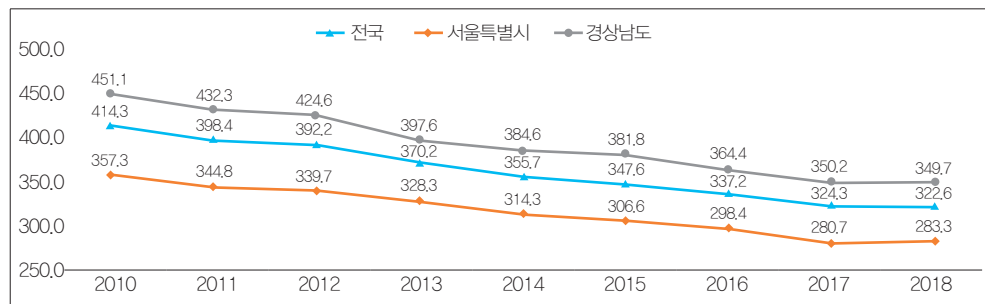
● 암, 심장질환, 알츠하이머병 등 높은 연령표준화 사망률

- 경남의 표준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349.7명으로 전국 322.6명, 서울 283.3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남은 울산(355.3명), 충북(352.6명), 부산(350.8명)에 이어 전국 4순위에 해당함

단위:명

〈그림 4-5-4〉

연도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추이



- 경남은 10대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중 총 8개 항목에서 전국 사망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⁵⁶⁾
- '18년 기준 경남의 악성신생물(암)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101.5명, 심장질환은 44.6명, 알츠하이머병은 8.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 만성하기도질환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전국 2순위, 뇌혈관 질환은 전국 4순위에 해당하며 당뇨병, 간 질환, 고의적 자해가 각각 전국 6순위로 높게 나타남

5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KOSIS 접속일 2020.1.30.).

55) 경상남도(2019), 제7기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2022년), pp.24~25.

56) 통계청, 2018년 사망원인통계(보도자료 2019.9.24.).

- 경남의 표준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349.7명으로 전국 322.6명보다 높고, 울산(355.3명), 충북(352.6명), 부산(350.8명)에 이어 전국 4순위에 해당함
- 경남은 10대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중 총 8개 항목에서 전국 사망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⁵⁷⁾

(단위 :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

〈표 4-5-28〉

2018년 시도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322.6	283.3	350.8	332.7	339.4	338.0	316.2	355.3	318.2	306.8	347.9	352.6	344.3	330.0	348.3	348.5	349.7 (4위)	326.1
암	90.3	85.4	100.3	91.1	91.8	95.2	85.0	95.3	92.4	86.7	92.8	94.1	91.3	92.0	86.0	91.3	101.5 (1위)	91.3
심장질환	32.3	28.0	40.8	38.5	34.2	30.2	26.1	39.8	24.8	29.5	34.0	30.4	30.7	24.4	31.2	35.1	44.6 (1위)	26.9
폐렴	21.2	14.7	20.3	21.4	23.8	28.5	17.0	20.7	19.2	19.4	24.9	28.5	20.6	20.4	29.8	30.3	20.1	16.8
뇌혈관 질환	23.3	21.2	25.1	26.4	23.6	28.4	24.9	30.6	29.4	22.8	24.2	24.8	23.0	23.4	20.6	21.1	27.4 (4위)	18.5
고의적 자해	22.6	18.9	23.0	23.1	24.3	23.1	24.5	24.2	24.5	21.0	26.1	26.7	29.8	25.8	23.5	24.3	24.8 (6위)	27.3
당뇨병	9.1	8.4	11.1	11.6	8.7	9.3	10.9	14.1	11.1	8.9	8.4	6.8	6.6	10.5	8.8	8.5	10.6 (6위)	7.1
간 질환	9.1	7.7	10.8	10.1	10.7	7.4	6.7	9.0	4.5	8.0	12.6	10.0	10.7	9.2	10.8	10.2	10.3 (6위)	11.9
만성 하기도질환	6.1	4.0	7.1	6.6	5.0	7.3	5.5	10.9	6.7	5.8	6.9	5.5	7.2	7.2	6.9	6.6	7.6 (2위)	6.0
알츠하이머 병	5.1	4.5	8.7	5.4	3.7	7.0	6.6	4.4	7.6	3.1	3.8	5.8	6.7	7.0	3.7	3.8	8.8 (1위)	5.2
고혈압성 질환	5.3	4.2	7.0	5.4	7.4	4.7	4.5	7.9	7.0	6.2	3.4	4.8	4.6	5.3	4.4	5.8	4.3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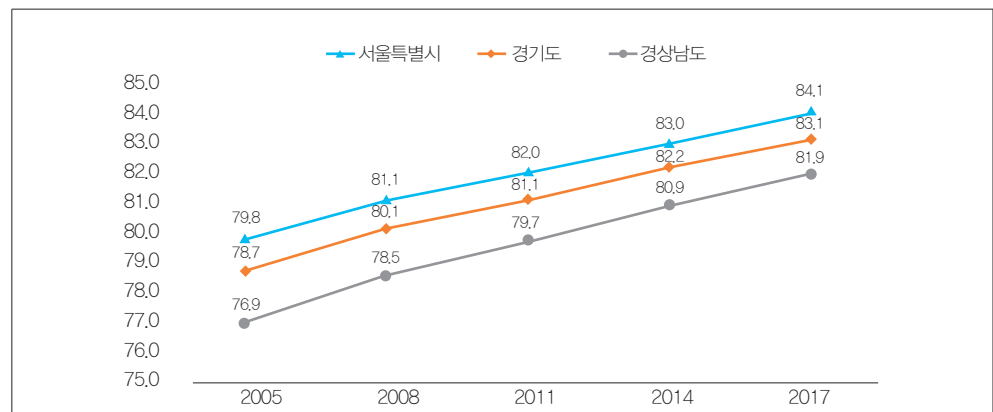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9), 「2018년 사망원인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함.

● 건강수명, 기대수명 전국 최하위 수준

- 경남의 건강수명은 64.3세로 전국에서 가장 짧고, 특히 하동군, 남해군, 함양군의 건강수명은 전국 최하위권에 속함⁵⁸⁾
- '17년 기준 경남의 기대수명은 81.9세로 부산, 충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짧음⁵⁹⁾

단위: 세

〈그림 4-5-5〉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 경기도 간
기대수명 비교 현황

57) 통계청, 2018년 사망원인통계(보도자료 2019.9.24.).

58) 박진욱(2018), 지역별 건강불평등 현황,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토론회 자료집.

59) 통계청, 인구동향과(생명표).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 ‘19년 WHO가 발표한 10대 건강위협요인은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비감염성질환, 인플루엔자 국제적 유행, 취약한 환경, 항균제 내성, 에볼라 및 고위험성 병원균, 일차보건의료 취약성, 예방접종 거부, Dengue, HIV로 나타남⁶⁰⁾
- 보건의료 분야의 미래 트렌드 변화를 바탕으로 경남지역의 미래변화를 예측해 보면 크게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급증’,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심화’,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감염병, 미세먼지 등 미래질병의 확산’으로 요약될 수 있음

1)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급증

●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 경남은 ‘24년 이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4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⁶¹⁾
- 노년부양비는 ‘18년 21.0에서 ‘30년 41.9, ‘45년 78로 증가하고, 고령화지수 역시 ‘18년 110.6에서 ‘30년 273.6, ‘45년 435.1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다시 말해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인구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치매 유병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로 변화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17년 기준 우리나라 만성질환자는 약 1,73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3.6%에 이룸⁶²⁾

●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 만성질환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개인적·사회적 부담 또한 커지게 됨
- 만성질환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환자는 입원·퇴원을 반복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레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됨
- 고혈압 및 당뇨병 진료비는 17년 5조 3,363억 원으로 10년에 비해 38.9% 증가함⁶³⁾
- 실제 우리나라의 1인당 경상의료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6.0%씩 증가하여 OECD 연평균 증가율 1.8%보다 3.3배 높은 상황임⁶⁴⁾
- 경남의 만성질환 급여현황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0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가 개편된 ‘14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음.⁶⁵⁾ 향후

60) 채수미(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미래 질병 대응을 위한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1)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기준일 : 2019.6.27.).

62) 보건복지부 외(2019),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2차개정).

63) 보건복지부 외(2019),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2차개정).

64) 보건복지부,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 OECD 「보건통계 2019」결과 발표(보도자료 2019.7.22.), 참고로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 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함.

65)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KOSIS 접속일 2020.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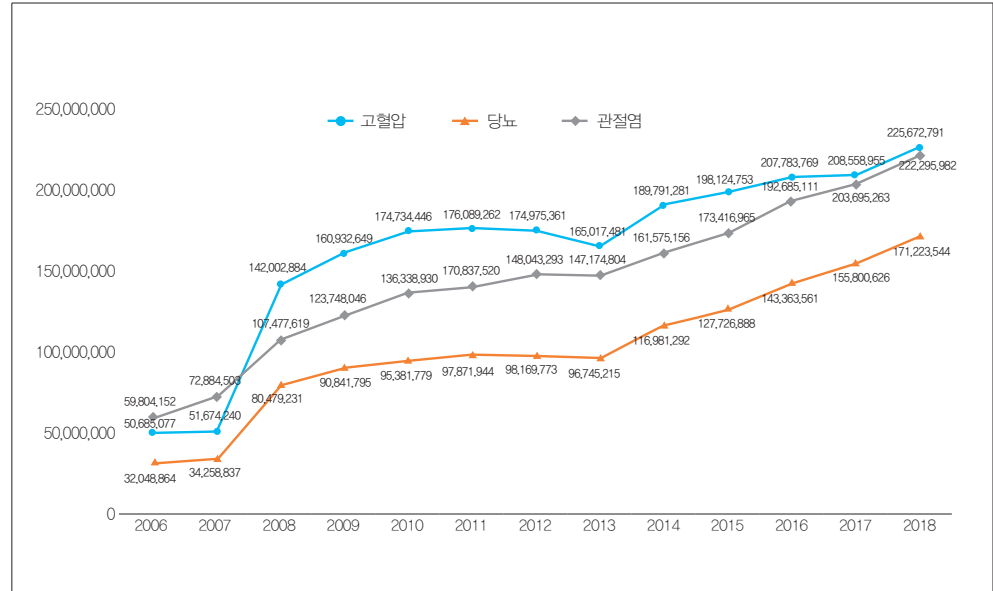
인구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만성질환 급여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18년 기준 경남지역의 고혈압 급여는 약 2,257억 원, 관절염은 2,223억 원, 당뇨는 1,712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1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임

단위: 천원

〈그림 4-5-6〉

경상남도 만성질환
급여현황



2)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심화

● 소멸고위험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동화 현상

-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병원 운영이 어려우므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큼
-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은 정주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인구감소는 병원 신축을 어렵게 하여 지방소멸이 가속될 가능성이 큼
-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교통망의 발달에 따라 관외 진료비 지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
- 보건의료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소멸고위험지역에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에 대한 원격진료, 찾아가는 서비스 등 새로운 정책 개발이 요구됨

3)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 분절된 보건, 의료, 복지 등의 공급체계로는 급증하는 의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없음. 의료비 지출의 증가가 정부의 재정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임
- 노인 진료비 비율은 '07년 28.2%에서 '18년 40.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⁶⁶⁾

6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그림으로 보는 사회보장 2019.

-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도민의 건강권,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일명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임

–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임

-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성, 통합성,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의미하며 이 시스템의 핵심은 네트워크로 볼 수 있음

– 커뮤니티케어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 복지, 요양 등 분야가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민참여를 통한 사례발굴과 비공식적인 돌봄 창출이 핵심적인 요소임⁶⁷⁾

●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자체는 정부 정책의 단순 집행자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보건 의료 정책을 수립·집행·평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 ‘19.1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서는 지역 진료권 구분과 권역책임의료기관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⁶⁸⁾

– ‘1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역시 커뮤니티케어 추진의 핵심적인 주체는 시군구 지자체임

- 과거 가족에 의한 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되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care by the community), 즉 ‘돌봄의 지역화’ 시대를 맞이하게 됨

– 돌봄의 지역화 시대, 지방정부는 보건과 의료의 연계·협력을 끌어내고 민관협력의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4) 감염병, 미세먼지 등 미래 질병의 확산

● 신종 감염병 확산의 세계화

- 국가 및 지역 간 이동이 일상화된 가운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현상(팬데믹, pandemic)은 더욱 심화될 것임

– ‘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2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비롯하여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등

- 특히 ‘19.1월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발생지인 중국 우한지역을 넘어서 한국,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란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세계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67) 이연생(2018),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경남 커뮤니티케어 추진방안, 경남발전 145호, p72.

68) 보건복지부(2019),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2019.11.).

-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의 세계화 현상에 대비하여 도민, 지방정부, 중앙정부, 나아가 국가 간 유기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문제에서 파급되는 건강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환경성 질환자 수는 '18년 기준 약 875만 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19년에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됨⁶⁹⁾
- 이와 같은 환경문제로 인한 미래 질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제 간 연구와 다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모든 정책에서 건강(Health in All Policies)의 실현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도민의 건강생활이 보장되는 함께 누리는 보건 의료

- 보건 의료 분야의 지역 간 불평등, 계층 간 불평등 해소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두루 누리는 보건 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경남도민의 건강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임
- (성과지표1) '기대수명' 전국 최하위에서 전국 평균치 수준으로 향상(통계청, 2017)
 -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함
 - 경남 81.9세 → 87.0세('40년 전국 평균값 86.8세)
- (성과지표2) '건강수명' 전국 최하위에서 전국평균 수준으로 향상⁷⁰⁾
 - 건강수명은 평균수명 중 건강하게 삶을 유지한 기간을 의미함(현재 공식화된 통계치 없음)
 - 경남 64.3세 → '40년 전국 평균값 수준

2) 추진전략

● 보건 의료 부문 핵심지표

〈표 4-5-29〉

보건 의료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기대수명	81.9세	85세	87세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16.6년	14.6년	12.6년

● 건강형평성 제고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간 불평등 해소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계층 간 불평등 해소

6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그림으로 보는 사회보장 2019.

70) 박진욱(2018), 지역별 건강불평등 현황,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토론회 자료집.

● 보건의료의 예방적 기능 강화

-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강화
-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

●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 보건의료와 복지정책의 융합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기반구축
-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취약지 사망률 감소

4. 추진시책

1) 건강형평성 제고

(1)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간 불평등 해소

● 서부경남 공공병원 확충

- 진주, 사천, 남해, 하동 등 서부경남지역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거점 공공병원 설립 추진
- 의료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확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민선7기 도정 4개년 계획에 포함된 정책임
- 서부경남의 인구학적 특성과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 지역 간 건강 수준 격차 등을 고려할 때 거점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함
- 공공병원의 주요 기능은 지역 간 보건의료 이용의 격차 해소,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지원, 민간에서 꺼리는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적정가격의 적정진료 선도, 지역 보건기관과 연계한 건강증진사업, 대학병원과 연계사업 등으로 요약됨⁷¹⁾

●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

- 집중 재활 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을 위한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 및 설립 추진
- 권역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된 정책으로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창원경상대병원에 건립할 계획임
- 경남지역은 장애아동 재활 의료 수요대비 인프라가 부족하여 타지역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필요함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주요 기능은 경남권 장애아동 재활 의료의 컨트롤타워 기능, 양질의 재활 의료서비스 제공, 교육 및 돌봄 등 통합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으로 요약됨⁷²⁾

71) 이언상 외(2018), 서부경남권 보건의료 현황과 주민·전문가 인식에 관한 연구: 거점 종합병원 확충 타당성, 경남연구원.

72) 이언상 외(2019),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기초연구, 경남연구원.

●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강화

-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 및 농어촌지역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보건기관의 진료 기능 강화
 -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지역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ICT를 활용한 원격협진시스템을 구축함(의료법 개정 상황에 따라 의사-환자 원격의료 추진)
 - 노후화된 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 의료장비 지원, 의료인력 지원을 추진함
 - 노인성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찾아가는 검진 버스의 대상 지역, 검진과목, 검진 인원을 확대하여 운영함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의 민간의료기관 운영 지원 확대
 - 경남의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은 분만 의료취약지이며, 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⁷³⁾
 -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민간의료기관의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의료시설 및 장비비 지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119와 연계한 병원이송 서비스 등의 지원이 필요함
-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가, 민간의료기관, 도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실시함
 - 민관협의체는 경남의 공공보건의료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도정을 지원함
 - 협의체 위원은 도의회, 공공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의료단체, 학계, 시민단체, 시군 보건소, 도민(공모) 등으로 구성됨
 - 형식적인 협의체 운영이 되지 않도록 복지보건국장이 주재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함

(2)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계층 간 불평등 해소

●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서부경남 추가 건립을 통한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경남지역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음
 - 서부경남권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추가 건립이 필요함
-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 '18년 기준 경남지역 외국인주민의 수는 124천 명에 이르며 이 중 외국인노동자는 44천

73)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2018), 2018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명임⁷⁴⁾. 외국인주민은 저출생·고령화시대, 우리 사회의 핵심 인재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 건강보험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의 진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 및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 365안심병동, 301네트워크지원사업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함
- 단순 의료비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퇴원계획을 포함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및 돌봄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커뮤니티케어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2) 보건의료의 예방적 기능 강화

(1)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강화

● 심뇌혈관질환 관리 강화

-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기능 강화
- '18년 기준 경남의 심장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전국 1위이며 뇌혈관질환은 전국 4위로 매우 높은 상황임
- 보건소를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등록시스템을 도입하고 ICT를 활용하여 수시 건강 체크 및 교육을 함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단의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심뇌혈관질환 연구기능과 보건소 기술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한 소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취약인가가 집중된 도심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 활성화가 중요함
-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읍면동 건강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주민을 조직화하고 그 활동을 활성화함
-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아동·청소년 비만, 흡연, 음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경남지역 청소년의 비만율은 '12년 5.7%에서 '19년 11.0%로 급증함⁷⁵⁾. 또한 청소년의 금연 시도율은 낮고 현재 음주율은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
- 지역의료기관 및 전문가와 연계하여 아동·청소년기부터 철저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의무적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 등)

7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KOSIS 접속일 2020.4.6.).

75)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KOSIS 접속일 2020.4.13.).

(2)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

●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도내 감염병 전문 의료인력 확충
 - 현재 도내 감염병 전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경남지역 5개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업무를 명문화하고 감염병 전문 의료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 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 분야별 세분된 보건의료지원조직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 현재 경남에 있는 보건의료지원조직으로는 '19년에 발족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비롯하여 경남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지역암센터, 금연지원센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이 있음
 -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저질환에 대한 예방이 중요한데, 현재의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지원체계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과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사업 효과성 저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킴

3) 커뮤니케이터 시스템 구축

(1) 보건의료와 복지정책의 융합을 통한 커뮤니케이터 기반구축

● 권역별 자체 완결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읍면동(건강위원회, 건강생활지원센터) – 시군(보건소, 병·의원) – 지역진료권(종합병원) – 권역진료권(대학병원) 간 중·횡적 네트워크 구축
 -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는 동부경남, 중부경남, 서부경남 권역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내에서 자체 완결적인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 공공보건시설부터 대학병원까지 연계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임
 - 종단적 통합 의료벨트에 분야를 초월한 횡단적인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와 커뮤니케이터 정책의 연계성 강화

- 경남지역의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와 복지·요양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남형 커뮤니케이터 시범사업의 통합적 추진
 - 경남지역보건의료계획과 경남지역사회보장계획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공동모니터링 및 공동연수 등을 실시함
 - 읍면동 단위 건강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합운영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함
 - 종합적인 치매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함
 - 지역사회 중심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함

(2)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취약지 사망률 감소

●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

- 외상전용시설과 전문의료인력을 갖추어 권역외상센터를 설치·지정을 통해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상전용 치료기관으로 현재 경상대학교병원 내 설치를 추진 중에 있음(중환자병상 20개, 수술실, 소생실, 외상병실 20병상 등)
- 경남지역 권역외상센터 설치 및 지정을 통해 외상환자의 예방 가능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닥터헬기 도입 및 운영

- 권역외상센터 지정과 함께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도입 및 운영
- 닥터헬기는 응급의료장비를 장착한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로서 거점 의료기관에 배치하여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이송이 필요한 환자를 지원함⁷⁶⁾
- 경남은 중증외상 및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매우 높고 14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음. 의료 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넓은 면적, 도서지역 등을 고려할 때 닥터헬기가 배치가 필요함
- ※ 현재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경기도에 닥터헬기가 배치되어 있음

● 응급의료기능 강화

-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 시군이 지정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인력 인건비, 의료장비 등을 지원함
- 보건소 등 지역 보건기관이 진료 및 응급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전환
- 인구감소 등의 이유로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응급의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는 지역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긴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함
- 지역 보건기관에 우수한 의료인력 유치를 위한 임금 등 인센티브를 강화함

76) 보건복지부,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 경기도에 뜬다!”(보도자료 2018.5.3.).

제6절

사회복지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시도별 사회복지예산

● 경남의 사회복지예산 규모는 전국 4순위, 예산 비율은 7순위

- 사회서비스 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경남의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경남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10년 23.5%, '14년 28.4%, '18년 30.3%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⁷⁷⁾
- '19년 기준 경남의 사회복지예산은 2조 8,216억 원으로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큰 규모지만, 전체예산 중 비중은 37.5%로 전국 7순위에 그침

(단위 : 백만 원, %)

〈표 4-5-30〉

시도별 사회복지예산

구분	예산총액	사회복지예산		
		예산액	비율	순위
서울	35,741,608	11,960,365	33.46	12
경기	22,097,444	8,191,713	38.83	4
인천	7,177,427	2,773,552	38.64	5
세종	1,155,000	321,960	27.88	16
충남	5,740,000	1,880,307	32.76	13
충북	4,047,912	1,486,252	36.72	9
대전	3,845,524	1,546,858	40.22	1
강원	4,786,400	1,613,224	33.70	11
경북	7,579,600	2,676,175	35.31	10
대구	6,243,300	2,379,169	38.11	6
울산	3,600,333	1,015,538	28.21	15
부산	11,666,119	4,645,190	39.82	2
경남	7,516,354	2,821,607	37.54	7
전북	5,629,041	2,104,321	37.38	8
전남	6,557,076	2,126,239	32.43	14
광주	4,139,292	1,613,114	38.97	3
제주	4,493,557	1,013,301	22.55	17

주 : 2019년 일반회계 예산 기준 사회복지예산(기능별세출총괄표 상 사회복지지로 분류된 예산).
 자료 : 각 시·도별 기능별세출총괄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지방재정공시.

2)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 '19년 기준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1.04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⁷⁸⁾
-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0.918명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12년 1.50명 정점을 찍고 매년 급격하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음
- '19년 경남의 출생아 수는 19,250명으로 '18년 대비 9.3%(1,974명) 감소했으며, 이는 도부에서 4번째로 큰 감소폭임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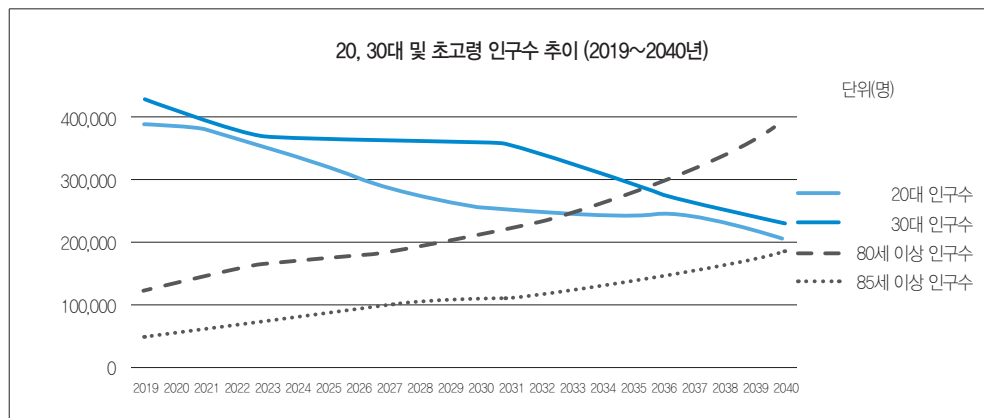
77)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KOSIS 접속일 2020.9.16.).

78) 통계청(2019), 2018년 출생 통계(확정)(보도자료 2019.8.28.).

7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접속일 2020.09.16.), https://gsis.kwdi.re.kr/stat-titl/stat-titl.do?orgId=338&tblCd=DT_2AD0109R#

- 각 지자체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결혼 및 출산장려, 보육 및 양육서비스 확대, 청년유입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8월 기준 경남의 고령인구 비율은 17.1%로 전국의 16.1%보다 높음⁸⁰⁾
- 사천시와 밀양시 그리고 8개 군 지역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⁸¹⁾ 합천군, 남해군, 의령군, 산청군의 경우 '35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됨⁸²⁾
-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노인가구 중 노인 독거가구와 노인 부부가구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돌봄서비스 이용의 보편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인구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예산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이어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 경남은 '16년부터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졌으며 '24년 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
- 향후 경남은 20, 30대 인구 수는 감소하고 80세 이상 인구 수는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복지정책 추진이 요구됨

〈그림 4-5-7〉

경남 20, 30대 및
초고령인구 수 추이

자료 : 서울대인구학연구소(2019), 경상남도 미래 인구맵 설계 용역.

●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 인구고령화, 가족 기능의 변화와 함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돌봄을 비롯하여 고독사, 자살, 학대, 다문화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18년 기준 58.5%에 이르며 노인학대 경험률은 '17년 기준 9.2%로 매년 증가추세임⁸³⁾
- '19년 기준 경남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21,275명(일반수급자 115,599명, 시설수급자 5,676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80)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81) '20.8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경상남도 시군은 '사천시(21.8%), 밀양시(28.1%), 의령군(36.7%), 함안군(24.6%), 창녕군(30.6%), 고성군(30.9%), 남해군(37.7%), 하동군(34.0%), 산청군(36.3%), 함양군(33.4%), 거창군(27.6%), 합천군(39.2%)으로 나타남.

82) 경상남도(2017), 경상남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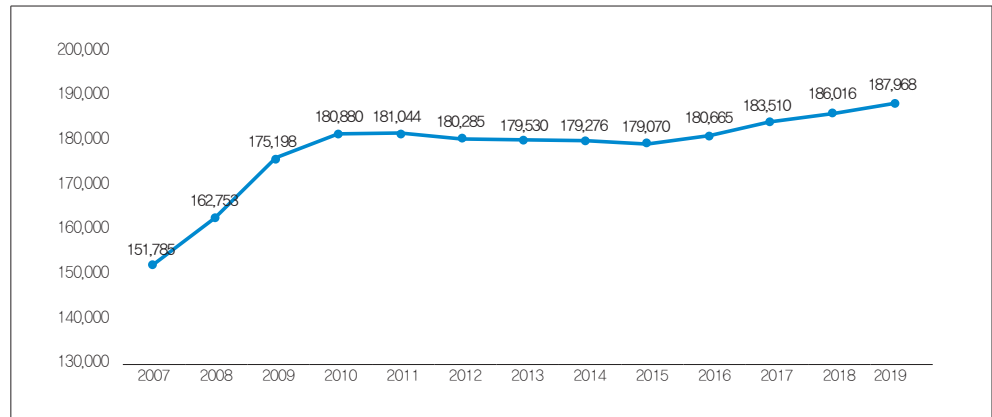
83)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그림으로 보는 사회보장 2019.

- 연도별 수급자 수를 보면 '14년 86,996명, '16년 104,213명, '18년 112,183명, '19년 121,27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⁸⁴⁾
- '20.4월 기준 경남의 등록장애인은 187,968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⁸⁵⁾
- 시군별 장애인 수를 보면 창원시가 49,480명(26.6%)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 이어서 김해시 24,040명(12.9%), 진주시 17,853명(9.6%), 양산시 15,726명(8.5%) 등의 순임
- '20.8월 기준 경남의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7,925명, 장애수당 수급자는 25,858명, 장애인의료비 수급자는 5,735명으로 증가추세임⁸⁶⁾

단위: 명

〈그림 4-5-8〉

경남 등록장애인 추이



- '17년 기준 경남의 외국인주민은 116,37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07년 대비 2.9배가 증가함⁸⁷⁾
-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근로자가 38.6%, 결혼이민자가 8.4%, 유학생이 2.2% 등의 순으로 많고 주로 김해시, 창원시, 거제시 등 도심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경남의 장기요양기관 급여이용수급자 수는 '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18년 기준 44,566명의 장기요양기관 급여이용수급자 중 재가급여는 34,831명, 시설급여는 11,485명으로 나타남⁸⁸⁾
- 전체적으로 '13년 26,490명이었던 수급자는 '18년 44,566명으로 68.24% 증가함

84)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KOSIS 접속일 2020.9.16.).

85)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KOSIS 접속일 2020.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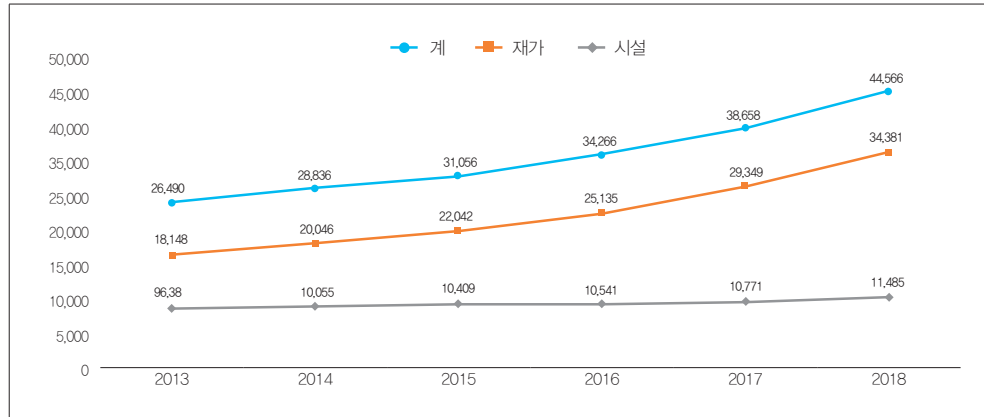
86)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접속일 2020.9.17.).

87) 경상남도(2019), 제7기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88)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KOSIS 접속일 2020.09.16.), 급여이용수급자 계는 재가 및 시설 급여 간 중복 건수를 제외한 값임.

단위: 명

〈그림 4-5-9〉

경남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급여실적
(급여이용수급자)

3) 지역·분야 간 복지 격차

● 경남 사회복지시설 수 전국 최저수준

- '17년 기준 경남의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9.94개로 전국평균 14.40개보다 적으며 인근 경북 18.54개, 전남 23.31개보다 적음

(단위: 개소)

〈표 4-5-31〉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국	2.24	2.52	3.21	4.05	4.81	6.54	8.37	10.74
경남	2.77	2.99	3.51	4.25	5.16	6.14	7.32	8.97
경북	3.16	3.64	4.69	5.84	5.82	8.12	10.41	13.05
전남	3.57	4.13	5.90	5.87	6.22	10.73	12.75	16.89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11.01	11.6	12.42	13.07	13.56	14.15	14.40	
경남	9.28	7.32	9.69	9.88	9.75	9.78	9.94	
경북	13.71	14.82	15.60	16.59	17.80	18.07	18.54	
전남	18.02	18.54	20.66	22.09	22.94	23.37	23.3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김기식(2020) 재인용.

● 농어촌 지역의 사회서비스 공동화 현상

- '19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11,573개소 중 노인 관련 시설이 전체의 67.3%(7,793개소)로 가장 많음(노인시설 중 약 7,380개소는 경로당)
- 이어서 보육 관련 시설 25.8%(2,990개소), 아동 관련 시설 4.1%(320개소) 등의 순임
-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보육 관련 시설은 시 지역에 92.8%가 집중되어 있음
- 이어서 여성·가족 관련 시설의 77.1%, 아동 관련 시설의 75.3%, 장애인 관련 시설의 71.0%가 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물론 사업에 따라서는 시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근 군 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 '19.6월 기준 경남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944개소 중 군 지역에 위치하는

제공기관은 95개소로 전체의 10.1% 수준에 그침⁸⁹⁾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남 전체 이용자 6,176명 중 군 지역 이용자는 1,088명으로 17.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군 지역의 경우 사회서비스 인프라 부족으로 아이를 낳기도 기르기도 힘든 지역이 되어 가고 있음. 이와 같은 지역 간 복지 격차는 개개인의 복지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참고로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은 분만 의료취약지이며, 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음

〈표 4-5-32〉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단위 : 개소, %)

구분	계(비율)	노인	장애인	보육	아동	여성가 족	다문화 가족	노숙인
경남	11,573(100.0)	7,793	276	2,990	320	170	20	4
창원시	2,239(19.3)	1,070	77	953	90	45	3	1
진주시	920(7.9)	572	20	289	31	6	1	1
통영시	402(3.5)	261	13	107	15	5	1	0
사천시	508(4.4)	375	15	101	11	4	1	1
김해시	1,274(11.0)	573	21	612	40	27	1	0
밀양시	539(4.7)	442	13	58	23	2	1	0
거제시	646(5.6)	326	21	265	14	19	1	0
양산시	770(6.7)	324	16	389	17	23	1	0
시 소계 (비율)	7,298 (63.1)	11,412 (50.6)	456 (71.0)	5,375 (92.8)	544 (75.3)	278 (77.1)	29 (50.0)	7 (75.0)
의령군	325(2.8)	301	7	10	4	1	1	1
함안군	442(3.8)	359	16	57	7	2	1	0
창녕군	462(4.0)	418	6	25	8	4	1	0
고성군	395(3.4)	338	8	23	9	16	1	0
남해군	297(2.6)	264	9	13	8	2	1	0
하동군	418(3.6)	387	7	16	6	1	1	0
산청군	403(3.5)	367	7	12	5	11	1	0
함양군	452(3.9)	424	7	15	5	0	1	0
거창군	518(4.5)	459	8	33	16	1	1	0
합천군	563(4.9)	533	5	12	11	1	1	0
군 소계 (비율)	4,275 (36.9)	14,729 (49.4)	531 (29.0)	5,579 (7.2)	612 (24.7)	316 (22.9)	38 (50.0)	8 (25.0)

자료 : 경상남도 내부자료(2019년)를 바탕으로 작성함.

● 군 지역, 보육·여성 예산은 적고 노인 관련 예산은 많음

- 시군별 사회복지예산 현황을 보면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 등의 순으로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예산 중 분야별 예산 규모를 보면 노인·청소년이 36.9%로 가장 많고 이어서 보육·여성 27.2%, 취약계층 12.5%, 기초생활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89)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내부자료.

(단위 : 백만원)

〈표 4-5-33〉

시군별 사회복지예산

구분	총액	기초생활	취약계층	보육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사회복지 일반	보건· 의료
경남 (비율)	4,071,939 (100.0)	498,760 (12.2)	509,669 (12.5)	1,105,866 (27.2)	1,501,838 (36.9)	92,317 (2.3)	141,920 (3.5)	221,569 (5.4)
창원시 (비율)	984,337 (100.0)	136,741 (13.9)	117,113 (11.9)	336,320 (34.2)	312,125 (31.7)	25,237 (2.6)	19,320 (2.0)	37,481 (3.8)
진주시 (비율)	400,244 (100.0)	53,951 (13.5)	56,733 (14.2)	129,117 (32.3)	133,148 (33.3)	8,352 (2.1)	4,646 (1.2)	14,297 (3.6)
통영시 (비율)	172,567 (100.0)	25,280 (14.6)	16,684 (9.7)	39,815 (23.1)	77,452 (44.9)	0 (0.0)	4,096 (2.4)	9,240 (5.4)
사천시 (비율)	183,096 (100.0)	44,077 (24.1)	17,053 (9.3)	37,786 (20.6)	65,161 (35.6)	2,789 (1.5)	4,705 (2.6)	11,525 (6.3)
김해시 (비율)	513,108 (100.0)	64,907 (12.6)	54,268 (10.6)	208,778 (40.7)	135,678 (26.4)	6,313 (1.2)	20,530 (4.0)	22,634 (4.4)
밀양시 (비율)	187,977 (100.0)	3,842 (2.0)	20,501 (10.9)	33,764 (18.0)	74,246 (39.5)	3,204 (1.7)	37,070 (19.7)	15,350 (8.2)
거제시 (비율)	240,781 (100.0)	18,356 (7.6)	55,672 (23.1)	80,116 (33.3)	62,811 (26.1)	9,089 (3.8)	2,708 (1.1)	12,029 (5.0)
양산시 (비율)	363,824 (100.0)	42,588 (11.7)	40,579 (11.2)	134,109 (36.9)	113,002 (31.1)	9,437 (2.6)	10,082 (2.8)	14,027 (3.9)
의령군 (비율)	69,670 (100.0)	8,180 (11.7)	12,150 (17.4)	5,139 (7.4)	34,778 (49.9)	0 (0.0)	2,878 (4.1)	6,545 (9.4)
함안군 (비율)	116,958 (100.0)	13,801 (11.8)	11,322 (9.7)	16,796 (14.4)	61,155 (52.3)	2,302 (2.0)	3,854 (3.3)	7,728 (6.6)
창녕군 (비율)	128,409 (100.0)	14,930 (11.6)	9,969 (7.8)	12,786 (10.0)	75,068 (58.5)	4,311 (3.4)	2,562 (2.0)	8,783 (6.8)
고성군 (비율)	108,233 (100.0)	12,158 (11.2)	15,015 (13.9)	12,701 (11.7)	50,732 (46.9)	4,685 (4.3)	3,409 (3.1)	9,533 (8.8)
남해군 (비율)	95,844 (100.0)	821 (0.9)	9,033 (9.4)	11,257 (11.7)	54,393 (56.8)	1,966 (2.1)	11,807 (12.3)	6,567 (6.9)
하동군 (비율)	103,184 (100.0)	13,420 (13.0)	10,415 (10.1)	12,280 (11.9)	52,696 (51.1)	1,277 (1.2)	2,874 (2.8)	10,222 (9.9)
산청군 (비율)	88,505 (100.0)	8,073 (9.1)	11,122 (12.6)	9,957 (11.3)	42,745 (48.3)	3,395 (3.8)	4,074 (4.6)	9,139 (10.3)
함양군 (비율)	87,306 (100.0)	8,966 (10.3)	10,944 (12.5)	13,190 (15.1)	43,816 (50.2)	0 (0.0)	718 (0.8)	9,672 (11.1)
거창군 (비율)	119,923 (100.0)	14,147 (11.8)	32,289 (26.9)	1,667 (1.4)	57,062 (47.6)	3,139 (2.6)	3,970 (3.3)	7,649 (6.4)
합천군 (비율)	107,973 (100.0)	14,522 (13.4)	8,807 (8.2)	10,288 (9.5)	55,770 (51.7)	6,821 (6.3)	2,617 (2.4)	9,148 (8.5)

자료 : 경상남도 내부자료(2019년)를 바탕으로 작성함.

- 군 지역의 경우 사회복지예산 중 보육·여성 관련 예산 비중이 평균 10.4%로 경남 전체 평균 27.2%와 비교할 때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창군이 1.4%로 가장 낮고 이어서 의령군 7.4%, 합천군 9.5%, 창녕군 10.0%, 산청군 11.3%, 남해군과 고성군이 각각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군 지역의 노인·청소년 관련 예산 비중은 평균 51.3%로 경남 전체 평균 36.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창녕군이 58.5%로 가장 높고 이어서 남해군 56.8%, 함안군 52.3%, 합천군 51.7%, 하동군 51.1%, 함양군 5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4) 전문분화된 사회복지시설

●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간 연계 · 협력의 필요성

- 경남지역에는 54개의 시설유형에 따라 755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시설마다 담당 부서가 상이함
- 사회서비스 이용의 보편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 간 연계 · 협력과 유사 기능을 가진 시설의 통폐합이 요구됨
- 아래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음

〈표 4-5-34〉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세부종류	시설현황	
		개소 수	종사자 수
	합계	755	4,504
	소계	54	502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17	175
	노인복지관(노인여가복지시설)	21	239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	4
	노인보호전문기관	2	18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13	66
	소계	395	1,44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3	11
	일시지원복지시설	1	7
	모자가족복지시설	2	9
가정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	33
	가정폭력상담소	14	55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1	5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	1	17
	성폭력	2	11
성매매	성폭력상담소	15	60
	성매매피해자 지원	6	30
	성매매피해상담소	2	10

〈표 4-5-34〉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계속)

(단위 : 개, 명)

구분	세부종류	시설현황	
		개소 수	종사자 수
아동복지시설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1	26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1	17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1	12
	경상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	1	13
	지역아동센터	266	574
	아동양육시설	25	388
	아동보호치료시설	1	8
	공동생활가정(그룹홈)	26	75
	학대피해아동쉼터	3	15
청소년복지시설	경상남도일시청소년쉼터	1	8
	경상남도중장기청소년쉼터	2	12
	단기청소년쉼터	2	12
	청소년회복지원시설	6	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25
소계		55	526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30	331
경남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	8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20	114
노숙인시설	노숙인재활시설	3	55
	노숙인요양시설	1	18
소계		242	1,847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16	495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6	48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	1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1	6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50	73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1	29
	(지역사회재활)장애인주간보호시설	29	111
	(지역사회재활)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	20	67
	(지역사회재활)발달장애인주간보호시설	2	8
	(지역사회재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0	55
	(지역사회재활)수화통역센터	20	72
	(지역사회재활)점자도서관	1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2	23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	122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1	7
소계		9	184
결핵한센시설	한센생활시설	1	15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4	142
정신재활시설	종합시설	2	19
	재활훈련시설	2	8

주 : 일부 시설은 제외되어 있음.

자료 : 경상남도 내부자료(2019.10월)를 바탕으로 작성함.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커뮤니케이션의 추진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사회서비스

- 관료제에 의한 칸막이 행정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및 소지역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직 간 팀워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강조될 것임
- 공급자 중심의 파편화된 서비스로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도민의 사회복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분야 간 네트워크가 당면과제로 등장할 것임
- 돌봄의 지역화 시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정책집행자의 역할에 벗어나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의 핵심주체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회서비스 및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 이슈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역량 강화, 지역사회 복지문화 조성, 정책연구 기능 강화,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과제로 부상할 것임⁹⁰⁾
- 향후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복지, 보건, 의료, 요양, 고용 등의 서비스는 소지역 단위의 분야 간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적 전달체계로 전환될 것임
- 병원 및 시설중심의 보호 체계로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및 일차의료 강화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 ‘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케이션)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전달체계의 전환을 알리는 시발점으로 볼 수 있음

2)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 현재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나타나는 지역·분야 간 격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의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제공기관 간 과다경쟁과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 도덕적 해이,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
- 향후 ‘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과 같이 시장화·민영화된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임

3) 삶의 질 중심의 인구정책

●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구정책으로의 전환

90) 이연성(2018), 지방분권시대의 경남형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경남발전 143호, p56.

- 출산장려 중심의 인구정책의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가운데 개인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구정책으로 전환될 것임
- 정부는 '06년부터 '18년까지 13년간 152.9조 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지출했으나, 합계출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18년에는 0.98명이라는 최저치를 기록함
- 여성의 사회진출 등 가족 기능이 변화하는 가운데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목표로 사료됨
-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비하고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삶의 질 중심의 정책추진이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인구정책임

4) 빅데이터 및 공동체 활용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빅데이터, AI에 기반한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개입

-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더욱 정교화되고 고위험군 발굴뿐만 아니라 예방적 개입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데이터3법 개정('20.1.9) 등 데이터 개방·유통이 확대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확대될 것임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정교화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동반하게 될 것임.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복지의 특성상 이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

●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복지 활동의 강화

- 복지 사각지대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복지 정책이 강화될 것임
- 이미 정부는 건강보험료, 단수 및 단전 정보, 아파트 관리비 연체 정보 등 다양한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 정보시스템이 더욱 정교화 된다고 해도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복지 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임
- 향후 지역공동체 중심의 비공식적인 서포트와 전문직에 의한 공식적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사회복지 영역의 핵심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남복지”

- 경남도민의 전체성, 권리성, 능동성, 주체성을 핵심이념으로 하는 통합복지, 균형복지, 지역복지의 추진을 통해 경남도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경남복지 실현을 목표로 설정함
- (성과지표1)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70점 이상으로 향상(15% 향상)

-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조사(4년 주기)」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항목을 활용함
- 경남 61점('18년 조사 결과) → 70점(15% 향상)
- (성과지표2) '건강수명' 전국 최하위에서 전국평균 수준으로 향상⁹¹⁾
- 건강수명은 평균수명 중 건강하게 삶을 유지한 기간을 의미함(현재 공식화된 통계치 없음)
- 경남 64.3세 → '40년 전국 평균값 수준

2) 추진전략

● 사회복지 부문 핵심지표

〈표 4-5-35〉

사회복지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삶 만족도(지역사회보장계획)	61점	70점	80점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9.9개	12개	14.4개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28명	25명	22명

(1) 통합복지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 복지와 보건 ·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통합서비스 제공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2) 균형복지

● 공공성 강화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추진

-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취약지 선정 및 지원
-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간 자원 재조정

(3) 지역복지

● 지역사회 기반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지역사회 중심 돌봄 시스템 구축
- 사회보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
- 지역자원 발굴, 주민참여로 지역의 복지력 강화

91) 박진욱(2018), 지역별 건강불평등 현황(한국건강형평성학회 토론회 자료집).

4. 추진시책

1) 통합복지 : 수요자 중심 통합서비스

● 복지과 보건 ·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복지서비스와 보건 · 의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편
-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통합적 추진

— 분야 간 공동연수 및 통합교육, 정보교류, 평가 및 모니터링체계 연계성 강화

- 사회복지시설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기관 간 연계 · 협력체계 강화

— 사회복지관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건강위원회 등 분야별 핵심조직의 통합 운영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통합서비스 제공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는 장애아동 및 고위험 아동에게 집중 재활 치료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재활 서비스 연계, 학교와 사회 복귀 지원 등 장애아동 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보건복지부, 2018)

— 경남지역은 장애어린이 재활 의료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재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특히 낮은 입원 재활 치료율을 고려할 때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치료받는 경향이 강함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에 있어 진료과별 협진체계를 통한 양질의 재활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및 기존 보건 ·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 · 협력체계 구축, 장애어린이 및 가족 대상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⁹²⁾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사회복지 분야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정기적 지역사회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수요-공급 격차분석 및 정책개발

2) 균형복지 : 사회보장 균형발전

● 사회보장 취약지 선정 및 지원

- 취약계층의 비율은 높으나 사회보장 인프라가 부족하여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사회보장 취약지로 선정

—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여 시군의 사회보장 수준 평가

— 수요-공급 격차분석을 통한 사회보장 취약지 선정 및 관리

92) 이안상 외(2019),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기초연구, 경남연구원.

-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 사회복지예산 및 서비스 이용 지원
- 사회보장 취약지역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공공 부문 사회복지시설 직영 비율 확대
 -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위기가구 발굴 · 지원 강화

●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을 강화하여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 민간 제공기관의 경우 소규모로 영세성이 강하여 열악한 종사자 처우, 낮은 사회서비스 품질, 민간기피 서비스 대상자 등의 문제가 발생
 - 경남사회서비스원, 기초지자체 단위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보 및 처우개선
-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민간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및 권익 보호
 - 직능단체별 임금체계 또는 단일임금체계 등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안 검토⁹³⁾
 -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참여 독려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3) 지역복지 : 지역사회 기반 사회서비스

● 지역사회 중심 돌봄 시스템 구축

- 시설 · 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탈피하여 민관협력에 기반한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 시설 및 병원의 퇴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제공기관 연계 · 협력 체계 강화
 -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의 연계 · 협력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추진
- 지역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강화, 생활밀착형 재가 서비스 확충
 - 자원봉사자, 검침원, 집배원 등과 협업하여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강화
 - 주민 조직화 및 주민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 활동 창출
 - 돌봄로봇 도입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 은퇴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돌봄인력 부족 문제 해소
- 전문가에 의한 공식적 돌봄과 주민에 의한 비공식적 돌봄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읍면동 돌봄 계획 수립
 - 지역과제 도출 및 공유,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 방안, 주민 활동 계획수립, 정책제안, 상위계획 수립에 반영 등
- ICT 기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 체계 구축
 -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AI 스피커, IoT 센서, 화상 영상기기 등 스마트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안부 확인, 복지정보 제공, 건강생활 모니터링, 상담, 치매 예방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
 - 권역별 스마트돌봄센터 설치를 통한 비대면 돌봄 시스템 구축

93) 이연상 외(2019), 경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실태 기초연구, 경남연구원.

● 사회보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

- 기초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실시·평가와 사회보장협의제도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지원단 구성
 - 상시 자문 및 정기교육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사회보장 추진 역량 강화
 - 시군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 지역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 지자체의 사업 개발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자문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동체적 접근 방식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

제7절

인구정책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경남 인구

(1) 경남 인구 동태

● 경상남도 인구 추이

- 지난 10년간 경상남도의 인구는 약 7만 2천명이 증가하여 2019년 현재 336만 3천명임
- 시부의 인구는 같은 기간 약 10만명 증가했지만, 군부의 인구는 약 2만 8천명 감소하여
경남도 인구의 증가는 시부로 집중됨

〈그림 4-5-10〉

경남 인구 추이
(2010~2019)

(단위 : 천명)

● 경상남도 인구 동태

- 경남의 인구동태를 지난 2010년 이후 전국과 비교하여 볼 때, 대체로 사망과 혼인 관련 지표 값을 제외하고 전국 대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18년을 기준으로 조사망률은 전국 3.6%보다 큰 6.3%였고,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6.1%로 전국 -2.6%보다 감소하였고, 이혼 건수는 3.0%로 전국 2.5%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평균 증감률로 비교할 때, 자연증가 관련 건수와 증가율의 감소율이 각각 -37.1%, -35.7%로 전국 -18.9%, -19.6%p 보다 감소폭이 컸음

〈표 4-5-36〉

인구동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감률
출생 건수	전국	명	470,171	471,265	484,550	436,455	435,435	438,420	406,243	357,771	326,822
	전년 대비	-	0.2	2.8	-9.9	-0.2	0.7	-7.3	-11.9	-8.7	-4.3
	경남	명	32,203	32,536	33,211	29,504	29,763	29,537	27,138	23,849	21,224
	전년 대비	-	1.0	2.1	-11.2	0.9	-0.8	-8.1	-12.1	-11.0	-4.9
합계 출산 율	전국	%	1,226	1,244	1,297	1,187	1,205	1,239	1,172	1,052	0,977
	전년 대비	-	1.5	4.3	-8.5	1.5	2.8	-5.4	-10.2	-7.1	-2.6
	경남	%	1,413	1,446	1,503	1,367	1,409	1,437	1,358	1,227	1,122
	전년 대비	-	2.3	3.9	-9.0	3.1	2.0	-5.5	-9.6	-8.6	-2.7
조출 생률	전국	천명당	9.4	9.4	9.6	8.6	8.6	8.6	7.9	7.0	6.4
	전년 대비	-	0.0	2.1	-10.4	0.0	0.0	-8.1	-11.4	-8.6	-4.6
	경남	천명당	9.9	9.9	10.1	8.9	9.0	8.9	8.1	7.1	6.3
	전년 대비	-	0.0	2.0	-11.9	1.1	-1.1	-9.0	-12.3	-11.3	-5.3
사망 건수	전국	명	255,405	257,396	267,221	266,257	267,692	275,895	280,827	285,534	298,820
	전년 대비	-	0.8	3.8	-0.4	0.5	3.1	1.8	1.7	4.7	2.0
	경남	명	19,502	19,593	20,419	19,994	20,239	21,313	21,193	21,634	22,719
	전년 대비	-	0.5	4.2	-2.1	1.2	5.3	-0.6	2.1	5.0	2.0
조사 망률	전국	천명당	5.1	5.1	5.3	5.3	5.3	5.4	5.5	5.6	5.8
	전년 대비	-	0.0	3.9	0.0	0.0	1.9	1.9	1.8	3.6	1.6
	경남	천명당	6.0	6.0	6.2	6.1	6.1	6.4	6.3	6.4	6.8
	전년 대비	-	0.0	3.3	-1.6	0.0	4.9	-1.6	1.6	6.3	1.6
자연 증가 건수	전국	명	214,766	213,869	217,329	170,198	167,743	162,525	125,416	72,237	28,002
	전년 대비	-	-0.4	1.6	-21.7	-1.4	-3.1	-22.8	-42.4	-61.2	-18.9
	경남	명	12,701	12,943	12,792	9,510	9,524	8,224	5,945	2,215	-1,495
	전년 대비	-	1.9	-1.2	-25.7	0.1	-13.6	-27.7	-62.7	-167.5	-37.1
자연 증가 율	전국	천명당	4.3	4.3	4.3	3.4	3.3	3.2	2.5	1.4	0.5
	전년 대비	-	0.0	0.0	-20.9	-2.9	-3.0	-21.9	-44.0	-64.3	-19.6
	경남	천명당	3.9	4.0	3.9	2.9	2.9	2.5	1.8	0.7	-0.4
	전년 대비	-	2.6	-2.5	-25.6	0.0	-13.8	-28.0	-61.1	-157.1	-35.7
혼인 건수	전국	건수	326,104	329,087	327,073	322,807	305,507	302,828	281,635	264,455	257,622
	전년 대비	-	0.9	-0.6	-1.3	-5.4	-0.9	-7.0	-6.1	-2.6	-2.9
	경남	건수	21,170	20,769	20,140	20,291	19,056	18,671	17,580	15,978	14,996
	전년 대비	-	-1.9	-3.0	0.7	-6.1	-2.0	-5.8	-9.1	-6.1	-4.2
조혼 인율	전국	천명당	6.5	6.6	6.5	6.4	6.0	5.9	5.5	5.2	5.0
	전년 대비	-	1.5	-1.5	-1.5	-6.3	-1.7	-6.8	-5.5	-3.8	-3.2
	경남	천명당	6.5	6.3	6.1	6.1	5.7	5.6	5.3	4.8	4.5
	전년 대비	-	-3.1	-3.2	0.0	-6.6	-1.8	-5.4	-9.4	-6.3	-4.5
이혼 건수	전국	건수	116,858	114,284	114,316	115,292	115,510	109,153	107,328	106,032	108,684
	전년 대비	-	-2.2	0.0	0.9	0.2	-5.5	-1.7	-1.2	2.5	-0.9
	경남	건수	7,503	7,207	7,427	7,547	7,602	7,368	7,486	7,355	7,575
	전년 대비	-	-3.9	3.1	1.6	0.7	-3.1	1.6	-1.7	3.0	0.2
조이 혼율	전국	천명당	2.3	2.3	2.3	2.3	2.3	2.1	2.1	2.1	2.1
	전년 대비	-	0.0	0.0	0.0	0.0	-8.7	0.0	0.0	0.0	-1.1
	경남	천명당	2.3	2.2	2.3	2.3	2.3	2.2	2.2	2.2	2.3
	전년 대비	-	-4.3	4.5	0.0	0.0	-4.3	0.0	0.0	4.5	0.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각연도).

(2) 경남 순이동

- 지난 10년간 경남의 순이동을 보면 2012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유출보다 유입이 많았음. 반면, 20대의 경우 지난 10년간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30대의 경우 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37〉

경남 순이동
(전체 및 20~30대)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성별	
							남자	여자
전체	13,029	3,246	-2,772	6,075	1,772	-5,810	-3,152	-2,658
20대	-77	-4,499	-5,826	-5,177	-7,290	-10,977	-5,511	-5,466
30대	5,677	3,252	1,706	3,533	1,933	395	-347	742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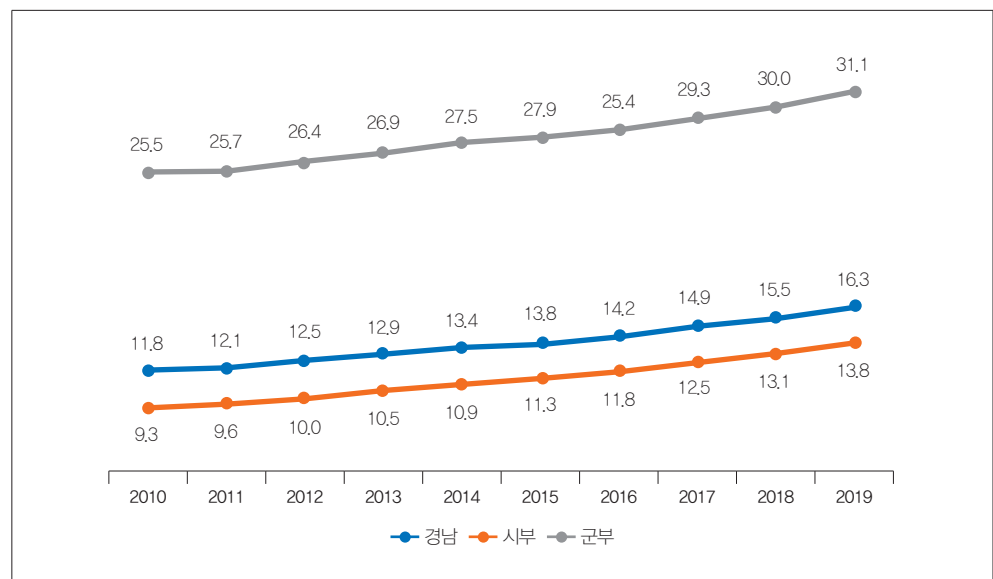
2) 고령화

● 고령인구

- 경남의 고령인구⁹⁴⁾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0년 11.8%에서 2019년 16.3%에 이름
 - 시부 고령 비중이 2019년 13.8%임
 - 반면, 군부는 31.1%로 초고령사회를 나타내는 수치인 20%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인구의 성비는 여성 비율이 높고, 특히 군 지역의 여성 비율은 60.7%에 이름

〈그림 4-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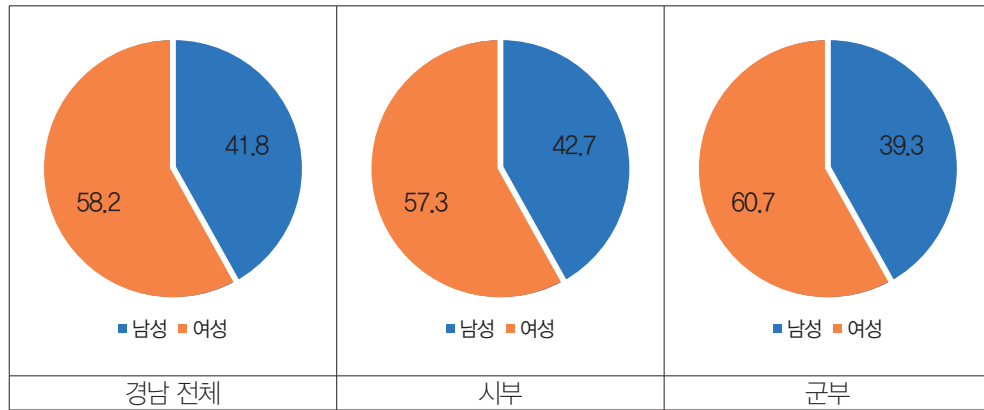
경남 65세 인구 비중



주 :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전체인구*100.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각연도).

94) 65세 이상 인구.

〈그림 4-5-12〉

경남 성별 고령인구
(2019)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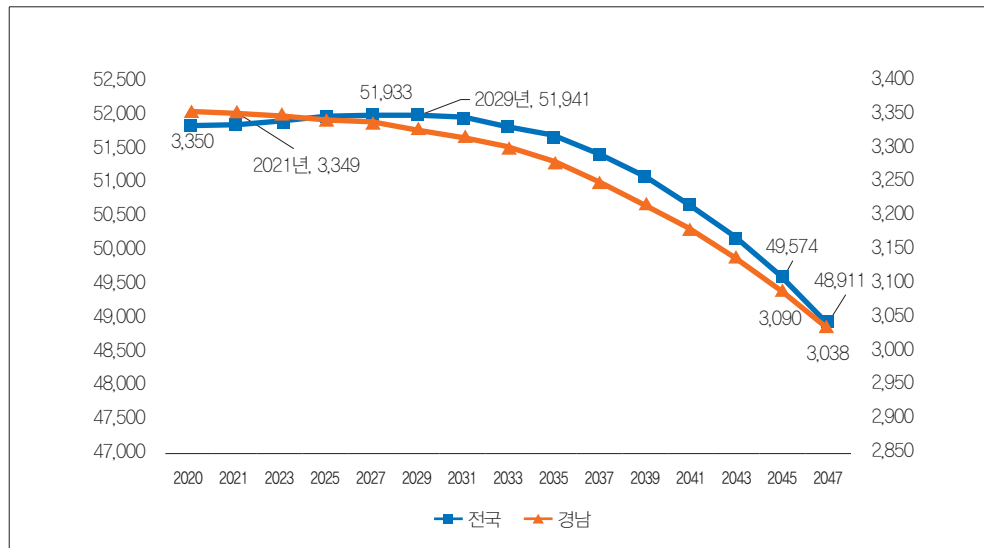
1) 인구추계

● 인구추계

- 경남의 인구 감소는 전국 추계보다 일찍 시작될 것으로 추계됨
 - 전국 인구는 2029년 51,941천명을 시작으로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줄어 2045년도에 5천만명이 깨져 49,574천명, 2047년 48,911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함
 - 경남 인구는 2020년 3,350천명이었던 것이 2021년도 3,349천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나타남. 경남의 300만명 선은 2045년부터 깨질 것으로 예측됨

〈그림 4-5-13〉

인구추계



주1 : 2019년 6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임.

주2 : 매년 7월 1일 시점 자료임.

주3 : 작성대상 인구는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임(외국인 포함).

주4 : 1970~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주5 : 중위추계(기본추계)는 출생-사망-국제이동 중위가정과 국내이동 기본가정을 조합한 결과로 이를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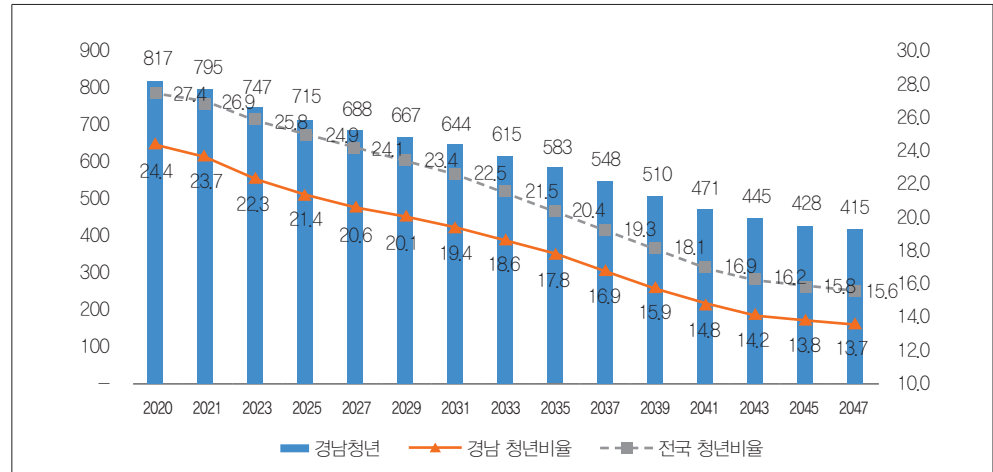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 청년 인구

- 2047년 20~30대 인구 비중은 13.7%로 2020년 24.4%보다 10%p 이상 줄어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전국과 비교해서도 낮은 비율로 2020년 전국 20~30대 비율이 27.4%였으나, 경남 20~30대 비율은 24.4%였고, 2047년도에도 차이는 지속되어 전국 15.6%, 경남 13.7%일 것으로 추정됨

〈그림 4-5-14〉

청년 인구



주1 : 2019년 6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임.

주2 : 매년 7월 1일 시점 자료임.

주3 : 작성대상 인구는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임(외국인 포함).

주4 : 1970~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주5 : 중위추계(기본추계는 출생-사망-국제이동 중위가정과 국내이동 기본가정을 조합한 결과로 이를 활용함.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2) 인구감소

● 인구소멸지수⁹⁵⁾

- 도 및 시군의 인구소멸지수(2019. 12. 기준)에 따르면, 경남은 주의단계인 3단계임
- 경남 시군 중 3곳은 소멸위험 보통단계인 2단계, 3곳은 주의단계인 3단계, 8곳은 소멸위험 진입단계인 4단계, 4곳은 소멸위험단계인 것으로 나타남
- 시 지역 중 김해, 거제, 양산은 소멸위험 보통인 2단계였고, 창원, 진주, 통영, 사천은 주의단계인 3단계였음. 사천과 밀양은 소멸위험지역으로서 소멸위험 진입단계인 것으로 분석됨

95) 이상호(2019). 인구소멸지수.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방소멸위험지수의 배경과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① 지역공동체의 세대 간 불균형과 미래 지속가능성 정도를 측정

– 20~39세 여성 인구 : 지역 공동체의 현재 구성원이자, 미래 구성의 토대를 이룸

– 65세 이상 인구 : 지역 공동체의 현재 구성원이지만, 미래에는 자연 감소 확률 높음

– 양자 간 비율이 0.5 미만일 경우, 인구 재생산 주기를 고려할 때 향후 사실상 해당 공동체의 인구 기반은 붕괴하고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한다는 의미

②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단순지표로 정책 활용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

– 지역의 미래 인구 변화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인구 추계에 의한 보다 엄밀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활용 지표로는 지역의 경제, 사회, 재정 등의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야 하며 기계적인 적용에는 주의할 필요

- 군지역은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서 이 중, 함안, 창녕, 고성, 하동, 함양, 거창은 소멸위험 진입단계, 의령, 남해, 산청, 합천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남

〈표 4-5-38〉

경상남도 및
시군별
인구소멸지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경남			√		
창원시			√		
진주시			√		
통영시			√		
사천시				√	
김해시		√			
밀양시				√	
거제시		√			
양산시		√			
의령군					√
함양군				√	
창녕군				√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
시군지역 소멸위험 단계합(개)	0	3	3	8	4

주 : 인구소멸지수는 “이상호(2019), 인구소멸지수,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식을 따르며(인구소멸지수=20~34세 여성 인구/65세 이상 인구), 단계별 해석은 다음과 같음.

구분	명칭	소멸위험지수	
1단계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	
2단계	소멸위험 보통	1.0 ~ 1.5 미만	
3단계	주의단계	0.5 ~ 1.0 미만	
4단계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진입 단계	0.2 ~ 0.5 미만
5단계		소멸고위험 지역	0.2 미만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통계, 2019.

- 각 시군의 읍면동의 인구소멸지수를 분석한 결과 도내 313개 읍면동 중 145개(46.3%)가 5단계인 소멸고위험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 시부 읍면동의 인구소멸 단계는 3단계인 주의단계가 55개(29.3%)로 많았으나, 소멸고위험지역도 43개(22.9%)에 이르렀음
- 군부 읍면동 125개 중 102개(81.6%)가 소멸고위험지역임

〈표 4-5-39〉

경남 읍면동의
인구소멸지수

(단위 : 개,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합계
창원시 (비율)	6 (10.3)	14 (24.1)	20 (34.5)	15 (25.9)	3 (5.2)	58 (100.0)
진주시 (비율)	2 (6.7)	3 (10.0)	11 (36.7)	5 (16.7)	9 (30.0)	30 (100.0)
통영시 (비율)	0 (0.0)	1 (6.7)	3 (20.0)	5 (33.3)	6 (40.0)	15 (100.0)
사천시 (비율)	0 (0.0)	1 (6.7)	3 (20.0)	5 (33.3)	6 (40.0)	15 (100.0)
김해시 (비율)	4 (21.1)	4 (21.1)	6 (31.6)	3 (15.8)	2 (10.5)	19 (100.0)
밀양시 (비율)	0 (0.0)	0 (0.0)	3 (17.6)	3 (17.6)	11 (64.7)	17 (100.0)
거제시 (비율)	6 (28.6)	1 (4.8)	4 (19.0)	5 (23.8)	5 (23.8)	21 (100.0)
양산시 (비율)	1 (7.7)	3 (23.1)	5 (38.5)	3 (23.1)	1 (7.7)	13 (100.0)
시부 (비율)	19 (10.1)	27 (14.4)	55 (29.3)	44 (23.4)	43 (22.9)	188 (100.0)
의령군 (비율)	0 (0.0)	0 (0.0)	0 (0.0)	1 (7.7)	12 (92.3)	13 (100.0)
함안군 (비율)	0 (0.0)	0 (0.0)	2 (20.0)	3 (30.0)	5 (50.0)	10 (100.0)
창녕군 (비율)	0 (0.0)	0 (0.0)	0 (0.0)	5 (35.7)	9 (64.3)	14 (100.0)
고성군 (비율)	0 (0.0)	0 (0.0)	0 (0.0)	2 (14.3)	12 (85.7)	14 (100.0)
남해군 (비율)	0 (0.0)	0 (0.0)	0 (0.0)	1 (10.0)	9 (90.0)	10 (100.0)
하동군 (비율)	0 (0.0)	0 (0.0)	0 (0.0)	3 (23.1)	10 (76.9)	13 (100.0)
산청군 (비율)	0 (0.0)	0 (0.0)	0 (0.0)	3 (27.3)	8 (72.7)	11 (100.0)
함양군 (비율)	0 (0.0)	0 (0.0)	0 (0.0)	1 (9.1)	10 (90.9)	11 (100.0)
거창군 (비율)	0 (0.0)	0 (0.0)	1 (8.3)	0 (0.0)	11 (91.7)	12 (100.0)
합천군 (비율)	0 (0.0)	0 (0.0)	0 (0.0)	1 (5.9)	16 (94.1)	17 (100.0)
군부 (비율)	0 (0.0)	0 (0.0)	3 (2.4)	20 (16.0)	102 (81.6)	125 (100.0)
경남 (비율)	19 (6.1)	27 (8.6)	58 (18.5)	64 (20.4)	145 (46.3)	313 (100.0)

주 : 인구소멸지수는 "이상호(2019)의 자료를 근거하였음. <표>도 및 시군의 인구소멸지수의 주석의 표와 같음.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통계, 2019.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 인구정책 부문 핵심지표

〈표 4-5-40〉

인구정책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	334만명	340만명	334만명
행복지수	상위 40~60%	상위 20~40%	상위 20%
청년 인구 순유출	15,060명	4,000명 내외	±1,000명 이내

(1) 지속가능 경남을 위한 인구정책 수립

① 저출생 완화를 위한 정책지원

●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의 체감도 제고

- 임신 가정의 비용경감을 위한 지원
 - 난임부부 지원, 임신부 건강지원
-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
 - 어린이집 질 제고, 보육료 지원, 보육 지원체계 구축

②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특별도 조성

● 경남출신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 청년 정착 유도

- 수도권 집중되는 인구, 경제, 인프라로 인한 지방소멸로 치닫는 악순환 고리 개선
 - 메가시티 플랫폼, 부·울·경 협업 등을 통한 청년이주 완화와 정착을 위한 행정역량 집중

● 청년과 함께 청년이 직접 정책 설계

- 청년이 계획하고 실행할 거버넌스 구축
 -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네트워크, 청년정책 플랫폼 등을 통한 청년 참여 활성화

③ 경남과 인근 지자체 협업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 對 수도권 청년층 인구 순유출 완화

- 경상남도-부산-울산 공동대응으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 청년의 이동과 정착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응 사업 발굴

(2) 도 정책의 인구관점 도입

① 인구영향평가를 통한 신규정책 점검

● 부정확한 인구통계 및 미래인구 예측으로 인한 오류 개선

- 인구학적 관점의 도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평가·환류할 시스템 마련
- 인구목표를 통한 인구영향평가 모델 및 체크리스트 적용
- 행·재정적 비효율 제거로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

②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도정 협업

● 민관 협치를 위한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구성·운영

- 경남 인구정책의 민관 협치 기구 구성
- 출산, 이동, 고령화 등 경남 인구 문제의 대책 논의

● 민간과 도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인구정책추진단 등 도민 체감과 생활밀착형 정책발굴을 위한 논의체 구성

4. 추진시책

1) 저출생 완화를 위한 정책지원

(1) 부모 부담 완화

● 난임부부 지원 강화

- 전국 여성 인구 대비 가임기 여성 인구 비중은 2000년 51.6%에서 2018년 47.4%로 하락함
- 경남의 경우도 2000년 55.4%에서 2018년 44.4%로 하락하였음
- 또한, 늦은 결혼, 환경적 요인, 건강상의 요인으로 인해 난임이 증가하는 추세임
- 난임의 원인 및 치료를 위한 기초검진비 소요
- 난임 진료비는 여러 차례 시술을 해야 하므로 가계 부담으로 작용함. 이는 난임 진료 주단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함
- 난임시술비 및 기초검진비 지원을 통해 아이를 갖고 싶으나 상황이 어려운 여성을 지속적으로 지원

〈표 4-5-41〉

난임부부 지원 방향

구분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 기초검진비 지원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난임부부 난임 시술비 일부 지원	난임부부 난임 진단에 따른 기초 검진비 일부 지원
지원금액	회당 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조리 지원 확대

- 경남의 산후조리원은 시 지역에 집중되어 2019년 현재 29개소가 민간에 의해 운영됨
 - 과거와는 달리 출산 후 대부분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나, 비용과 안전성의 문제로 인해 안심하고 이용하기 어려움
- 민간시설이 없는 시군지역에 산후조리원을 개원하여 양질의 모자보건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
 - 특히, 취약계층 산모의 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
 - 향후, 공공영역의 시설확대뿐 아니라 민간시설 이용자의 자기부담금 지원을 고려함

(2) 돌봄의 신뢰성 제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학부모는 어린이집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기를 기대하나,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9년 현재 203개소로 전체 시설 2,776개소의 7.3%에 불과함
 - 2021년까지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하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만으로 모든 이용 어린이의 안전과 부모의 신뢰를 받을 수는 없음

〈표 4-5-4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단기계획

(단위 : 개소, 명, %)

구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확충 개소 수	358	42	66	110	140
누계	508	192	258	368	508
국공립 이용아 수(누계)	32,802	11,018	15,340	23,040	32,802
국공립 이용률	40	12.5	17.7	26.6	40

-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학령기 이전의 아동이 안심하고 놀이와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자녀 양육부담 분담

- 자녀를 양육할 때 개별 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원이 매우 중요
 - 군 지역을 중심으로 임신·출산·산후조리·육아 등 여성과 아동 대상 시설의 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아 제공
 - 아이를 가진 가정이 함께 모여 육아의 부담을 나누고 육아 정보와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음

2) 청년정책 활성화

(1) 청년친화도시 조성 확대

● 청년친화도시

- 연간 청년 인구가 1만명 내외 순유출되는데, 구직으로 인한 이동이 63.9%로 가장 큰 이유임. 그러나 청년은 일자리뿐 아니라 문화나 여가에 대한 요구도도 높음

※ 경남 거주 선호(65.4%), 향후 5년간 타시도 이동 의사가 없음(66.6%)

-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시군의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전반에 관해 지원함
- 활동 참여, 생활 안정 지원, 권리 보호, 능력개발, 문화진흥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사업을 지원함

(2) 청년 참여정책 활성화

● 청년이용 공간 확대

- 도 및 시군 단위 청년 활동공간을 통해 청년에게 지역사회 내 활동의 많은 기회를 제공
- 오픈 카페, 공유주방, 모임 공간, 공유오피스, 전시, 강연 등 청년의 이용이 활발할 수 있도록 시군 단위 공간 조성
- 도 및 시군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 활성화에 기여

● 청년 참여 기반 구축

- 청년의 요구가 지속적·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네트워크 운영
-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청년 문제 발굴·조사, 아이디어 제안
- 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분과별 이슈 발굴 및 정책개발
- 타지역 청년활동가와 교류 등
- 청년들의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조정을 위한 실무협의체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활용
- 청년과 관련되는 일자리, 창업, 복지 등 다양한 부서에 흩어져 있는 청년 관련 업무를 공유하고 연계성을 강화

3) 도 정책의 인구관점 도입

(1) 인구영향평가 실시

● 인구영향평가 실시

- 인구문제는 정책 결정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부정확한 인구통계와 미래인구 변화자료로 정책수행 시 행정적·재정적 비효율 발생 우려
-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확대할 때, 정책의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대안 마련함
- 인구변화로 인한 정책의 행·재정적 비효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행단계, 수행단계, 결과단계에서 점검함

(2) 민간 파트너십 구축

●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활성화

- 인구의 핵심인 저출생·고령사회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수립과 이행을 체계화하여야 함
 - 2019년 현재 경남의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는 1개 총괄위원회, 4개 분과위가 구성됨
 - 도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장기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심의를 하도록 함
- 위원회를 통해 인구정책 수립과 이행을 점검하고, 경남을 넘어 동남권 인구정책 수립으로 확장하여 대 수도권 인구정책에 관한 적극적 논의를 주도함

● 도민참여 협의체 구성·운영

- 인구의 문제는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전문가와의 협업과 민간의 참여가 중요
 - 그간 인구정책이 행정 주도의 임신, 출산, 보육 중심의 획일적 정책추진으로 도민 체감도가 낮았고, 법적 위원회가 단체장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
 - 당사자인 대학원생, 신혼부부, 보육 학부모, 귀농인,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이 직접 본인의 필요를 제시하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함

제8절

여성가족

1. 현황 및 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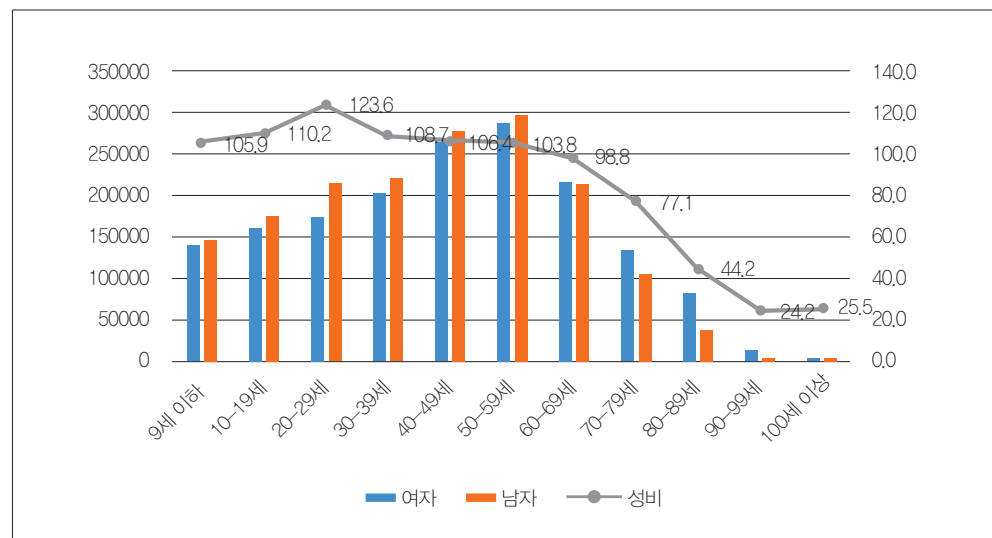
1) 지역 여성 및 가족 현황

(1) 지역 여성 현황

● 경남 여성 인구

- 경남의 2019년 연령별 성비를 보면 20~29세가 123.6으로 가장 높고 이후 감소하고 있음. 60세 이후 성비가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짐
- 2019년도 경남 전체 인구는 3,362,553명이며 여성 1,670,521명, 남성 1,692,032명임. 경남 성비는 101.3으로 남성 인구가 더 많으나, 전국 성비는 99.5로 여성 인구가 더 많음
- 한편, 60대 이후로 여성 인구가 증가하는데, 특히 80세 이후 여성 인구는 남성 인구의 2.4배이며, 90세 이상 여성 인구는 남성 인구의 4배에 육박함

〈그림 4-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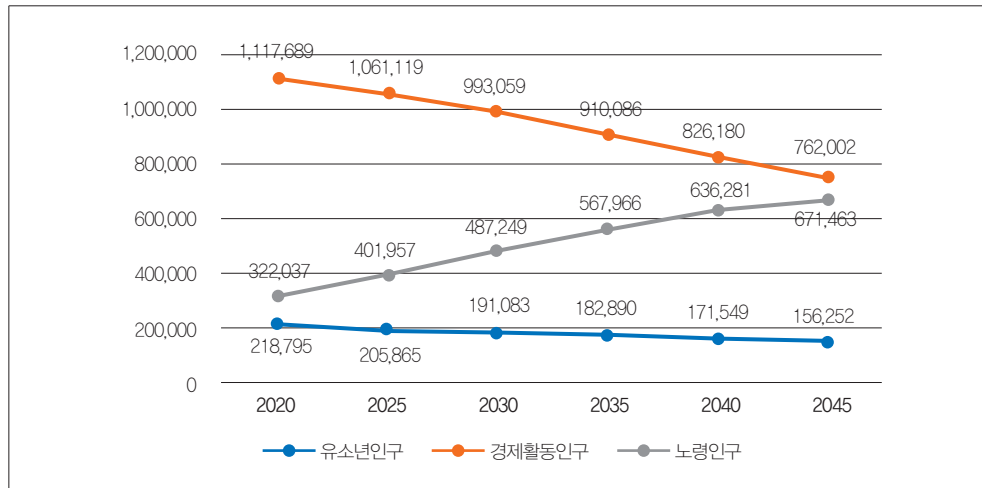
연령별 인구 및
성비(2019)

(단위 : 명, 여성 100명당 남성 수)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경남의 전체 인구는 2020년 3,385,992명에서 2045년 3,253,934명으로 132,058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성 노령인구(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여성 노령인구는 2020년 322,037명에서 2045년 671,463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여성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2020년 1,117,689명에서 2045년 762,002명으로 355,687명 감소, 여성 유소년인구(0~14세)는 2020년 218,795명에서 156,252명으로 62,543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5-16〉

경남 여성의
장래추계인구
(2020~2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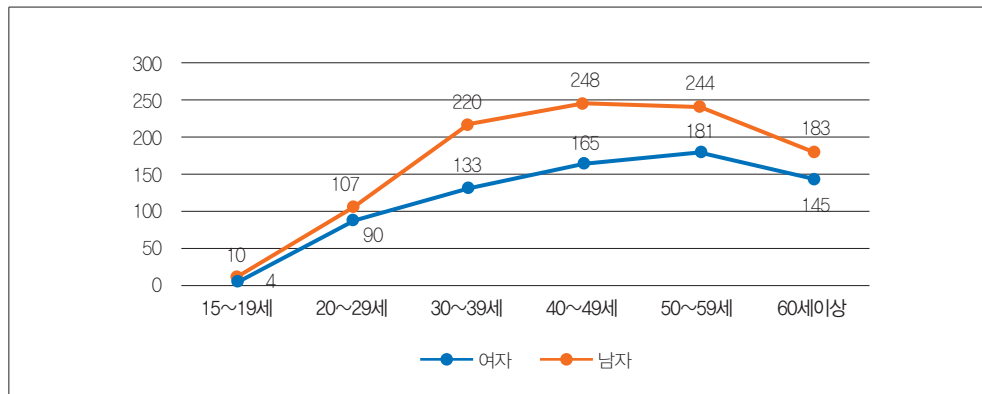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 경남 여성 경제활동인구

- 경남의 2013년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694천명이었고, 2019년은 718천명으로 증가하였음
- 2019년 경남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1,730천명이며, 남성의 경제활동인구는 1,012천명으로 여성보다 294천명 많음
- 2019년 경남 여성 취업자를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0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60대부터 감소 경향을 보임(여성 취업자는 50대가 가장 많음)
- 2010년 당시만 해도 명확히 드러났던 M자형 곡선이 보이지 않게 되었음⁹⁶⁾
- 이것은 곧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여성 인구 자체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20대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함께, 비혼율 및 만혼율의 증가라는 요인도 작용하지만, 여성 취업자가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생활균형 제도의 진전이라는 긍정적인 요인도 작용했을 것임

〈그림 4-5-17〉

연령별 취업자
(2019)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연보.

96) M자형 곡선은 여성들의 생애주기별 취업 현황을 나타내는 용어로, 여성이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했다가 결혼 및 출산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후 육아가 끝나면서 복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함.

(2) 지역 가족 현황

● 다양한 가족의 보편화

- 경남의 총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한부모가족(모자가족 + 부자가족)과 조손가족의 증가세는 둔화되거나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으나, 1인가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음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로 분류되는 비친족가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비율적으로는 안정세에 접어들었음

(단위 : 가구, %)

〈표 4-5-43〉
세대구성별 가구

구분	2015년				2018년			
	전국		경남		전국		경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총가구 수	19,111,030	100.0	1,258,487	100.0	19,979,188	100.0	1,306,394	100.0
모자가족	1,522,554	8.0	90,146	7.2	1,498,840	7.5	90,592	6.9
부자가족	537,608	2.8	35,400	2.8	517,173	2.6	34,879	2.7
조손가족	113,111	0.6	7,592	0.6	113,297	0.6	7,168	0.5
1인가구	5,203,440	27.2	346,754	27.6	5,848,594	29.3	379,719	29.1
비친족가구	214,421	1.1	12,422	1.0	340,367	1.7	16,478	1.3
다문화가구	299,241	1.6	18,238	1.4	334,856	1.7	20,135	1.5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 경남 외국인등록인구

-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구성 중에 외국인등록인구의 비율은 2.4%를 넘었고, 경남의 외국인등록인구는 2.2%로 전국 수준보다는 조금 낮음
- 외국인등록인구 수는 전국적으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남의 경우, 외국인등록인구는 2015년 82,316명에서 2019년 76,123명으로 감소하였음
- 동일 기간 외국인등록인구 비율의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는 지역은 거제시(2015년 58.8% → 2019년 33.4%)와 고성군(2015년 34.2% → 2019년 24.0%)이며, 증가세를 보인 것은 창녕군(2015년 32.8% → 2019년 44.7%)임
- 해당 증감세의 변화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주력산업의 경제 상황의 부침과 직결됨

(단위 : 명)

〈표 4-5-44〉
외국인등록인구

구분	2015년				2019년			
	계	여자	남자	인구천명당 외국인 수	계	여자	남자	인구천명당 외국인 수
전국	1,143,087	486,822	656,265	22.18	1,271,807	544,526	727,281	24.53
경남	82,316	23,120	59,196	24.46	76,123	24,171	51,952	22.64
창원시	16,788	5,497	11,291	15.69	15,073	5,826	9,247	14.43
진주시	4,409	1,709	2,700	12.80	5,219	2,044	3,175	15.03
통영시	4,603	991	3,612	33.08	3,962	728	3,234	30.15
사천시	3,117	669	2,448	27.00	3,417	753	2,664	30.53
김해시	18,522	4,122	14,400	35.02	19,013	5,320	13,693	35.05
밀양시	2,089	932	1,157	19.36	2,870	1,459	1,411	27.19
거제시	15,051	3,959	11,092	58.83	8,302	2,245	6,057	33.44
양산시	5,749	1,719	4,030	19.08	6,319	2,203	4,116	18.02
의령군	795	285	510	27.85	765	275	490	28.16
함안군	3,743	578	3,165	54.12	3,498	613	2,885	53.24
창녕군	2,091	614	1,477	32.77	2,789	852	1,937	44.74
고성군	1,891	447	1,444	34.21	1,256	330	926	24.03
남해군	846	191	655	18.45	861	151	710	19.74
하동군	611	314	297	12.16	525	292	233	11.27
산청군	584	301	283	16.19	608	318	290	17.17
함양군	445	244	201	11.03	504	213	291	12.72
거창군	467	257	210	7.39	547	274	273	8.80
합천군	515	291	224	10.48	595	275	320	13.16

자료 :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지역 여건 전망

(1) 여성·가족 정책의 과제

● 지역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실천

- 경남의 지역 성평등 수준은 2013년 이래로 계속 중하위권 지역으로 분류되다가 2017년 중상위권으로 상승했지만, 2018년 가족 분야의 급격한 성비 하락으로 하위권에 위치함⁹⁷⁾
 - 2018년도 경남 성평등지수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하위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하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상위권임
 - 분야별로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분야가 하위권이고,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임. 경제활동 분야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와 성별 임금 격차 성비가 약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수준은 악화하였음
 - 의사결정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는 비교적 개선되었으나, 성평등 수준은 낮음

97) 주재선 외,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pp.264-268.

- 지역 성평등지수와 연관되는 일·생활균형 지수도 2018년 기준 전국 최하위 수준임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일·생활균형 지수가 2017년도 전국 5위에서 2018년도 최하위로 하락한 요인으로는 ‘지자체 관심도’ 부문임. ‘생활’ 부문의 변화는 단시간에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목표와 비전을 토대로 통합적인 관리와 체계 구성이 요청됨
- 따라서 성평등 관련 과제나 일·생활균형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이 필요할 것임

●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및 경력 유지를 위한 제반 조치

- 최근 3년간 경남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1/4분기의 각연도 추이는 2017년 49.7%, 2018년 49.5%, 2019년 51.5%로 약간의 증가세를 나타냄
- 동시기 전국의 경우도 2017년 51.6%, 2018년 51.8%, 2019년 52.2%로 경남지역보다는 약간 낮은 증가세를 보임
- 남녀 고용률의 차이는 2017년 경남 24.5%p(전국 21.7%p), 2018년 24.7%p(전국 21.4%p), 2019년 23.7%p(전국 20.8%p)로 전국의 남녀 고용률 차이보다는 넓게 벌어져 있지만, 전국의 고용률 차이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폭을 보이고 있으므로, 경남지역의 여성고용률 상황은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현재, 경남 여성 취업자 가운데, 50대 여성이 가장 비중이 크므로, 전 연령대 대상의 맞춤형 경제활동 지원 정책이 요구됨
- 특히, 여성 청년들의 고용률 제고 및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할 특화된 정책개발이 필요함

● 가족 형태의 다양성 보장

-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하여, 모든 가구형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족 형태의 다양화가 지속됨
- 청년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 노년 1인가구 등 전생애주기 1인가구 지원 정책 요구됨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및 가정생활 측면에서의 육아, 가사 등 돌봄정책에 대한 요구 증가
- 친족 관계가 아닌 남남끼리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비친족가구의 확대도 점차 증가하게 될 것임
-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혼인·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답하는 사람이 66.3%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높은 상태임. 그러나 비혼동거 가족, 미혼모·부 가족 자녀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는 다소 낮았으며,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도는 대부분 높게 나타났음⁹⁸⁾
-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맞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

98) 여성가족부,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2019-05-28).

(2) 이주민 정책

● 경남의 이주민 증가세는 주춤

- 현재, 경남의 국제결혼 건수도 예년보다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최근 침체된 경제정세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유입도 위축된 상태임
-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경제활동 등과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과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 지자체-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이 필요함
- 다문화가정에 특화된 지원체계에서 점차 보편적인 범주민 대상의 지원체계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완비가 요구됨
-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경남의 다양한 이주민들이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남의 이주민에 대한 통합적 지원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정부 정책 변화

(1)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 성평등 수준 향상

- 중앙부처와 지자체별 '성평등 목표' 수립, 노력도 평가
-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활성화 등 생활 속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 여성 대표성 및 안전 제고

- 기업 협약을 통한 여성 고위직 목표제 도입
- 젠더 폭력 및 사이버 폭력 예방

(2)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법 제도 개선

- '혼인 외 출생' 표기 등 가족 관련 차별적 법·제도 및 인식 개선

(3) 청소년 보호 ·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 청소년 안전

- 자살, 폭력 등 청소년 유해요소 대응을 위한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마련

● 청소년 성장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기능 강화
- 의무교육과정 학업중단 학생의 보호 및 성장 도모

3) 지역정책 변화

(1) 지역 성평등 추진 기반 조성

● 여성가족청년국 설치로 여성 · 가족 · 청년정책 위상 강화

- 경남은 2020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 · 가족 관련 직제를 여성가족청년국으로 승격하여 개편하였고, 2021년도에는 여성가족아동국으로 재편됨
- 여성, 아동, 청소년, 보육, 다문화 등 여성 · 가족 · 청년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등하고 공정한 정책 마련 도모
- 실질적 성평등 실현 및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 설립
 - 범도민 성평등 교육으로 양성평등 문화조성
 -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2) 여성 대표성 및 경제활동 제고

● 여성 대표성 제고

-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추진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여성가족 연구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경남도민들의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
- 의사결정 부문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2020년까지 40% 이상까지(2019년 현재, 37%) 상승
 - 그리고 경남도정의 의사결정 책임자인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2022년까지 20%(2019년 현재, 15.9%) 달성을 목표로 추진
 - 공공기관의 여성 대표성 향상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남녀가 균형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조성

● 여성 경제활동 제고

- ‘경력단절여성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경남지역에 새일센터를 9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
- 예비창업 여성을 대상으로 적성검사부터 상담, 교육, 컨설팅, 실무체험, 행정지원까지 One-stop으로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조성
- 여성 일자리에 대한 생애주기별 진입 지원의 다양성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취업교육 활성화

(3)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

● 출산·양육이 보호되는 환경 조성

- 결혼·임신·출산·산후조리·육아 등과 관련된 서비스 통합·연계 시스템 조성
-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저소득 맞벌이·한부모 자녀 양육가정의 일·생활균형을 지원

● 아동복지 실현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확대
-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 학교폭력 대책 마련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등 지원

●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다양한 욕구 증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체계적·단계적 교육 서비스 제공과 생활 및 경제적 안정 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요구

- 노동·인권 고충상담 등 안정적 정착과 통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 여성가족 부문 핵심지표

〈표 4-5-45〉

여성가족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성평등 레벨	레벨 2~4	레벨 2 이상 유지	레벨 2 이상 유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2.5%	60%	70%
광역 및 기초의원 여성 비율	19.8%	30%	40%

(1) 도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안전 및 삶의 질 추구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 구축

-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 고령자 등을 배려하여 주민이 행복한 지역이 되도록 지역 공간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여성친화도시의 4대 가치인 배려, 형평성, 친환경, 소통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책추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도민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임
- 여성친화도시는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8개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남도의 지원이 필요
 - 시군 중심의 여성친화도시 담당 공무원 및 시민참여단 네트워킹 활성화
 - 각 시군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

● 범죄와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등 다양한 폭력 예방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 각종 범죄, 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 자립 지원 강화
 -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고, 안전한 상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례관리를 제공

(2) 성평등을 기반으로 도민의 기회와 선택의 보장

●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

- 경남의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경남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
 -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의 경제 세력화, 여성의 사회참여 등
 -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얻는 성평등정책 추진으로 정책 효과 극대화

● 경제활동의 기회 보장 및 생활과의 균형 향상

- 경남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삶의 지원체계 마련

(3) 돌봄과 포용의 경상남도

● 결혼, 출산,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결혼, 출산,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
- 믿을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시스템 확충으로 보육 서비스 질적 향상

● 1인가구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정책 지원을 통한 사회적 인정 강화

-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여, 도민 누구나가 장애, 이주 배경, 빈곤 등과 상관없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지 않고 자립하여 잘 살 수 있는 지역 분위기 조성
- 결혼제도를 통한 가족 구성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파트너십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
 - － 독일 생활동반자법,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일본 「파트너십 인정 조례」 등

4. 추진시책

1)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

● 광역형 여성친화도시(Gender Equality Region)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경남도 자체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제공
 - － 경남도 18개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 지역 상황에 맞춘 컨설팅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경상남도 여성친화도시 자문위원'을 구성 및 운영
 - －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경남도에서 정기적으로 '경상남도 여성친화도시 포럼' 개최

● 도민 참여 방식의 사회안전망 구축

- 도 및 시군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통한 민관경 합동 'With you 지킴이단' 운영
 - － 성평등 교육 및 젠더폭력방지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
 -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범죄 취약공간 및 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 실시
 - －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 등 다양한 안전 취약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 젠더폭력 대응 체제 마련

- 공공시설 범죄 카메라 수시 점검 및 지역 제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확대
- 언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도록 젠더폭력 사이버 상담창구 운영
- 디지털 성범죄 방지 기반 구축을 위한 젠더폭력상담체계 강화
-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젠더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 폭력 피해자의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역서비스자원 연계 지원

- **대면 · 비대면 혼합형 사회적 약자 지원 방식 모색**

- 코로나19의 위협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움을 인식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존의 대면 방식의 복지전달체계에 ICT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방식의 안전망 구축 필요

-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 방식의 다양화 전략 필요

- 지역자원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연계 가능성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
- 전문가의 직접 투입이 어려운 시급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도민 대상 사회적 재난대응 교육 및 자원 지원

2) 평등과 공정을 토대로 한 사회체계 확립

- **성평등 기반 조성**

- 경남여성가족재단을 통한 여성가족정책 연구 강화 및 교육, 사업, 네트워크의 체계적인 구축

- 여성 · 가족과 관련되는 경남지역의 연구과제 수행
- 성평등 및 일 · 생활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진행

- 경남여성가족재단 및 지역성평등센터를 중심으로 범도민 성인지 교육 추진체계 강화

- 경남도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도민대상의 성평등 교육 제공

- 성 주류화 정책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및 도민 참여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개선

- 경남도민 전체에게 골고루 성평등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 구성
- 지역별, 생애주기별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 제공 기회 확대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 리더 교육 내실화

- 경남도 정책의 성평등 주류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과 더불어, 18개 시군의 정부 공모사업(각종 국책사업 포함)에 대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컨설팅 제공 확대
-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성인지예산제도 강화

● 일·생활균형 지원

- 경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립으로 경남도민의 워라벨 지원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컨설팅 제공
 - 기업과 지역사회에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 도민 대상 가족친화 교육을 통한 가족친화 캠페인 추진
- 직장 내 젠더 차별을 금지하도록 젠더영향평가 관점에서 점검 추진
 -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젠더영향평가제도 도입
 - 성별 임금 격차, 남녀 승진 기회 평등, 남녀 임금상승률 차이, 여성의 출산·육아휴직 이후 복직률, 기업 내 고임금 노동자 중 여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인센티브 부여
 - 프랑스 ‘젠더인덱스법’ 참고

3) 다양성이 인정되는 지역사회 기반 구축

● 안전하고 든든한 양육환경 조성

- 누구든지 주저 없이 결혼·임신·출산·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센터 설립
 - 결혼·임신·출산을 희망하거나 계획하는 도민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결혼·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
 - 개인이나 가족의 니즈나 환경변화를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사례 관리 제공
 - 핀란드 ‘네우볼라’제도 참고

●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 법률혼 관계에만 지원되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사실혼 관계까지 확대
 - 현재, 경남도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사실혼 관계의 커플까지 확대하고 있음
 -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다양한 부부의 형태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삶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음
-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 존중을 위한 지역 전체의 공동체성 강화
 - 1인가구지원센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가족 중심의 행정체계의 다각화 모색
 - 개인 중심의 니즈 파악으로 행정서비스의 선진화 도모

제9절 교육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학교 및 학생 수

(1) 각급 학교 현황

● 지역활력 감소 우려

- 경남의 고등학교 수는 늘어났으나, 학생 수는 줄었음

- 2010년 이후 경남 고등학교 수는 188개에서 192개로 증가하였다가, 190개로 2013년 수준으로 줄어들음
- 학생 수는 13만명에서 93천명 수준으로 줄었음

● 고등교육 참여자 수 감소

- 경남의 전문대학 10개소로 공립 2개소, 사립 8개소임

- 학생 수는 2012년 39,243명에서 2019년 30,527명으로 -22.2%로 줄어듦

- 경남의 대학은 10개소로 국립이 3개소(교육대학 제외), 사립이 7개임

- 학생 수는 2012년 84,243명에서 2019년 79,942명으로 -5.1%로 줄었음

경남 고등학교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전체	여자
2011년	188	130,026	59,621
2012년	189	129,209	59,536
2013년	190	127,457	59,399
2014년	190	123,853	58,395
2015년	191	120,084	57,051
2016년	191	117,575	55,588
2017년	192	111,618	52,570
2018년	192	102,461	48,129
2019년	190	93,849	44,171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각연도).

경남 전문대학 및 대학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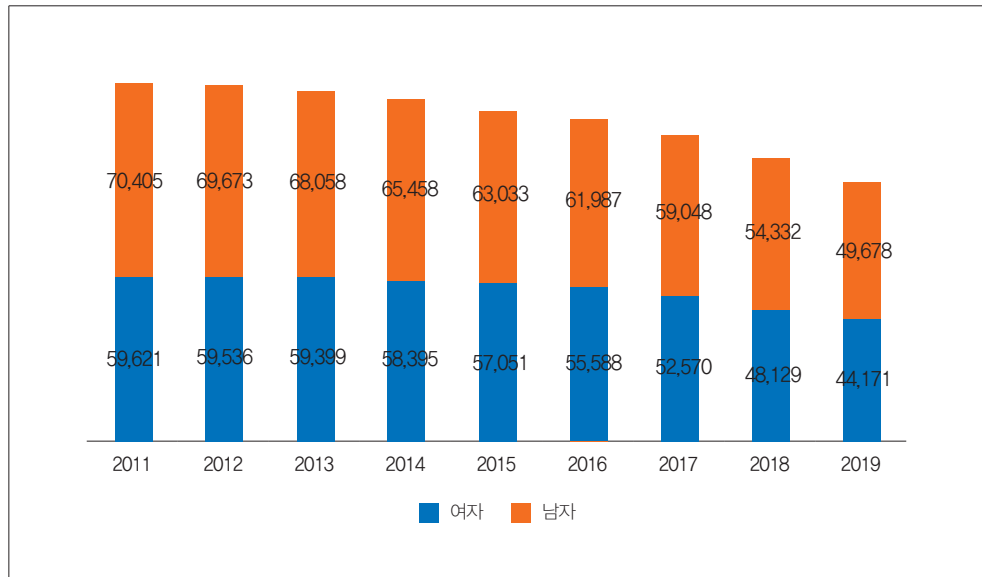
구분	전문대학		대학	
	전체	여자	전체	여자
2012년	39,243	13,772	84,243	29,259
2015년	36,125	12,119	87,657	32,061
2016년	34,000	11,445	86,495	32,047
2017년	32,751	11,009	84,580	31,312
2018년	31,575	10,798	82,469	30,790
2019년	30,527	10,894	79,942	29,636

〈표 4-5-46〉

경남의 각급 학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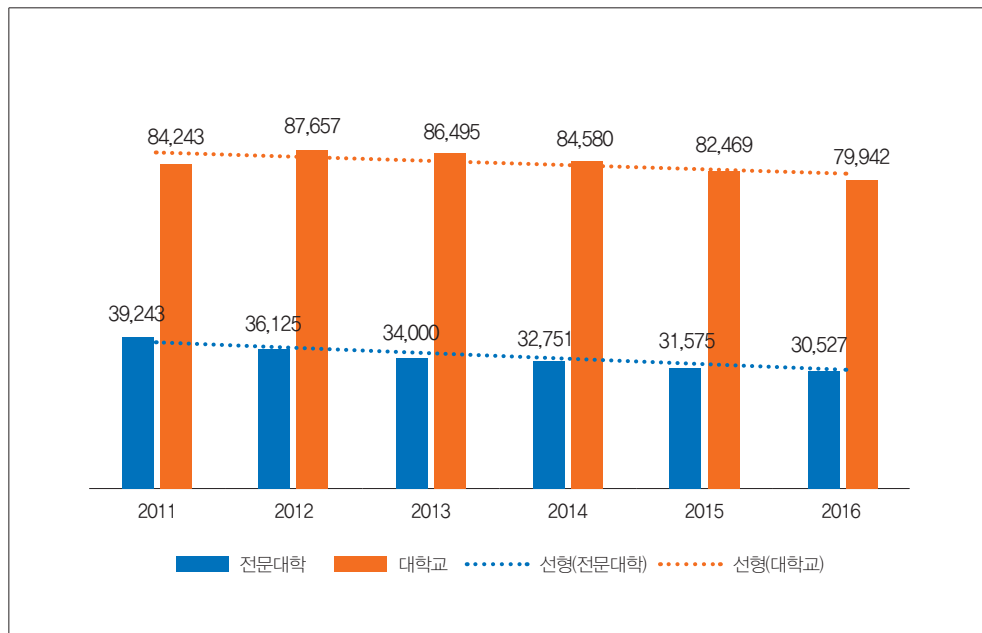
〈그림 4-5-18〉

경남 고등학생 수



(단위 : 명)

〈그림 4-5-19〉

경남 전문대학 및
대학교 학생 수

(단위 : 명)

- 경남의 대학원 46개소로 학생수 2012년 10,894명에서 2019년 8,970명으로 -17.7%로 줄었음

〈표 4-5-47〉

경남 대학원 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박사			석사			합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7년	1,385	962	423	8,447	4,728	3,719	9,832	5,690	4,142
2012년	1,482	900	582	9,412	4,853	4,559	10,894	5,753	5,141
2015년	1,500	892	608	8,445	4,423	4,022	9,945	5,315	4,630
2016년	1,594	941	653	8,289	4,337	3,952	9,883	5,278	4,605
2017년	1,582	952	630	8,083	4,083	4,000	9,665	5,035	4,630
2018년	1,562	938	624	7,960	3,889	4,071	9,522	4,827	4,695
2019년	1,549	874	675	7,421	3,488	3,933	8,970	4,362	4,608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각연도).

2) 학교별 현황

(1) 입학

● 대학교의 입학정원 변동 없으나,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감소세

- 경남 소재 대학의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이 지난 3년간 낮아지는 추세임
- 11개 대학 중 3개 대학은 100% 충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48〉

경남지역 대학교
입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입학정원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경쟁률	입학정원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경쟁률	입학정원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경쟁률
가야대학교(김해)	635	95.1	7	633	95.5	6.8	633	87.9	5.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206	99.6	5.6	1,206	99.5	5.3	1,206	99.6	5
경남대학교	2,930	98.2	5.5	2,900	99.5	4.8	2,875	99.4	4.6
경상국립대학교	3,009	99.9	7.5	3,009	100	8.1	3,032	99.8	6.4
부산장신대학교	70	85.7	2	67	95.6	1.5	67	58	1.2
영산대학교	740	91.9	6.3	690	99.9	7.9	680	99.3	7.3
인제대학교	2,088	100.3	5.8	2,088	99.8	6.5	2,088	100	4.6
진주교육대학교	319	100	7.7	319	100	7.2	319	100	6.4
창신대학교	500	97	6.2	500	100	7.2	500	100	6.4
창원대학교	1,754	99.5	6.9	1,754	99.4	7.1	1,754	99.5	7
한국국제대학교	777	99.2	5.4	738	81	5.8	664	42.6	2.9

자료 : 대학알리미(각연도).

●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약간 감소하고, 신입생 충원율 증가세

- 경남 소재 전문대학의 지난 3년간 입학정원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경쟁률과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남
- 각 대학이 정원을 감축하면서 운영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4-5-49〉

경남지역 전문대학
입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입학정원	정원 내 신입생 총원율	경쟁률	입학정원	정원 내 신입생 총원율	경쟁률	입학정원	정원 내 신입생 총원율	경쟁률
거제대학교	455	61.1	2.3	445	73.9	4.2	441	75.3	3.3
경남도립거창대학	445	90.6	3.9	430	100	4	417	100	4.8
경남도립남해대학	400	92	3.2	400	100	3.2	400	100	4.2
김해대학교	527	87.5	6.5	527	87.9	5.5	508	96.3	6.7
동원과학기술대학교	866	96.4	6.6	828	99	6.7	806	98.3	7.9
마산대학교	2,108	97.2	8.3	2,108	89.8	8.2	2,080	94.7	11.9
연암공과대학교	510	100	5.8	510	100	6.5	510	100	6.1
진주보건대학교	833	100	5.8	783	97.8	5.4	783	100	5.3
창원문성대학교	1,580	84.6	3.6	1,430	83.4	6	1,399	87.8	5.4
한국승강기대학교	297	100	3.5	297	100	3.8	297	100	3.5

자료 : 대학알리미(각연도).

(2) 취업

● 대학교 및 전문대학 취업률에 차이를 보임

- 약 10%p가량 차이를 보이거나, 학생 수의 차이와 대학교의 진학률이 감안되어야 함. 다만, 대학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표 4-5-50〉

경남지역 대학교 및
전문대학 취업 현황
(2019)

(단위 : 명, %)

구분	대학교			구분	전문대학	
	졸업자	진학률	취업률		졸업자	취업률
가야대학교(김해)	555	0	76.1	거제대학교	447	79.5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146	2.6	64.5	경남도립거창대학	338	70
경남대학교	2,714	2.5	59.1	경남도립남해대학	336	75.2
경상대학교	3,273	8	52.6	김해대학교	400	69.1
부산장신대학교	59	5.1	47.4	동원과학기술대학교	829	69
영산대학교	587	0.9	68.3	마산대학교	1,968	73.3
인제대학교	2,011	5.4	61.4	연암공과대학교	524	79.5
창신대학교	315	0.6	74.8	진주보건대학교	919	75.5
창원대학교	2,080	4.4	58	창원문성대학교	1,386	66.8
한국국제대학교	817	0.7	67.4	한국승강기대학교	295	81.7

자료 : 대학알리미, 2019.

3) 평생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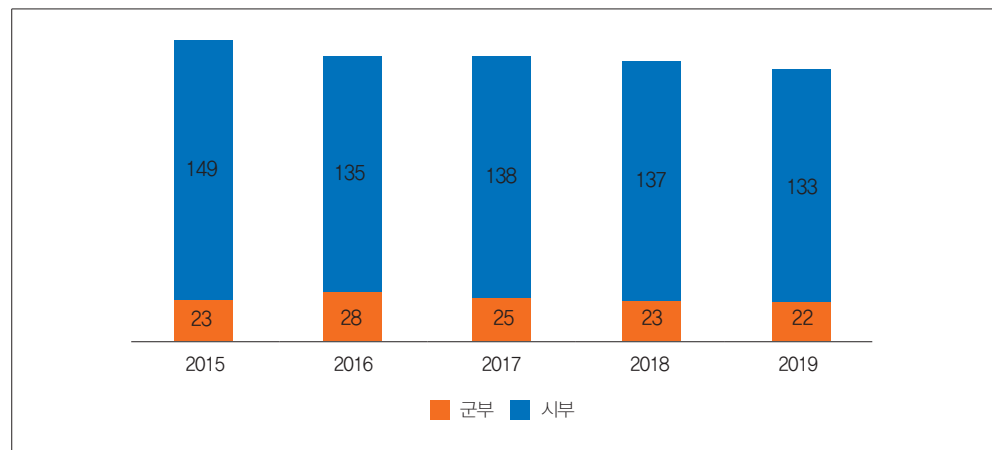
(1) 기관 현황

● 평생교육기관 감소세

- 경남의 평생교육기관은 2019년 현재 총 155개로 시 지역이 133개 분포됨
- 시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은 2015년 149개에서 133개로 -10.7% 감소함

〈그림 4-5-20〉

경남 평생학습기관
추이
(2015~2019)



자료 :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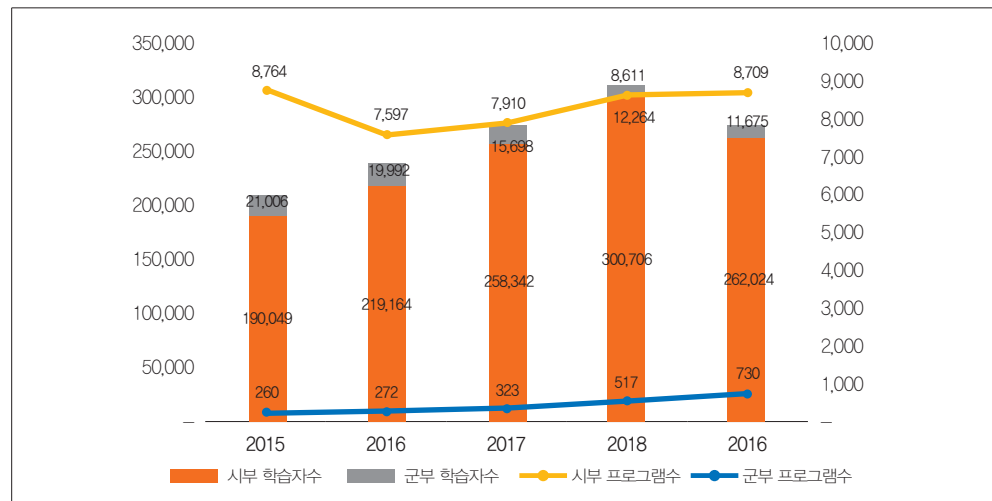
(2) 운영현황

● 경남 평생교육 학습자 및 프로그램 시부에 집중

- 평생교육 학습자는 시 지역이 군 지역에 22배 이상 분포
- 2019년도 학습자 중 시부 학습자의 감소가 매우 큼
- 시부와 군부 모두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습자 참여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21〉

경남 평생학습기관
추이
(2015~2019)



자료 :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연도).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대학 학생 수 감소 자구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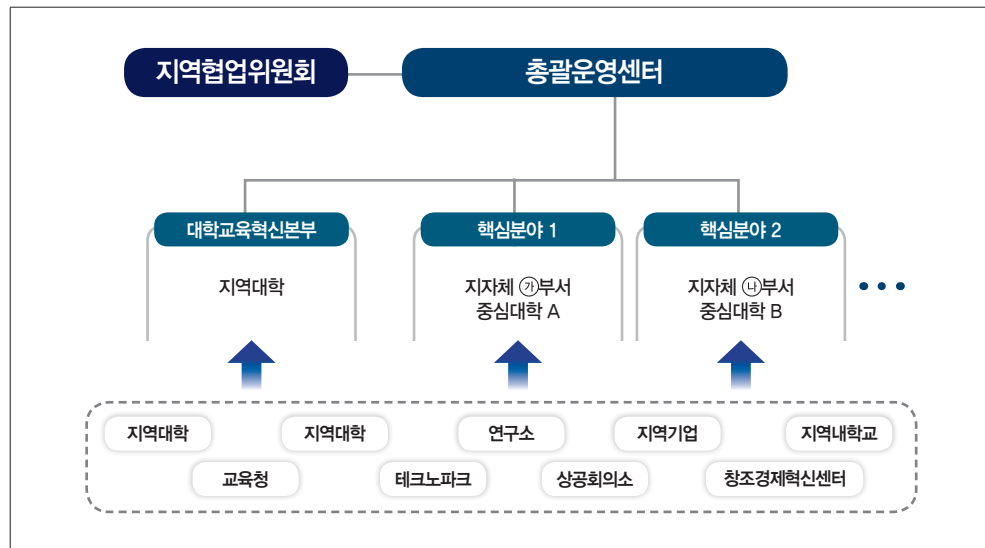
(1)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행정기관 역할 중요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견인

- 정부에서는 대학과 연계된 지역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협업의 장 마련을 지원할 것을 시도
 -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대학의 활로 개척사업으로 실시될 예정
 - 정부 부처의 사업들이 각 지자체로 하향식으로 전달되며,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중복, 칸막이라는 비판에 따라 기업, 연구소, 학교, 교육청,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업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추진

〈그림 4-5-22〉

지역혁신 플랫폼 운영 체계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2020.01.2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한다”.

(2) 통합교육플랫폼을 통한 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

●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협치

- 도-교육청의 상설 협의 실시
 - 경상남도와 교육청은 통합교육추진단을 출범(2010. 10. 1)하여 상시 업무협의 및 교육지원
 - 포럼, 교육회의 등 두 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발굴 및 실행

● 경상남도 통합교육체계

- 도와 대학이 지역의 상생을 위한 공동논의장 구성
 - 지역과 대학의 협력모델 구축, 지속적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성

2) 평생교육 변화와 확대

(1)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참여 확대

● 경상남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점검 및 질 제고

- 경상남도 평생교육기관과 학습자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증가됨
- 경상남도 평생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내용의 질적 모니터링 확대 필요

● 경상남도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구축

- 특성화 사업 발굴 및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로 장기 전략 수립
- 평생교육진흥과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재단법인 설립으로 독립성과 전문성 등 역할 강화
- 평생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

(2) 대학개방으로 입학자원 확보

● 대학의 평생교육체계 지원 확대

- 성인을 대상으로 학사학위 또는 양질의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유연화된 학사제도 도입 예정
- 정부는 단과대학, 학부, 학과,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대학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대학 및 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 학습자 맞춤형 전형으로 확대

〈표 4-5-51〉

교육부 평생교육체계
운영모델(2019)

단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학습자 대상 학과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단과대학 구성 ○ 단과대학 내에 성인 학습자 전담 별도의 행정기관 설치
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학습자 대상 전공(학과)으로 이루어진 학부 설정 – 학부 단위로 학습자를 모집하고, 전공탐색 후 전공 설정 – 별도의 단과대학을 구성하지 않고, 기존 단과대학에 학부 설정 ○ 성인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체계 마련
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단과대학 내에 성인 학습자 전담 학과를 설치 ○ 성인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체계 마련
컨소시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의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동 학위 수여 가능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2019.01.20.),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 교육 부문 핵심지표

〈표 4-5-52〉

교육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경남 소재 대학 졸업 비율 (경남대학졸업자 수/ 전국대학졸업자 수(4년제))	4.1%	4.5%	5.0%
대학졸업자 취업률	60.2%	70%	80%

(1) 도-대학의 지역 상생방안 공동추진

① 도와 대학 간 협의체계 구축

● 도-대학 상생발전협의회

- 도와 대학이 상생할 방안 마련과 지역과 관련된 주요 의제를 논의·조정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 마련
- 주요 사업을 함께 작성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축하여 파트너십을 강화

② 지역혁신 플랫폼 추진·활용

● 교육혁신 및 대학 R&BD 강화

- 정부 정책에 따른 대학과 지역 간 상생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실행
- 지역 내 대학 참여를 보장하고, 경남도는 대학 간 갈등과 이해 상충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함
- 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발굴로 지역 내 취·창업 생태계를 구축함

(2) 도청-교육청 협업으로 초·중·등 교육의 혁신 추진

① 교육 협치 행정

● 도 행정과 교육행정의 협업 추진

- 그간 자치단체의 행정과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교육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음
- 지역의 주민인 초·중·등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인 학부모의 만족을 위해 상생 협의가 필요함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도와 교육청 간 교육행정 협치와 상시협력을 위해 기구 구성 및 운영
- 통합교육추진단 운영 및 법적기구인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함

② 학교공간혁신을 통한 미래교육 대응

● 기술기반 미래학교 적용

- 교실 수업에 기술기반 학습모형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교육효과 극대화 및 흥미 제고
- 학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데이터 기반 종합적 체계 구축
- 학교 내 시설 및 공간 개선으로 학생들의 만족도 제고 및 학습효과 제고

● 학교공간혁신

- 교육과정 변화 등 미래교육 대비 필요
- 미래에 요구되는 자율적 학습 공간 구축으로 학습공간의 개방과 활용 극대화

4. 추진시책

1) 도-대학의 지역 상생 협의체 구축

(1) 도와 대학 간 협의체계 구축

● 대학교육 플랫폼 운영

- 지역대학과 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한 지역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부의 지방정부-대학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의 효과적 협업체계에 활용
 - 그러나 현행의 개별대학 기반 사업별 지원 체계만으로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끌어내는 데 한계
 -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역 현안 해결, 취·창업 생태계 구축 등 R&D 지원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등 추진

● 2020년 선정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운영의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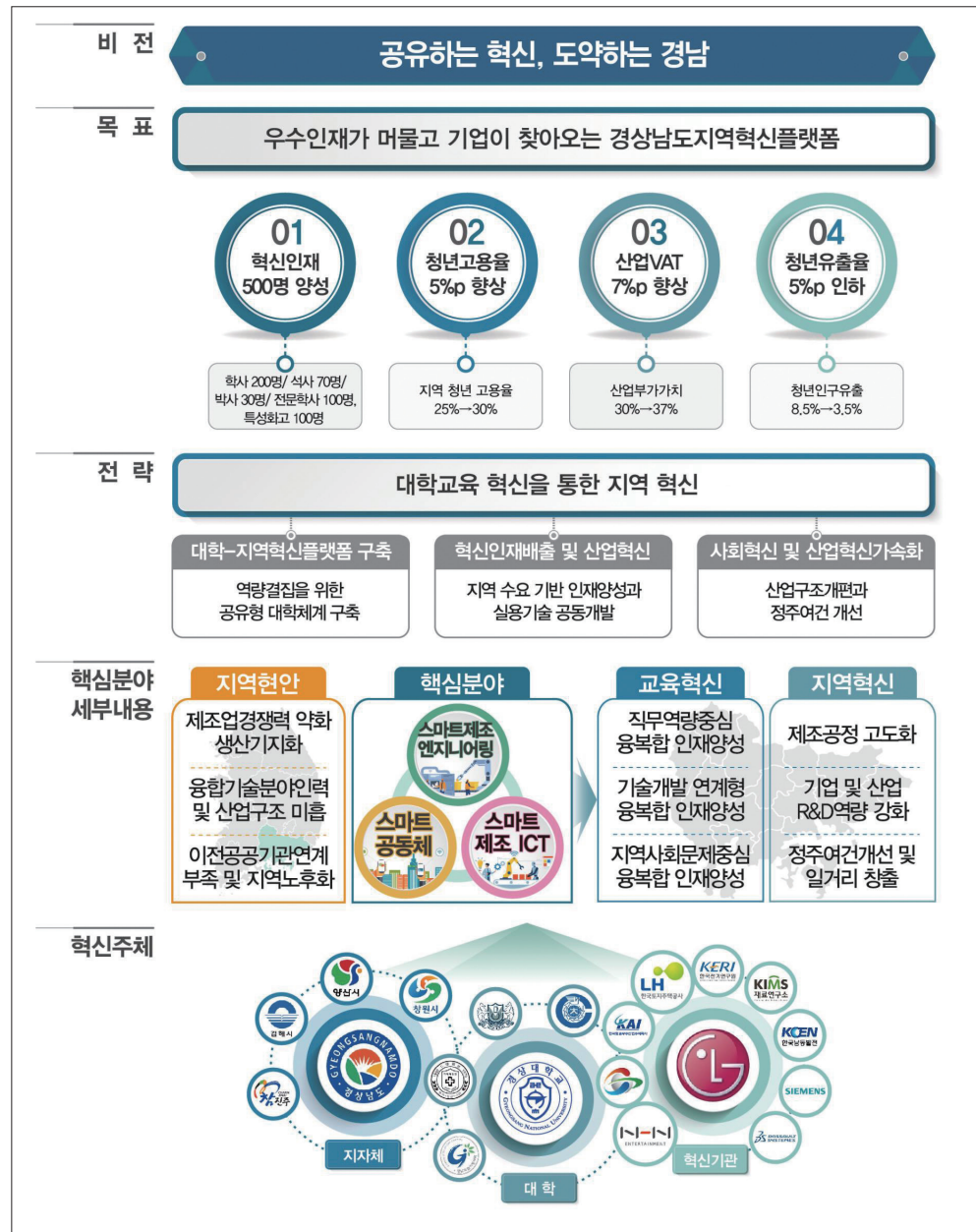
- 「공유하는 혁신, 도약하는 경남을 비전」으로 '인재가 머물고 기업이 찾아오는 경상남도지역혁신플랫폼'을 목표로 함
 -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및 제조혁신, 융합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및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혁신 주체로 지자체-대학-기업이 참여하여 상생 플랫폼 구축
 - 핵심 분야로 스마트제조 엔지니어링, 스마트제조 ICT, 스마트 공동체를 제시

● 도-대학 상생발전 협의회 운영

- 도지사-대학총장 간 상생간담회를 통해 대학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의견교환 및 행정적 지원 탐색
 - 도-대학이 주도적·자율적으로 주요 사업계획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지속·공식적인 소통의 장인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 지역의 대학과 협업을 통해 상생협력 선도모델 발굴
 - 상생발전 협의회를 지역협의체로 활용하여 지역 사회 발전 방향 협의

〈그림 4-5-23〉

경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계획서
(2020.7.). p.3



2) 도청-교육청 협업 공고

(1) 교육 협치 행정 활성화

● 도 행정-교육 행정간 협업

- 교육행정과의 협업을 위한 통합교육추진단의 확장 운영
 - 두 기관 협력사업의 최종의사결정기구로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현안사업별 협의체 구성으로 실질적, 상시적 협업구조 구현
 - 도와 교육청 간 교육행정 협치 및 상시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상설기구로 통합교육추진단 역할 확장
- 도와 교육청의 협업으로 행복한 미래교육복지 구현

● 지자체화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 우리 모두의 아이를 위한 무상교육 확대

- 초·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및 교육복지 실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교육 확대 및 무상급식 실현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 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작은 학교, 원도심 지역, 과대·과밀학교의 운영 해소 및 인근 중·소규모 학교 등의 학교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교육격차를 줄이는 교육복지

-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교육바우처, 장학금, 글로벌 캠프 등 초·중·고생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협업 지속)

• 방과후학교·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지원

- 지역 특색을 반영한 방과후학교 정책 추진 지원, 맞벌이·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온종일 돌봄서비스 운영의 지자체 협업

(2) 기술기반 학교공간혁신

● 미래학교 구축

• 미래를 선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래형 학교 구축

- 4차 산업시대에 학교교육은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수업과 평가방식을 유지
-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초연결 지능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실 환경 구축
- 개인 맞춤 지능형 교육 솔루션 및 실감형 콘텐츠 정보화 기기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업혁신 선도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서버구축
- 미래사회 미래교육 공간 콘서트 운영

● 학교공간혁신

•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교육, 미래교육 등 미래사회 대응

- 학교 단위 공간혁신사업을 단순한 시설개선사업이 아니라 미래사회 학습역량에 기반한 다양한 학습 형태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환경 조성,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과정 변화 반영
- 교실과 도서관, 실험실이 지식 전달 위주보다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학교 내에 학습공간은 물론 동아리나 스터디모임을 할 수 있는 공용학습공간, 협력공간 등을 설계·운영

•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변화 도모

- 학생 자기 주도적 맞춤형 학습 및 교사의 업무부담 해소 도모
 - 데이터 기반 종합적 정보에 의한 효율적 시설관리
- 지능형,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학교 환경의 효율적 관리
 - 도교육청 학교공간혁신추진단의 학교공간혁신 사업 지원
- 학교공간혁신 촉진자 인력풀 운영
- 교육, 건축 등 전문 분야 간 융합적 협업 추진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된 사용자(학생, 교원) 참여 설계 추진
 - 학교공간혁신 사업 평가
- 전문가와 비전문가(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수준의 평가도구 마련 및 적용
- 가변적인 기능이 다양한 생태적인 학교공간

(3)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공동노력

- 시군 단위 교육종합센터 기구 구축
- 시군 단위 교육종합 센터 시설 건설
- 시설, 보건, 급식, 교통, 체험학습, 학습준비물, 방과후, 돌봄, 육아 등 교육과정 이외의 일체의 업무를 지자체와 협의

3) 생애주기 평생학습 체계 구축

(1) 평생교육 체계 조성

● 평생교육 체계 구축

-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도민들의 학습이력화 및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 시군별 평생학습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 도민의 요구에 따른 평생학습 네트워크, 생애주기별 강좌, 학습동아리, 강사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사회변화 및 고용 형태 변화에 대응한 질 높은 평생학습 체제 마련
- 경남도-시군-읍면동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 도민 모두에게 촘촘하고 세밀한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도-시군-읍면동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네트워크 조성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전문가 또는 실무자 중심의 협의회 구축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활성화

- 도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구축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 운영
- 국가와 지역 간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수행.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성 제고
- 평생교육 기회 다양화 기회 다양화 및 세대별 · 영역별 평생교육 진흥

(2) 평생교육기반 내실화

● 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강좌 활성화

-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평생학습
- 새로운 언택트 시대 도래, 학습의 다양성 등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평생학습을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 시민교양과정, 자격과정, 비학위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강좌 제공

● 평생학습 도민기자단 및 강좌나르미 활성화

- 평생학습 도민기자단 운영을 통해 마을평생학습 소식 제공
- 마을 단위의 평생학습 정보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도민기자단 운영
-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강좌나르미 운영
- 학습자가 희망하는 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강좌나르미 확대 운영

(3) 평생교육 고도화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

- 생애주기별 미래학습을 위한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
- 도민들의 역량개발 및 미래학습을 위해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바우처 운영

● 차별없는 평생학습사회 실현

- 문해교육센터 활성화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 읽기, 쓰기가 어려운 비문해자 해소 및 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지원제도 마련
- 온라인 교육 활성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디어 활용을 어려운 평생학습자를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및 평생학습 미디어 센터 설치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마련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유형별 평생교육기관 거점센터 마련

● 경남평생학습인증제 실현

- 경남 인증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생애주기별로 학습의 다양성이 존재함에 따라 경남지역의 특화된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경남평생학습인증제 실현
- ※ 기본과정 / 특화과정(전문과정, 심화과정) 운영
 - 경남평생학습인증제로 통해 학습-고용이 연계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 · 운영

제10절

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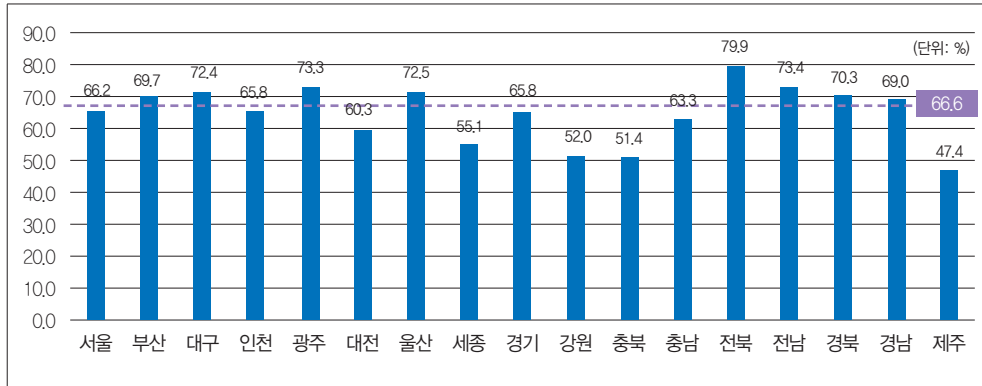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생활체육 참여 현황

- 2019년 경남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9.0%로 전국 평균 66.6%보다 높았으며, 전국의 8번째임

〈그림 4-5-24〉

지역별 생활체육 참여율



주 : 최근 1년간 일주일에 1회 이상(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생활체육조사.

- 2019년 경남도민의 생활체육 종목별 참여율은 걷기가 38.5%로 가장 높았으며, 보디빌딩(헬스) 17.5%, 등산 16.1%, 수영 8.9%, 체조(맨손체조, 생활체조) 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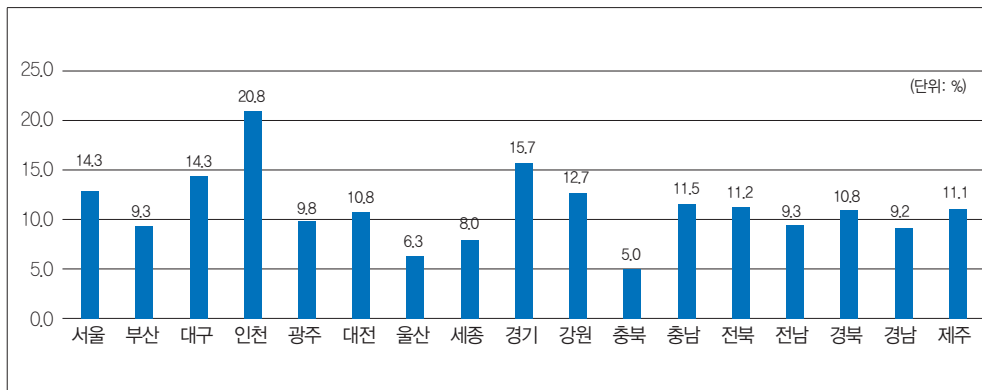
생활체육 종목별
참여율
(상위 5개)

(단위: %)					
구분	걷기 (조깅, 속보)	보디빌딩 (헬스)	등산	수영	체조 (맨손체조, 생활체조)
참여율	38.5	17.5	16.1	8.9	7.8

주 :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자 대상; 1+2+3순위 기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생활체육조사.

- 2019년 경남의 체육동호회 가입 비율은 9.2%로 전국 평균 13.0%보다 낮았으며, 전국의 13번째임

〈그림 4-5-25〉

지역별 체육동호회
가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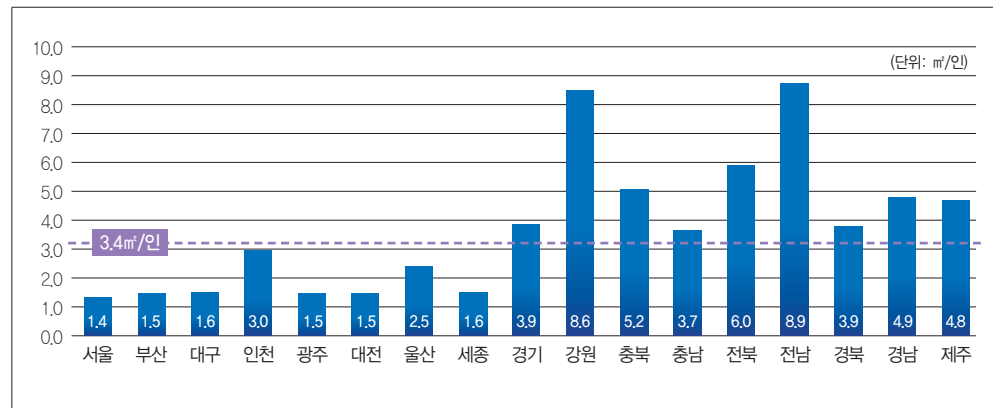
주 : '가입하여 현재 운동하고 있다', '가입은 했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다'를 합산한 비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생활체육조사.

2) 공공체육시설 현황

- 경남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4.9㎡/인으로 전국 평균 3.4㎡/인보다는 넓었으며, 전국의 5번째임

〈그림 4-5-26〉

지역별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현황



- 경남의 공공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1개소당 평균 7,269㎡로 전국 평균(6,596㎡)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54〉

연도별/지역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2013년 말 기준	2014년 말 기준	2015년 말 기준	2016년 말 기준	2017년 말 기준
전체	개소	19,398	21,317	22,662	24,303	26,927
	면적	138,294,000	151,117,761	156,083,763	163,932,737	177,614,312
서울	개소	2,760	2,791	2,796	2,859	2,893
	면적	12,380,102	12,780,484	12,846,689	13,055,604	13,443,315
부산	개소	1,049	1,127	1,200	1,250	1,363
	면적	4,498,244	4,716,466	4,838,348	5,086,278	5,202,459
대구	개소	531	558	719	782	791
	면적	2,828,197	3,332,160	3,585,926	3,914,351	3,944,553

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정리한 것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m²)

〈표 4-5-55〉

연도별/지역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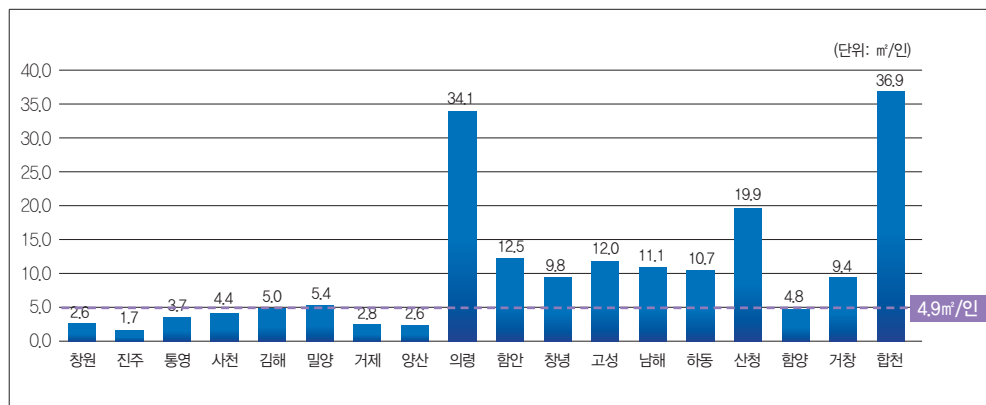
구분		2013년 말 기준	2014년 말 기준	2015년 말 기준	2016년 말 기준	2017년 말 기준
인천	개소	829	979	984	1,020	1,109
	면적	4,990,641	7,291,517	7,460,280	7,688,518	8,872,603
광주	개소	515	625	707	751	742
	면적	1,749,882	1,933,211	2,240,223	2,199,285	2,199,703
대전	개소	401	431	437	488	506
	면적	1,944,142	2,146,864	2,151,542	2,187,372	2,225,222
울산	개소	280	282	285	278	278
	면적	2,826,110	2,889,897	2,918,744	2,900,496	2,900,496
세종	개소	43	46	48	98	98
	면적	314,281	338,878	362,542	434,978	434,978
경기	개소	3,173	3,557	3,677	3,941	4,541
	면적	33,498,508	38,890,856	39,903,692	42,550,722	50,848,019
강원	개소	1,545	1,771	1,931	2,158	2,306
	면적	9,320,425	10,284,202	10,665,466	12,087,538	13,330,469
충북	개소	1,189	1,433	1,617	1,684	1,933
	면적	7,092,217	7,106,191	7,167,555	7,433,470	8,226,973
충남	개소	969	1,005	1,099	1,142	1,409
	면적	6,822,298	7,009,352	7,176,878	7,633,484	7,874,402
전북	개소	991	1,027	1,103	1,138	1,173
	면적	10,469,686	10,686,996	10,893,022	11,160,269	11,157,276
전남	개소	1,333	1,430	1,557	1,813	2,319
	면적	14,008,496	15,009,234	16,245,676	16,665,794	16,831,251
경북	개소	1,727	2,030	2,169	2,402	2,688
	면적	9,375,019	9,397,193	9,493,952	9,814,394	10,413,282
경남	개소	1,750	1,908	2,012	2,170	2,278
	면적	13,313,205	14,413,820	15,324,882	16,227,342	16,558,152
제주	개소	313	317	321	329	500
	면적	2,862,547	2,890,440	2,808,346	2,892,842	3,151,159

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정리한 것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 경남 18개 시군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합천군이 36.9㎡/인으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주시가 1.7㎡/인으로 적었음

– 합천의 경우는 축구장 전체 면적이 937,884㎡로 공공체육시설 면적의 54%를 차지함

〈그림 4-5-27〉

18개 시군별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표 4-5-56〉

경남 18개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2017년말 기준)

(단위 : 개소, m², m²/인)

구분	개소	면적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구분	개소	면적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창원	337	2,798,364	2.6	함안	59	850,254	12.5
진주	243	596,158	1.7	창녕	58	628,511	9.8
통영	81	499,713	3.7	고성	47	646,665	12.0
사천	181	508,206	4.4	남해	72	493,646	11.1
김해	121	2,637,760	5.0	하동	64	521,961	10.7
밀양	300	587,692	5.4	산청	66	722,120	19.9
거제	153	718,977	2.8	함양	72	191,525	4.8
양산	178	884,831	2.6	거창	52	587,319	9.4
의령	80	949,204	34.1	합천	114	1,735,246	36.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 경남 공공체육시설 중 간이운동장을 제외하면 축구장(162개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소당 평균 면적은 육상경기장이 75,899m²로 가장 넓었음

(단위 : 개소, m²)

구분	개소	면적	1개소당 평균 면적	구분	개소	면적	1개소당 평균 면적
육상경기장	31	2,352,873	75,899	수영장	24	417,329	17,389
축구장	162	4,676,222	28,866	롤러스케이팅장	18	173,174	9,621
하키장	1	32,725	32,725	사격장	4	105,026	26,257
야구장	30	620,687	20,690	국궁장	44	358,968	8,158
사이클경기장	1	50,500	50,500	골프연습장	5	36,339	7,268
테니스장	98	605,630	6,180	조정카누장	1	666	666
씨름장	8	14,421	1,803	요트장	7	103,101	14,729
간이운동장 (마을체육시설)	1,588	2,831,320	1,783	빙상장	3	19,832	6,611
체육관	90	3,445,129	38,279	기타시설	13	56,439	4,341
전천후 게이트볼장	150	657,772	4,385	합계	2,278	16,558,152	7,269

주1 : 체육관은 구기체육관, 투기체육관, 생활체육관 현황임.

주2 : 간이운동장은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체력단련기구 등 간이운동시설이 설치된 거주지 인근의 마을체육시설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3) 스포츠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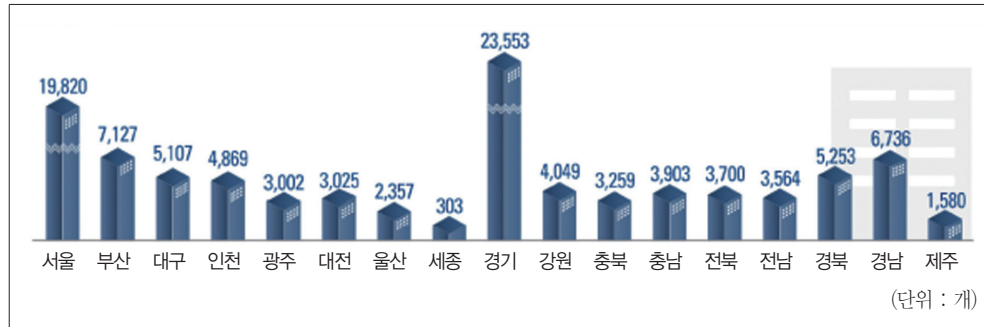
● 사업체 현황

- 경남의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체는 6,736개로 전국의 6.7% 수준이며, 경기(23.3%), 서울(19.6%), 부산(7.0%)에 이어 전국 4위로 나타남

– 스포츠 관련 사업체 42.9%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

〈그림 4-5-28〉

지역별 사업체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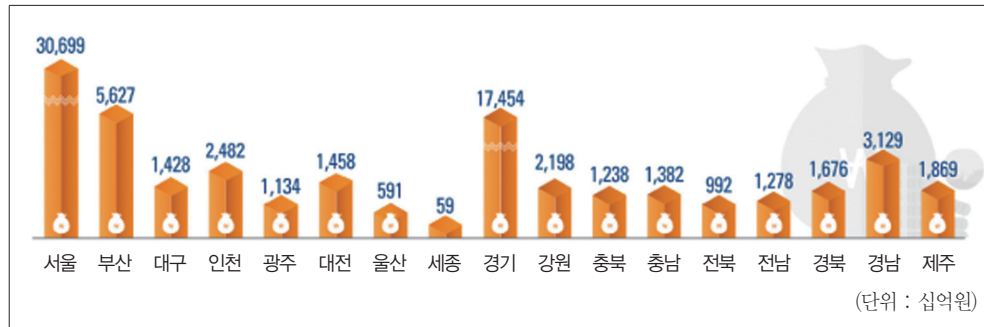
● 스포츠산업 매출액

- 경남의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3조 1,290억원으로 전국의 4.2% 수준이며, 서울(41.1%), 경기(23.4%), 부산(7.5%)에 이어 전국 4위로 나타남

–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64.5%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

〈그림 4-5-29〉

지역별 스포츠산업
매출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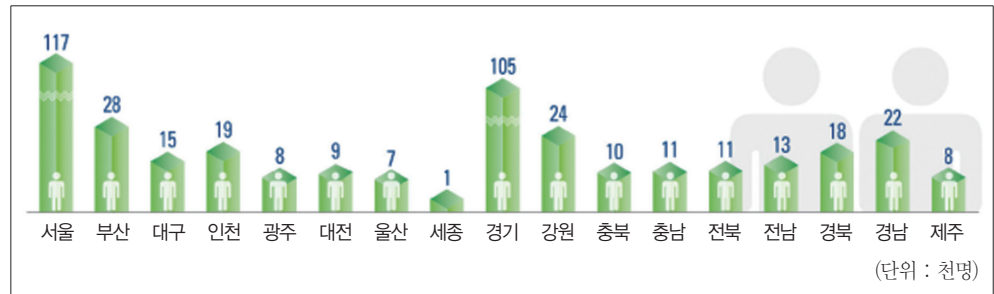
●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

- 경남의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는 22천명으로 전국의 5.2% 수준이며, 서울(27.5%), 경기(24.6%), 부산(6.6%), 강원(5.6%)에 이어 전국 5위로 나타남

– 스포츠산업 종사자의 52.1%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

〈그림 4-5-30〉

지역별 종사자 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 생활체육 인구의 증가

- 2019년 기준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은 66.6%로 전년 대비 4.4%p 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7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생활체육 참여율: 50대 70.8%, 30대·40대 70.3%, 20대 69.2%, 60대 69.0%, 70대 이상 57.8%, 10대 50.1%
- 2019년 생활체육 종목별 참여율은 걷기가 41.6%로 가장 높았으며, 등산 17.3%, 보디빌딩 16.2%, 수영 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걷기, 보디빌딩 등에 대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58〉

생활체육 종목별 참여율

(단위 : %)

구분	걷기 (조깅, 속보)	등산	보디빌딩 (헬스)	수영	요가, 태보, 필라테스
2018년	35.2	21.0	13.9	7.8	7.2
2019년	41.6	17.3	16.2	9.0	7.8

주 :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자 대상, 1+2+3순위 기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생활체육조사.

- 체육활동의 효과는 정신적 건강 유지가 86.7%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건강 유지 84.2%, 일상생활의 도움 67.5%, 의료비 절감 5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은 고령화 사회 진입, 건강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 건강에 대한 개념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삶의 질 향상이 체육활동의 주요 목적이 되는 등 앞으로도 이러한 인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표 4-5-59〉

생활체육의 효과

(단위 : %)

구분	정신적 건강 유지	신체적 건강 유지	일상생활의 도움	의료비 절감
생활체육의 효과	86.7	84.2	67.5	55.9

주 :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자 대상.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생활체육조사.

● 스포츠 복지의 중요성 증대

- 최근 스포츠 정책은 단순히 국민화합, 국위선양 등의 가치를 넘어 개인의 스포츠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강원연구원, 2018)
- 과거 스포츠 복지는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저소득계층의 유아·청소년,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추진돼 왔으나,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국민체력인증센터, 공공스포츠클럽 설치 등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경남도 또한 생활체육 교실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대축전, 여성 및 실버축구 생활체육 육성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등 각 계층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복지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2035년 경남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30.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⁹⁹⁾,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 복지 수요와 건강·육아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2017년 세계 스포츠산업 시장은 1.3조달러(약 1,430조원) 규모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5%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판매수입 규모 약 1.4조달러와 비슷한 규모임(문화체육관광부, 2020)
- 스포츠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7명(전산업 8.5명)으로 높은 고용유발 효과를 가진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국내 스포츠산업 고용 규모는 2017년 기준 42.3만명으로 2013~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4.5%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9)
-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투자 및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까지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을 95조원 규모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스포츠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음
- 각 지자체 또한 지역에 산재한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전지훈련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제공하고 있음

– 경남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숙박시설 및 음식점, 관광시설 할인 등 제공

- 경남의 경우, 2019년 동계시즌 기간 2,264개 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385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였음¹⁰⁰⁾
- 전지훈련단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파급 효과가 입증되면서 지자체별 국내외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99) 경상남도(2017), 경상남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년).

100) 경상남도 보도자료(2019-03-17일), 경남도, 전국 대회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짝.

- 또한,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스포츠관광산업의 육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선수단,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스포츠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4차 산업 융·복합 스포츠 시장의 부상

- 가상·증강현실,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과 스포츠 분야의 접목으로 신시장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문화체육관광부, 2020)
 - 스크린골프, 스크린야구, 승마 등 종목 확장에 따른 지속 성장
 - 아디다스 스마트팩토리는 개인 맞춤형 신발을 3D 프린팅을 통해 5시간 만에 완성
 - 스포츠 빅데이터 분석시장은 2016~2022년까지 연평균 40.1%의 증가세로 약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스크린골프, 스크린야구 등과 같은 여가성 콘텐츠의 측면에서만 아니라 의료, 미디어 등 연관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9)
- 스포츠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2014년 35억달러(약 3조 85백억원)에서 2021년 149억달러(약 16조 39백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활체육 및 건강에 관한 관심 증대로 관련 기술 및 콘텐츠에 대한 시장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9)
- 이에 따라, 각 산업과 기술을 융·복합한 스포츠 R&D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스포츠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메가 스포츠이벤트 유치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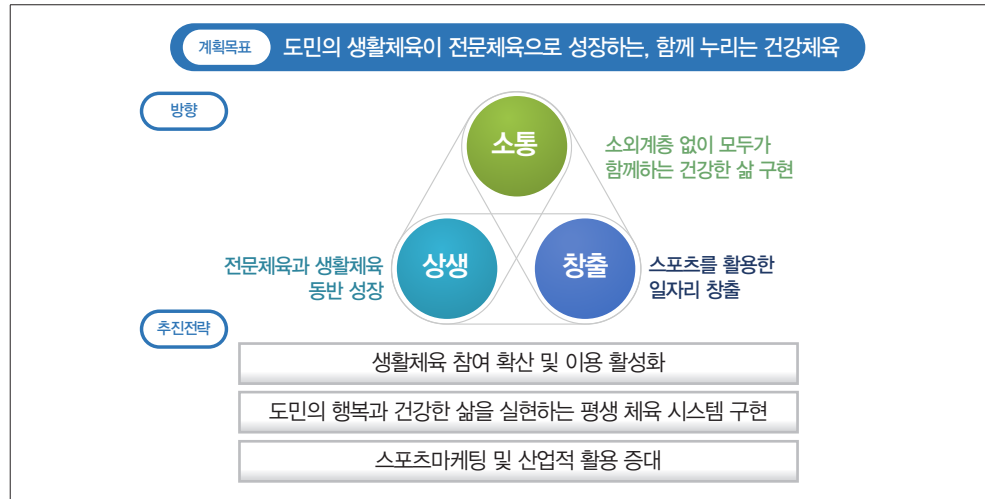
- 2017년 세계 스포츠이벤트 산업 규모는 900억달러(약 103조원)로 2005년 이후 연평균 6%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문화체육관광부, 2019)
- 스포츠이벤트 유치는 타 산업 대비 역사, 자연환경, 문화, 사회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관련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유입하여 직접적 지역 경제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경남연구원, 2018; 김민철, 2007)
- 또한, 메가 이벤트 유치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형성, 사회적 통합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소도시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4대 스포츠이벤트인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유치하면서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2024년에도 동계 청소년올림픽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2019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부산은 아시아드주경기장, 사직실내체육관, 아시아드CC 등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여 2019~2020년 축구국가대표 친선경기, 코리아오픈국제탁구대회, LPGA, 동아시아컵국제축구대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음

- 지자체별 스포츠이벤트 유치 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 전남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의 공공체육시설 규모를 보유¹⁰¹⁾하고 있는 경남 또한 다양한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 수립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그림 4-5-31〉

체육 부문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도민의 생활체육이 전문체육으로 성장하는, 함께 누리는 건강체육
 -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소통의 생활체육 체계 마련
 -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 시스템 구축
 -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스포츠 일자리 창출

2) 추진전략

● 체육 부문 핵심지표

〈표 4-5-60〉

체육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생활체육 참여율	69%	75%	80%
인구만명당 공공체육시설	7.7%	10.7%	13.7%

● 생활체육 참여 확산 및 이용 활성화

-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밀착형 체육 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민 생활체육 참여도 제고

101) 공공체육시설 면적 16,558,152㎡로 전국 3위.

- 생활체육지도자 육성·배치를 통해 공공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생활체육-전문체육 선순환 체계 구축

● 도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평생 체육 시스템 구현

- 3~100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 체육 프로그램 제공 및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남형 체육(스포츠)복지 체계 구축
- 스마트 체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스포츠마케팅 및 산업적 활용 증대

- 지역 기반 스포츠 기업 육성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융·복합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경남 스포츠 신시장 창출
- 전지훈련단 사계절 유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메가 스포츠이벤트 유치를 통한 경남 스포츠 위상 강화와 지역 파급효과 극대화 도모

4. 추진시책

1) 생활체육 참여 확산 및 이용 활성화

● 일상을 누리는 생활밀착형 체육 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 마을 단위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의 일상적 체육활동 참여 기반 마련 및 도민 스포츠 향유권 확대
-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조례’ 제정 등 도민 생활체육동호회(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도내 4개 지자체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함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 생활체육-전문체육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역 대학 연계 생활체육지도사 연수기관 선정을 통한 전문가 양성 기반 구축 및 도내 공공체육시설, 공공스포츠클럽, 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등 대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 공공스포츠클럽, 체육팀을 연계한 전문체육인 발굴·육성을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 ‘지역스포츠과학거점센터’ 유치를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0개소 운영 중
 - 지원내용 : 학생선수, 일반선수, 공공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회원 등 대상 개인별 운동처방 및 맞춤형 현장훈련 지원, 소속선수 및 지도자 대상 스포츠과학교실 프로그램 운영

2) 도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평생 체육 시스템 구현

● 3~100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 체육 프로그램 제공

- 유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청소년 대상 맞춤형 스포츠 활동 강화를 통한 평생 체육 습관 함양
- 청년, 중·장년 대상 직장인 체육활동 지원,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운동 처방 프로그램(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노인 거점시설 대상) 운영
- 도내 공공체육시설 할인, 스포츠 관람 할인 등 ‘(가칭)경남 체육주간’ 운영을 통해 도민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의 장 마련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제고

●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남형 체육(스포츠) 복지 체계 구축

- 저소득 계층,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농·어촌 지역 등 스포츠 소외계층 대상 ‘(가칭) 경남 찾아가는 체육 버스’ 운영 및 작은 체육관 조성 등 소외계층 체육(스포츠) 향유권 보장
-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및 장애인을 위한 체육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맞춤형 생활체육 참여 환경 조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가칭) 경남 도민 생활체육 축제’ 개최를 통한 교류의 장 마련

3) 스포츠 마케팅 및 산업적 활용 증대

● 지역 기반 스포츠 기업 육성 및 경남 스포츠 신시장 창출

- ‘경남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센터’를 연계한 창업, 사업화 및 제품화, 홍보·마케팅, 해외 진출 등 원스톱 시스템 구축 및 스포츠 사회적기업 육성
-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AR·VR을 활용한 가상 스포츠, 스포츠 빅데이터 등 경남 미래 유망 스포츠산업 전략 분야 선정 및 R&D-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대학을 연계한 스포츠 융·복합 전문대학원 개설 등을 통한 실무 인재 양성으로 경남 스포츠 신시장 창출 기반 조성

● 전지훈련단 사계절 유치 및 메가 스포츠이벤트 유치를 통한 지역 파급효과 극대화

- 경남 방문스포츠팀 유치 지원센터를 연계한 경남형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웰니스, 역사문화, 해양 레포츠 등 테마별 프로그램 개발
- 재활 운동 및 재활 방지, 멘탈케어 프로그램 등 선수 재활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경남 전지훈련재활센터’ 구축을 통한 전지훈련단 사계절 유치 시스템 구축
- 아메리카스컵, LPGA 등 분야별 유치 가능한 메가 스포츠이벤트 선정 및 유치 전략 수립